

발 간 번 호

11-1480000-001181-0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제2부



관계부처 합동





목 차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제2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주요 정책과제

I.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3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17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29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55
목표 5	성평등 보장	81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01

II.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127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149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73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95

III.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227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241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253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265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291

IV.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목표 16	평화·정의·포용	325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357

제 2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주요 정책과제

I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목 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1 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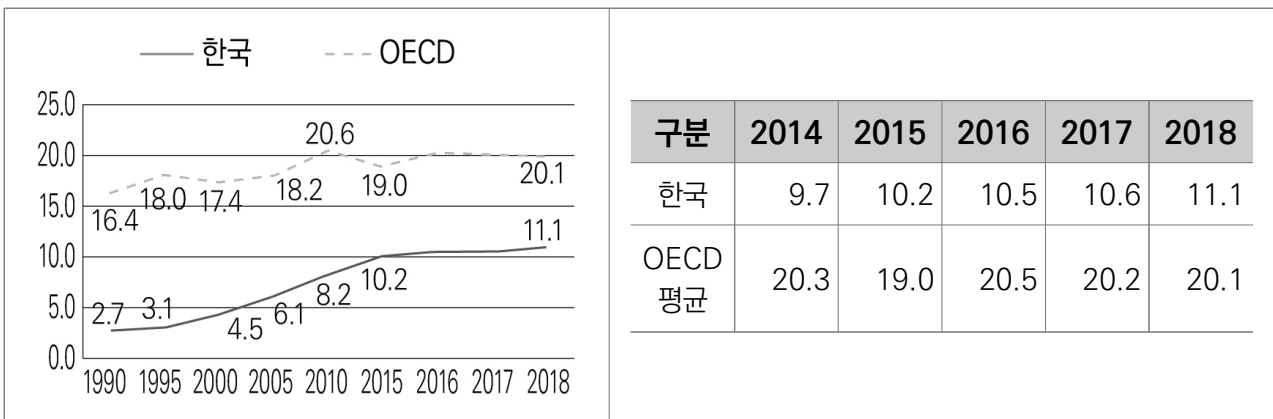
-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의 심화와 전통적 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가족내 부양능력의 저하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만명) : 3,763 ('16) → 3,387 ('30) → 2,943 ('40) → 2,062 ('65)

-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출비용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의 53.7%('15년)*로 여전히 낮은 수준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15년) : 한국 10.2%, 미국 18.8%, 독일 24.9%

〈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 비중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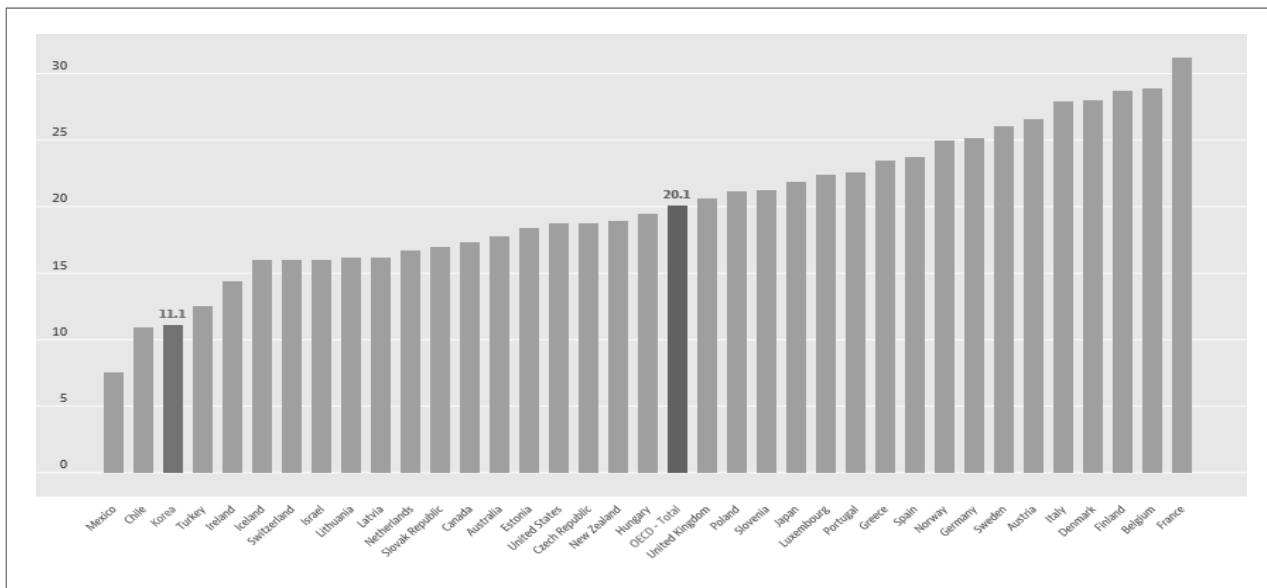
출처: OECD (2020), Social spending (indicator). doi: 10.1787/7497563b-en (Accessed on 06 September 2020))

- 한국의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8.2%, 2015년 10.2%에서 2018년 11.1%로 증가
-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19.0~20.3%로 한국의 약 2배 수준으로, 2018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의 GDP 대비 공적 복지 지출 비중은 멕시코, 칠레에 이어 3번째로 낮음

- 지금까지 성장 우선 패러다임(先성장 後복지)으로 사회투자에 소극적, 선진국에 비해 약 40~50년 복지지출이 지체됨*

* 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 10% 도달연도 : 한국 2015년, 미국 1970년, 일본 1980년, OECD 1966년

〈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 비중(%) 국제비교 〉



출처: OECD (2020), Social spending (indicator). doi: 10.1787/7497563b-en (Accessed on 06 September 2020)

- 현재 사회지출 규모는 경제규모·성장률·인구고령화 등 요인을 고려한 국제비교시 적정수준 대비 약 52~68%에 불과
-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40.6%)도 OECD 평균(56.4%)의 72.0%에 불과
 - * 주요국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 '15): 미국 71.8, 독일 67.2, 일본 71.4

○ 사회보장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존재

-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
 - * 중위소득 40%이하 약 93만명으로 추정('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사회보험) 국민연금의 장기체납, 납부예외*에 따른 미수급자 및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특수고용인, 자영업자** 등 실질적 사각지대 존재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18년) : 359만명(전체가입자 대비 17.0%, 지역가입자 대비 48.1%)
 - ** 고용보험 가입률('17년) : 정규직 85.9%, 비정규직 44.1%

○ 사회보험의 낮은 보장성

- 한국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16년, 62.6%; OECD 80%)
-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및 기간이 부족한 편이며*, 국민연금도 낮은 소득대체율('16년, 39.3%; OECD 40.6%)을 보이고 있음

* 실업 이후 5년간 총가처분소득 대비 실업급여 총액 비중('15): 한국 10.3%, OECD 28.8%

○ 민간 중심 공급·이용체계*(주거·요양·돌봄·보육 등)로 서비스 질의 향상이 요구되고,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에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가 병원·시설 중심(병원·시설생활 노인 49.8만명, '16.12월) 이고, 재가서비스도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한계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중 국공립 비중('17): 성인돌봄 3.6%, 보육 8.9%, 건강 13.7%

2 비전 체계

목 표

1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소득보장제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보장 강화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안전에 대한 노출 감소 및 회복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지원제도 강화 • 장애인재난·안전 지원시스템강화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1) 소득보장제도의 강화

보건복지부

①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지난 경제성장의 결과로 극심한 절대빈곤을 탈피하였으나,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부 계층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상받지 못하고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비수급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 중위소득 40%이하 약 93만명으로 추정('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정책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 인구구조 고령화, 1인 가구 비중 증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산출가구 기준(현행 4인 가구) 변경 방안 검토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 조정방안 중장기 검토
- * 급여별 기준선(기준 중위소득 대비) : 생계 30%, 의료 40%, 주거 44%, 교육 50%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고 지원 확대여부 검토

②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기대수명 증가로 인구구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율은 OECD 최고 수준일 정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초연금 증액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임

■ 정책과제

-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기준연금액 30만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단계적 확대('19년 소득하위 20% → '20년 40% → '21년 70%)
-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
 - 주택연금 대상 확대, 수급의 실거주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1	(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 2018: 16.7%	- 2030: 14.3% - 2040: 11.8%
	(2)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 2018: 0.97%	- 2030: 1.0% 이상 - 2040: 1.5% 이상

[K-SDGs 세부목표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2)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보건복지부

①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 추진 배경 및 목적

-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여 실직, 퇴직, 질병 발생 등의 위험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건강보장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비급여부문과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공적 건강보장의 범위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음. 이에 각종 사회보험 제도의 실질적 보장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정책과제

- (기본방향)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하되, 필수적인 분야·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치료에 필요하지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 부담을 높여(50~90%) 예비적으로 급여화(예비급여)
- (필수검사 비급여)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21)
- (상급병실 비급여) 국민 수요도, 의료기관 종별 기능,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과·한방) 2·3인실 보험 적용('19)
 - 1인실은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적용 추진('20)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일자리안정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정책의 일환

■ 정책과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를 통해 가입 활성화
 -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 단계적 확대* 및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허용('23년)
 - * (기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 ('20.7월)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추가 적용 → ('21.7월)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추가 적용

③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보장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민연금의 장기체납, 납부예외에 따른 미수급자 및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특수고용인, 자영업자 등 실질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 저소득 지역 가입자(납부예외자) 등 보험료 지원 신설, 출산 크레딧 확대, 급여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 강화
 - 사회적 논의를 통한 연금제도 개선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2	(1)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 2018: 36.2%	- 2030: 30.0% - 2040: 25.0%
	(2) 고용보험 가입률	- 2019: 90.3%	- 2030: 90.0% - 2040: 99.0%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 2018: 78.6%	- 2030: 82.5% - 2040: 84.2%

[K-SDGs 세부목표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보건복지부

①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 추진 배경 및 목적

- 생애주기별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도입하고 강화하여 보편적 서비스이용 확대

■ 정책과제

-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장기요양수급률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사회서비스 구축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인프라 확대
 -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아동 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3	(1)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 2018: 11.1%	- 2030: 15.0% - 2040: 20.0%
	(2)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 2015: 3.0%	- 2030: 5.1% - 2040: 6.5%

[K-SDGs 세부목표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안전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안전에 대한 노출 감소 및 회복력 강화

보건복지부

① 긴급복지지원제도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 환경 변화(기후변화, 감염병 위기 등) 등 급격히 변모하면서, 취약계층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취약함. 따라서 취약계층이 대내외적인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제시 등은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한 사업임
- 따라서 취약계층의 긴급한 위기(실업, 폐업, 사망·이혼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위기 등)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 (위기사유 확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위기사유 적극 발굴 추진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및 자살 고위험 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를 위기사유로 인정('19.7.~)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소득의 상실 또는 급격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에 추가('20.4.~)
- (재산·금융재산 기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 세부기준 지속 완화
 -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재산기준 40% 완화('19.1.~)
 - * (대도시) 1.35→1.88억원 / (중소) 0.85→1.18억원 / (농어촌) 0.73→1.01억원 이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산 차감 기준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를 통해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19.3.~)

② 장애인재난·안전 지원시스템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재난 시 장애인의 피해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 통계 미비, 안전 설비 설치 미흡,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등 안전 인프라 미흡

■ 정책과제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법 제도 정비('18~'19)
 -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 통계 구축('18~)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신속한 화재 인식 및 대피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점멸·음성출력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18)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18)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4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 긴급복지 예산 = 긴급복지 지원금+ 일자리사업	- 2018: GDP대비 0.007%	- 2030: GDP대비 0.008% - 2040: GDP대비 0.009%
	(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	- 지속 감소

목 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1 여건 및 전망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필요

-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는 지속 증가
- 고투입 농업*에서 탈피하여 친환경농업 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필요
 - * 화학비료 사용량: 249kg/ha('11년) → 268kg/ha('18년)
- 공공급식 등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미래세대 건강,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고, 다양한 식품·비식용 분야의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지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산물시장 안정화 시급히 요구

-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등 농촌의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도농간 소득격차* 및 정주여건 격차 여전히 상당
 - * 도농간 소득격차(출처: 농촌경제연구원): 64.9%('18), 64.1%('19)
-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생산량·가격 변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경영 위험에 처한 농가의 안전장치 불충분
-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기반한 관광산업 등 활성화로 농촌활력 제고 및 농가경제 활동의 다각화 필요

○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및 기후변화 대비 신품종 개발이 필요

- 농업유전자원은 식량안보, 영양 개선, 지속가능 농업 등의 기반이나, 주요 농작물·가축에만 편중되어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필요
- 다양성 유지·확대를 위한 유전자원의 수집, 안전 보존 및 평가의 체계적 수행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내재해성, 내병성, 내충성 등 신품종 개발·보급 필요

2 비전 체계

목 표

2

포용·혁신·친환경의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의 안정적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 확대 및 미래세대 식생활 개선
소득원 다각화 및 경영안전망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증대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업 확산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및 신제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 신제품 개발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 안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수급 안정 및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의 안정적 보장

농식품부

■ 추진 배경 및 목적

-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절대적 기아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소득 불평등, 사회 양극화로 취약계층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잘못된 식생활은 건강·영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영양 수준 제고를 어렵게 할 수 있음
- 과거에는 식량안보 개념이 국민의 양적 섭취를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구축(식량자급률 제고)에 한정
 -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유지와 식품 선호의 충족을 위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포괄적 관점에서의 식량안보 개념으로 수용
 -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식품 섭취의 양적 충족과 함께 질적 수준이 보장될 필요

■ 정책과제

- 취약계층 대상 복지용 쌀 할인가공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8만톤 수준의 정부관리양곡(쌀)의 90% 할인 공급

- 미래세대 등 맞춤형 식품 지원 등을 통한 식생활 개선
 - 초등학생 등 영양취약계층에 최소한의 과일 공급 등을 통한 영양 불균형 완화
 - 바른 식생활에 관한 교육 확대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유도

K-SDGs	지표명	현 수치	목표
세부목표 2-1	(1)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 2018: 88.5%	- 2030: 지속확대 - 2040: 지속확대

[K-SDGs 세부목표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2) 소득원 다각화 및 경영안전망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농식품부

■ 추진 배경 및 목적

- 농가소득은 2018년 4천만 원대에 진입했으나 '19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62.3%로 격차가 있음
 - 농촌의 고령·과소화로 농업생산의 지속성 약화
 - 농산물 수입 증가, 농가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업소득 정체
-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우박·폭염 등 재해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전망 확충 요구 증가

■ 정책과제

-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판로확충 등 농업소득 증대
 - 쌀·채소류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 지원, 로컬푸드 확산 등 중소농 판로 확충 등 추진
- 농촌융복합사업 등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 농업생산에 가공·유통·관광산업 등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 사업 등 추진
- 재해대응력 강화, 공익직불제 본격 추진 등 소득안전망 확충
 -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재해보험 지속 지원 등 추진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안착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2-2	(1) 농가소득	- 2019: 42,870천원	- 2030: 농가소득 증대 - 2040: 지속 확대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2019: 38.8%	- 2030: 45.0% - 2040: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농식품부·농진청

① 친환경농업 확산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필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생태·경관 보전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중 하나로 정착
 - 또한 먹거리 소비에서의 건강·안전성 및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
- 우리나라의 고투입-고산출 농업은 생산성을 궁극적으로 둔화시키는 동시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저하를 초래해 옴
 - 2015-17년 토양의 평균 질소수지는 OECD 평균(66.35kg/ha)의 3배가 넘는 213.78kg/ha이며, 평균 인수지는 43.54kg/ha로 OECD 평균의 6배 이상 높음
 - 또한 농업생산 구조 변화로 인해 2011년 이후 화학비료 사용량 역시 증가 추세에 있음 (2011년 249kg/ha → 2018년 268kg/ha)
- 농업·환경·먹거리 균형발전으로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친환경농업의 역할이 중요
 -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통해 농업·농촌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 강조
 - 저투입·자연순환형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유기적인 발전 도모

■ 정책과제

- 저투입 농법 개발·보급 및 인력 양성
 - 유기농업, 병충해 방제 등 현장수요 발굴 및 기술개발·보급(농촌진흥청)
 - 선도농가·농진청과 연계한 현장·실습 중심의 밀착 교육, 동영상, 유튜브 제작·보급으로 신규 친환경 농업인의 조기 정착 지원

-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유통 기반 확충
 - 지역 특화품목 중심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 생산기반 확충
 - * 집단화된 농경지에 친환경 생산·유통·가공 시설·장비, 교육·마케팅 등 지원('17~'29년 : 170개소 조성 예정)
 - 친환경 물류센터(경기, 전남),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도별 1개소)을 활용하여 대량 수요처에 안정적 물량 공급 및 소비 확대 유도
 - 저비용·고효율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충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산업 활성화
 - 공공급식·직거래·홈쇼핑·온라인 등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충 지원
 - 다양한 식품·비식용 분야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지원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2-3	(1)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 2019: 1.9%	- 2030: 3.4% - 2040: 지속 확대
	(2)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	- 2017: 23g/Kg	- 2030: 24g/Kg - 2040: 25g/Kg
	(3) 발토양 산도	- 2017: 6.3pH	- 2030: 6.4pH - 2040: 6.5pH

[K-SDGs 세부목표 2-4]

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4)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및 신품종 개발

농진청

①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 추진 배경 및 목적

- 생명산업은 다양성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가 필요함
 - 유전자원 이용 시 사전동의와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나고야의정서 체제 발효에 따라 해외자원 접근 및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
- 우리나라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책임기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 2020년 1월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 확보되어 있는 종자 및 영양체 식물유전자원은 263천 자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나 밀, 보리, 콩 등 식량자원에 편중되어 종 다양성이 부족함
 - 2020년 1월 기준 가축유전자원센터에 279천여 점의 동물유전자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식물유전자원 분야와 마찬가지로 소, 돼지, 닭 등 식량자원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성 유지·확대를 위한 유전자원의 수집, 안전보존, 평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정책과제

- 자원분야별 핵심수집 목표 설정 및 이행
 - 국내에서는 재래종, 야생종을 포함한 전략적 자원 확보
 - Worldveg, IRRI 등 국제기구, 그리고 나고야의정서 미가입국(미국 등)과의 국제협력 도모로 자원확보
- 자원 보존 및 관리 강화
 - 농업생명자원 특성평가 강화 및 평가항목 정비
 - 유전자원 증식 및 안전 중복보존 확대
 - 육종 소재화 추진
 - 보존기술 고도화

-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 구현
 - 생명자원서비스(BRIS)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 개선
 - 나고야 의정서 관련 정보제공 및 대응 지원

② 신제품 개발

■ 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의 증가 및 글로벌 확대로 재해저항성, 내병성, 내충성 등을 갖춘 농작물 품종 개발이 필요함
 - 기후변화 대응 신제품 개발은 재배가능면적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한 내재해성 품종개발은 기존 육종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농생명 오믹스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국내는 아직까지 실용화 초기단계로서, 선도국에 비해 상당히 지체된 것으로 평가됨

■ 정책과제

- 기후변화 대비 신제품 개발
 - 육종소재 핵심집단 구축
 - 인공교배, 계통 선발, 유전적 고정화 단계 등 일련의 절차와 더불어 생산성, 지역적응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검정 수행
 - 데이터 가공 및 표준화를 통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AI) 기술기반의 디지털 육종을 구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2-4	(1) 종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점수	- 2017: 249천점	- 2030: 280천점 - 2040: 290천점
	(2) 종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유전자원 점수	- 2020: 280천점	- 2030: 340천점 - 2040: 370천점
	(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 2019: 266종	- 2030: 400종 - 2040: 500종

[K-SDGs 세부목표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

농식품부

■ 추진 배경 및 목적

-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 대비하여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매년 쌀, 콩 등 공공비축 추진
-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쌀 수급관리 강화를 통한 쌀 시장 안정화 도모
 - 농업인이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쌀 수급관리제도를 도입·운영

■ 정책과제

- 쌀 적정생산, 소비촉진을 통해 수급 균형으로 쌀 가격 안정
 - 가공용 쌀 품종·기술개발 등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소비·마케팅 지원을 통해 쌀 수요기반 확충
- 적정 수준의 정부관리양곡 재고 유지 및 효율적 관리
 - 복지용, 학교급식용 등 공공용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재고 지속 유지
 - 정부양곡 재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양곡관리시스템’ 도입·구축
 - * 정부양곡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0) → 전체 도입('22)
- 국제곡물가 변동 등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 기후변화, 국제곡물가 변동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 및 위기단계별 대응 방안 내실화 추진

K-SDGs 세부목표 2-5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 2018: 1,442천톤	- 2030: 800천톤 - 2040: 800천톤

목 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1 여건 및 전망

- 지속적 의료 확충에도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
 -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건강 불평등**도 존재
 - *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 비중('17) : 33.7%, OECD 평균 20.5%
 - ** 입원 사망비('13~'17, 서울대) : 서울 0.93, 충북 1.31, 부산 1.01, 경북 1.25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책 부족
 -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여전히 낮은 체감도, 초저출산** 추세 지속
 - * 저출산 예산 ('11) 7.4조 → ('19) 32.4조 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17.9)
 - ** '18년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미만(0.98명) 수준으로 하락
 - 빠른 고령화로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 예상, 양질의 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비는 부족
 -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증가율('08~'17): 한국 3.2%, OECD 평균 0.9%
 - 산업구조 변화*, 1인·저소득 노인 가구** 증가 등 불평등·양극화의 구조적 요인은 지속
 - * 제조업 고용 비중(고용 동향) : ('00) 20.3 → ('19) 16.3%
 - ** 1분위 노인가구 비중(4분기) : ('10) 46.3 → ('16) 62.3 → ('18) 64.0%
 - '19년 합계 출산율 0.92명, '04년 이후 초저출산 15년 이상 지속되었고,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65만 명) 본격 노인 진입, 고령화 가속
 -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확대(('19) ▽5.5만 → ('20) ▽23.2만 명), '25년부터 초고령 사회(노인 인구 20% 이상)로 진입

- 미세먼지 관련 국민 만족도 하락에 따른 미세먼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 2019년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19.12, 일반 국민 1,210명, 환경부) 주요 결과
 - (인지도) 미세먼지(83.3%), 자원순환(77.8%), 기후변화 대응(73.7%)
 - (만족도) 일반국민 만족도 최근 3년간 지속 하락(59.8 → 59.2 → 58.9점)
 - (지역 편차) 미세먼지(충청 56.9 ↔ 강원 63)

- (참여도) 미세먼지 등 9개 분야에 대해 ‘관심 있으나 실천해보지 못함’이 평균 41.7%(현재 실천 중 28.7%, 실천경험 21.6%, 관심 없음 9.3% 등)

○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보건의료 영향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 및 우울감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경기연구원)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현재 초과사망률의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코로나로 인해 고독사 및 자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관리 필요

* 초과사망(통상 수준을 초과해 발생한 사망): 2020년 1~8월 사망신고 접수된 35주(~8/29) 까지 사망자 수는 2019년 동일주간 대비 5,782명(3.0%) 증가함

2 비전 체계

목표

3

양극화, 고령화, 팬데믹에 대응하는 건강복지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의 관리 • 가까운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적극적 금연 정책 • 건강 취약집단 관리 체계 구축
국민정신건강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사업 •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도모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적인 관리모델 구축 • 코로나 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 정신건강 관리 • 음주폐해 예방
교통사고 사망률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원헬스적 측면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정책 • 감염병 취약집단 개념화 및 관리체계
모성 건강 보호 및 증진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와 영아사망률 감소 •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
각종 환경으로 인한 사망, 질병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 온열환자 리포팅 및 예방사업 •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조사 사업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돌봄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 공공의료 종사 인력 양성 •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 •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 확대

보건복지부

① 만성질환의 관리

■ 추진 배경 및 목적

-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병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1,537개 의원 참여 및 환자 21만명 관리)로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강화 도모

■ 정책과제

- 만성질환 국가·지역·개인이 함께하는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지역 건강사업 확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대상('19. 17만 → '20. 21만명) 및 질환 확대*모형 마련, 노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19. 91만→'20. 100만 가구)
 - * 고혈압·당뇨병 → 아동 천식·아토피,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② 가까운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역별 의료수준의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지자체별로 병동의 확보 수준과 공공의료의 차이가 있음.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19 감염증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의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이 있음. 현재 대구지역의 경우 1사분기에 전년도에 비해 사망자가 상당수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었는데, 의료미충족으로 인해 사망자가 증가하고 다른 질병의 환자들이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정책과제

- 지역의료 강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 강화.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협력의료체계 구축하여 지역에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필수분야 의료체계 육성
 - 응급·중환자 등 필수적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및 육성
- 응급환자 지역 간 이송체계 구축
 -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가 적절히 이송될 수 있도록 지역간 협력 체계 구축

③ 적극적 금연 정책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금연종합대책 수립·추진, 적극적 홍보를 통해 성인남성흡연율 역대 최저치 기록
 - 2015년 39.4%에서 2016년 40.7%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역대 최저치 36.7%로 감소

■ 정책과제

-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④ 건강 취약집단 관리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질병 유병률 격차가 상당함. 의료급여(65.2%), 차상위(52.3%), 차차상위(27.3%), 일반(14.7%)로 계층별 만성질환 유병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2005).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안전망 강화 정책이 필수적임

■ 정책과제

○ 고액의료비 상한제

- 고액의료비 방지 한도 이상 고액의료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저소득층 등 의료비 경감 및 고액의료비에 대한 상한제 강화
-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기준금액을 낮춰 환자 부담은 낮추고 건강보험의 지원 확대

○ 의료안전망 강화

-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비한 긴급 지원 제공, 저소득층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산 방지

○ 취약집단 건강 통합 관리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 취약집단 건강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3-1	(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0~70세)	- 2016: 7.8명	- 2030: 4.0명 - 2040: 2.4명
	(2) 당뇨병 조절률	- 2016-18: 30.5%	- 2030 : 36.0% - 2040 : 38.5%
	(3) 성인 흡연율	- 2018: 22.4%	- 2030: 16.5% - 2040: 12.7%
	(4)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 2017: 84.3%	- 2030: 80.0% - 2040: 75.0%

[K-SDGs 세부목표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2) 국민정신건강 질 향상

보건복지부

① 자살예방사업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자살 예방) 자살사망자(5년간, 6.5만 명) 전수조사결과, 심리부검(매년 약 100명)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대책」 수립('20.5)
- (자살자 전수조사) 경찰청 변사자(과거 5년치, 7만명) 전수를 조사하여 마을(읍면동) 단위의 분석 보고서를 일선 지자체에 제공 '19.8월까지 서울, 부산 등(56천건) 조사 완료, 98건 분석보고서 배포 완료
 -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타 부처 및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 추진('19.7월부터 서울 등 일부자료 시범 제공)

■ 정책과제

-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위험 제거
- (상담·치료 접근성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정신치료 본인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상담·치료 접근성 강화
 - 자살위험 차단(위험장소 순찰강화, 자살보도 권고기준)
 - 우편함, 편의점, 약국 등 생활밀착시설 통한 상담전화 등 집중 홍보
 - 자살시도자는 모든 응급실에서 사례관리로 연계('20.하)하고, 유족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적용
 - * 자살현장 출동→초기안정→서비스 연계(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복지서비스 등)

②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도모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자살 등이 증가하고 있음. 2005년 진행된 한국인의 사망원인과 질병부담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망원인의 4위가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며 질병부담 6위에 우울증과 9위에 조현병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정신질환자의 자살은 비장애인의 자살률의 6.9배에 이룸. 따라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 강화, 그리고 취약 고위험 집단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 정책과제

-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 삶의 위기요인에 대응하는 고위험군 발굴
 - 지역별 정신 상담기관 운영
 - 자살 시도자 원스톱 지원체계
 - 취약집단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문제도출 체계 구축

③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적인 관리모델 구축

■ 추진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일 수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현재의 장기입원 체계를 지역사회 케어의 방식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필수적임. 이런 변화는 보건적 목적의 실익과 인권적 목적 모두를 충족할 수 있음

■ 정책과제

- 중증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과 삶의 질을 향상
 - 중증정신장애인 조기개입
 - 집중지원 및 응급대응
-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내 위기관리서비스 강화
 -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적 접근 및 치료
 - 지역사회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④ 코로나 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 정신건강관리

■ 추진 배경 및 목적

-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화 국면에서 심리방역 등 감염병 팬데믹상황에서의 정신건강 문제가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재난이 상시화되면서 질병 관리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재난적 상황이 발생. 고용축소, 실업, 장기 불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공동체 활동의 축소 등으로 인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

■ 정책과제

- 코로나 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전 국민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 재난 상황에서의 정신건강을 모니터링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사회적 심리방역의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자연재해,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심리적 방역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⑤ 음주폐해 예방

■ 추진 배경 및 목적

-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19세 미만인 자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음주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법적 실효성이 떨어짐
- 청소년의 주류구입 및 주류판매업소 출입 방지를 위해 연령확인을 강제하고 있으나, 판매 및 출입 시 신분확인 등 연령확인이 준수되고 있지 않음
- 학교보건법 제5조와 6조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200미터 내로 설정하고 주류판매 음주가무시설을 금지
 - 하지만 이 지역 내 주류판매점(수퍼, 편의점 등)의 상품전시와 과도한 광고물 부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정화가 필요함

■ 정책과제

-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후속조치마련
 - 주류판매업소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대상 주류판매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 시 처벌강화
 - 27세이하 면허증 제시 의무화
 - 위험인구집단 대상 조기선별 및 개입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선별 및 개입 체계 구축
- 위험인구집단 알코올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3-2	(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 2018: 26.6	- 2030: (청소년) 4.1명 (노인) 33.6명 - 2040: 지속 감소
	(2) 15세 이상 인구 일인당 알코올 섭취량	- 2018: 8.477L	- 2030: 7.2 L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3) 교통사고 사망률 줄이기

국토교통부

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

■ 추진 배경 및 목적

- 도시화, 교통량 증대 등으로 인해 한 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나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 중. 이처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7.3명 ('17년 8.1명 → '18년 7.3명)으로 사망자는 2017년 대비 9.7% 감소하였으나, '18년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사고건수 0.4%, 부상자 0.1% 증가하였음. 감소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감소시킬 필요성 부상

■ 정책과제

- 교통사고 사망률 절반 프로젝트
 - 보행자 및 대중교통 안전 우선 추진
 - 지자체 교통안전 활동 강화
 - 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K-SDGs 세부목표 3-4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인구 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2018: 6.7명	- 2030: 2.7명 - 2040: 1.2명

[K-SDGs 세부목표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①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종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 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한국사회에서는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 아니라, 구제역,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감염병 재난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 그리고 회복, 완화의 과정을 형성해갈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비상방역대책
 - 검역-진단/검사-치료-사후관리 단계별 대응역량 강화
 - 진단키트, 백신 및 치료약 개발과 보급
- 권역 감염병 병원 및 역학 조사관 확대 및 처우 보장
 -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료진의 지속가능성. 방역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진에 대한 처우 문제가 중요
- 감염병 진단·연구역량 확충 및 다부처·글로벌 협력 활성화
-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 관리 강화

② 원헬스적 측면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 정책

■ 추진 배경 및 목적

- [원헬스] 사람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사람, 동물 및 환경에 최상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국가 및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공동 노력을 장려하는 것(美CDC)

- 사스('03), 신종인플루엔자(H1N1, '09), 메르스('15)* 등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으로 국내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 * 메르스는 중동지역에서 지속 발생 중
 -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75%)이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바이러스가 원인임. 에볼라바이러스병('17.5월), 크리미안콩고열('16.8월), 서아프리카 라싸열('16.2월) 등
 - 사람, 동물, 생태계의 상호작용이 신종 감염병 발생과 확산에 기여, 원헬스 기반의 다학제적, 국제적 협력 필요
- 또한 새로이 발생하는 감염병의 80%가까이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을 위한 질병 예방뿐 아니라 인간-동물-환경의 관계 속에서 누구나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 원헬스 입장에서의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 '통합건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단을 발족하여 관련부처에서 생성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기적 연계 기반을 마련
 - '하나의 건강' TF를 통하여 '건강안전위원회'준비 작업, '건강질병정책연구원' 설립준비 작업 등을 수행
 - 감염질환관리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인수공통감염병, 곤충매개감염병, 항생제 내성) 사업 수행
 - 의학, 수의학, 환경보건학 등의 교육시스템에 '하나의 건강'관점의 교과목을 추가하여 상호이해도를 높임
 - 또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보건전문가를 해외 주요 국가들에 파견하여 국제협력 및 국내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③ 감염병 취약집단 개념화 및 관리체계

■ 추진 배경 및 목적

- 감염병 관리법개정(2020)에 취약계층이 명문화되었지만 어린이, 노인만이 포함되었을 뿐 기저질환자나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음. 그리고 현재 마스크 지급 등만을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정의와 대책 마련이 필수적임

- 현재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사망률은 노인층에서 가장 높으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정신병원 등 밀집된 생활환경에 있는 경우 발병율과 치명율이 높은 상황임. 그래서 감염병에 취약한 생활환경, 노동환경 등에 대한 범주화, 체계화를 통해 이후 치료약, 백신 보급 등에서 사회적 자원 분배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함

■ 정책과제

○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집단 개념화 및 지표 개발

- 방역 영역에서 취약집단의 개념화 및 정책 지표 개발 필요. 취약집단을 위한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감염병 감염자/접촉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 받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구성. 재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성 자체를 일종의 지표로 구성해 정책집행을 해야 함

○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집단 관리체계 구축

-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집단이 더욱 질병에 취약. 기저질환, 빈곤, 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에, 병원 입원 및 감염병 방역 차원에서 취약집단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체계 구축
- 취약집단 관련 방역 및 사회적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3-4	(1) 인구 십만 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 2019: 46.4명	- 2030: 40명 - 2040: 지속 감소
	(2)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 2019: 1.08건	- 2030: 0건 유지 - 2040: 말라리아 퇴치 인증

[K-SDGs 세부목표 3-5]

[K-SDGs 세부목표 3-6]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5) 모성 건강 보호 및 증진

(6)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

보건복지부

① 산모와 영아사망률 감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만혼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 부부, 저체중아, 선천성 이상아 등 임신·출산 관련 장애가 증가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감소, 분만취약지 증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 등 관련 인프라 부족과 통합적 관리 미흡으로 출산환경 악화

■ 정책과제

-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생애초기 방문건강 관리

②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청소년의 위해요인을 지속 발굴,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통한 손상예방 활동이 필요

■ 핵심 정책과제

-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 정책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아동 중 취약계층 아동의 추구관리 사업 개발
 - 보건소의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의 기본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개발 제공
 - 보육시설 영유아의 비만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 제공

K-SDGs 세부목표 3-5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출생아 십만 명당 모성사망자 수	- 2018: 11.3명	- 2030: 7.7명 - 2040: 6명
K-SDGs 세부목표 3-6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 2018: 1.5명	- 2030: 지속 감소 - 2040: 1명
	(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 2018: 74.5%	- 2030: 추후 보완 - 2040: 85.0%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 2016-18: 11.5%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7) 각종 환경으로 인한 사망, 질병 감소

환경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①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 추진 배경 및 목적

- 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 전망 ('15년 600억불에서 '60년 2,800~2,900억불로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다양한 연구에서 건강영향, 생산활동 제약 등으로 연간 1조에서 4조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이러한 경제적 피해 외에도 기존 수도권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오염총량제를 '20년 4월부터 대기오염 심각 및 우려 지역인 전국단위로 확대(중부권·남부권·동남권) 시행하여 대기오염물질 광역관리체계를 마련함.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총량관리대상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조기사망률 증가, 각종 호흡기 질환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고 청정대기환경 복원 및 국가 미세먼지 종합감축목표 달성으로 지구온난화 대응

■ 정책과제

-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총량제 전국 확대 시행
 -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심각지역 및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 15개 시·도로 확대하여 관리권역 내 일정기준* 이상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총량관리제 시행('20.4월~)으로 권역 중심의 광역적·체계적 대기질 관리
 -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TSP 0.2톤을 각각 초과배출하는 사업장(기준 : 수도권 400여개 사업장→ 확대: 4개 권역 약 1,200여개 사업장)
 -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통합허가법 상 농도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함에 따른 미세먼지 다량 생성 방지를 위해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 확대되는 권역 내 총량관리 사업장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배출구에 굴뚝자동 측정기기(TMS) 부착을 원칙으로 하여 배출량 자동 관리 및 사업장 경각심 제고
- 지역배출허용총량 설정시 지역의 경제성장, 기업의 신규투자 및 공장의 신·증설 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고,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감안하여, 시행초기의 할당량을 최근연도 배출량 수준으로 하여 사업장에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등 최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또한,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잔여총량의 배출권 거래 및 이월 허용, 3종 사업장 농도기준 완화,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및 TMS설치 지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

② 온열환자 리포팅 및 예방사업

■ 추진 배경 및 목적

- 폭염은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 일사병을 야기하며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순환기 질환자의 사망률을 높임
 - 2019년 여름철 폭염일수는 13.3일(평년 9.8일), 열대야일수는 10.5일(평년 5.1일), 2018년 대비 폭염일수는 41%, 열대야 일수는 59%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앞으로 더욱 강하고 빈번하며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중 국내에서는 폭염에 의한 건강피해가 가장 직접적이며 확인 가능한 자료임.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은 최근 보건분야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 현재 수립중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PH2030)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으로 등장

■ 정책과제

-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 보건소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사업
- 폭염대비 건강가이드라인 제시
-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취약가구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 경로당 지붕 차열도장, 폭염대응물품제공 등)
- 폭염대비 지원사업(그늘막,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 무더위쉼터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와 홍보활동 등) 시행

③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조사 사업

■ 추진 배경 및 목적

- 중금속은 지속적 노출로 생체내의 축적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줌
 - 낮은 중추신경계와 신장의 손상, 어린이의 학습장애와 ADHD, 지적능력의 저하, 소환, 빈혈, 면역계, 뼈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수은은 태아 또는 어린이의 신경발달 장애, 신장 및 중추신경계 손상, 인식·언어장애를 유발하고, 카드뮴은 호흡기, 눈의 자극, 흡입 시 폐수종, 단백뇨와 신장 기능 장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국립환경과학원, 2019)
 -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는 제1, 2기 조사에 비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며, 혈중 납 농도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고 독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국립환경과학원, 2019) 환경유해물질 노출요인 파악과 저감을 위해서는 해당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 있음

■ 정책과제

-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조사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조사로서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오염물질의 생체 내 농도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
 - 기초조사 결과를 통해 오염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집단 또는 지역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추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3-7	(1) 인구가중 초미세먼지 (PM2.5) 농도	- 2017: 25.1 $\mu\text{g}/\text{m}^3$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제3기(2015-17) - 납: (중고등학생) 0.80 (성인) 1.60 - 수은: (중고등학생) 1.37 (성인) 2.75 - 요증 카드뮴: (영유아) 0.11 (초등학생) 0.23 (중고등학생) 0.29 (성인) 0.36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8)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

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돌봄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저성장, 인구고령화 등 경제 사회구조의 지속 가능성 위협요인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여러 보건/복지 및 돌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치매 노인의 지역사회 돌봄 등을 통해, 현재 노인에 대한 돌봄이 대체로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공적으로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함

■ 정책과제

- 치매 노인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시군구 단위 총 256개)를 중심으로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 일자리 확대
- 노인 평생교육 확대
- 노인병원/노인요양시설 관리감독 강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3-8	(1) 영아사망률	- 2017: 2.8%	- 2030: 2.5% - 2040: 2.1%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2018: 6.1	- 2030: 7.0 - 2040: 8.0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등록·관리율	- 2019: 56.7%	- 2030: 82% - 2040: 85%
	(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 2017: 74.7%	- 2030: 74.0% - 2040: 75.0%

[K-SDGs 세부목표 3-9]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9)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① 공공보건 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 추진 배경 및 목적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고, 기관수 기준으로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는 등 뒷걸음 쳐왔음. 이는 공공보건 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은 신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비중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공공의료의 강화가 필요함. 한국은 전 세계적 수준에서는 공공의료의 비중이 다소 낙후되어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해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에 공공병원과 병상 확대, 지역의료 확대를 통해 의료체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정책과제

- 중앙과 지역간의 공공보건 의료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 중앙부처 간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재난발생시 대응체계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의 국가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 의료 지원센터와 공공보건 의료 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하여, 정책적 지원기능과 공공의료 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

② 공공의료 종사 인력 양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 의료 핵심인력을 양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함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한 의사 포함)는 인구 1000 명당 2.3명으로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칠레와 동일하며, 터키(1.8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수준. 의사 수가 적은 국가는 이외에도 일본·멕시코·폴란드(2.4명), 미국·캐나다(2.6명), 영국(2.8명), 아일랜드·룩셈부르크(2.9명) 등이었고, OECD 평균은 3.4명. 양질의 의료인 수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인력양성이 필요

■ 정책과제

- 국립공공의대 개교 및 의료인 양성
 - 공중보건장학의제도 재도입 등 공공의료전문인력 양성

③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함. 현재는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상당한 수준임
 -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함

■ 정책과제

- 지자체의 정책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의료 싱크탱크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지원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 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
- 의료사각지역 공공병원 기능 보강
 - 특히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

④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계 의료비 부담(16. 33.3%)이 OECD 평균(20.3%)보다 높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일상적인 불안 경험
 -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대 초반에서 정체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정책과제

- 비급여의 급여화
 - 비보험 영역을 대폭 급여화하여 비급여 비용부담 해소
 - (의학적 비급여)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적용
 - (3대 비급여) 선택진료(특진), 상급병실, 간병비 등도 급여화
 -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충 등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간호·간병제도개선을 통해 적용병상 확대
 - 인력서비스 질 향상 및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사적으로 크게 부담하고 있는 간병비용 부담 경감

K-SDGs 세부지표 3-9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수	- 2018: 1.24개	- 2030: 1.54개 - 2040: 3.07개

목 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1 여건 및 전망

○ 인구구조, 산업·고용 등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빠른 고령화로 국가 인적자원 감소

* 학령인구(만명) : ('10) 735(총인구 14.8%) → ('19) 554(10.7%) → ('25) 509(9.8%) → ('30) 426(8.2%)

* 65세이상(만명) : ('10) 537(총인구 10.8%) → ('19) 769(14.9%) → ('25) 1,051(20.3%) → ('30) 1,298(25%)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35년까지 전문과학기술,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중심 취업자 증가 및 고숙련 직업군 취업자 큰 폭 증가하는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및 일자리구조 재편이 예상('19. 고용정보원)

○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

-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취학률이 100%에 근접하며, 학업중단율은 2018년도 기준으로 0.9%(52,539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교육부, 2019),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교육격차의 발생에 따라 교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 중 고등학생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19 〉

(%)

연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12	2.2	3.0	1.4	3.0	3.7	2.1
2013	3.3	4.3	2.0	3.4	4.2	2.4
2014	3.7	5.1	2.2	4.2	5.4	2.9
2015	3.5	4.9	2.0	4.2	5.7	2.6
2016	3.6	4.9	2.2	4.5	6.0	3.0
2017	4.3	5.5	3.0	6.3	8.2	4.4
2018	6.9	8.7	5.0	6.7	8.6	4.6
2019	6.4	8.2	4.4	5.5	6.8	4.2

주: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2) 2017년도 이후 평가 결과는 3% 표본 대상 평가 결과임.

3) 2017년도 통계치는 2018, 2019년도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값으로 수정하였음.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 장애인 학생의 교육기회 접근성 및 고용기회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 및 취업률(2017년 기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들의 진학 및 취업률 현황 〉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수	진학		취업		비진학·미취업자 수	
		진학자 수 (대학 / 전공과)	진학률 (%)	취업자 수	취업률 (%)		
고등학교	특수학교	2,546	1,353	53.1	145	12.2	1,048
	특수학급	3,989	1,591	39.9	790	32.9	1,608
	일반학급	1,199	638	53.2	92	16.4	469
	계	7,734	3,595	36.8	1,847	29.8	3,125
전공과	특수학교	1,942	12	0.6	748	38.8	1,182
	특수학급	110	1	0.9	72	66.1	37
	계	2,052	13	1.5	820	40.2	1,219
전체	9,786	3,595	36.8	1,847	29.8	4,344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 수 / 당해년도 졸업자 수)×10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진학자 수)}×100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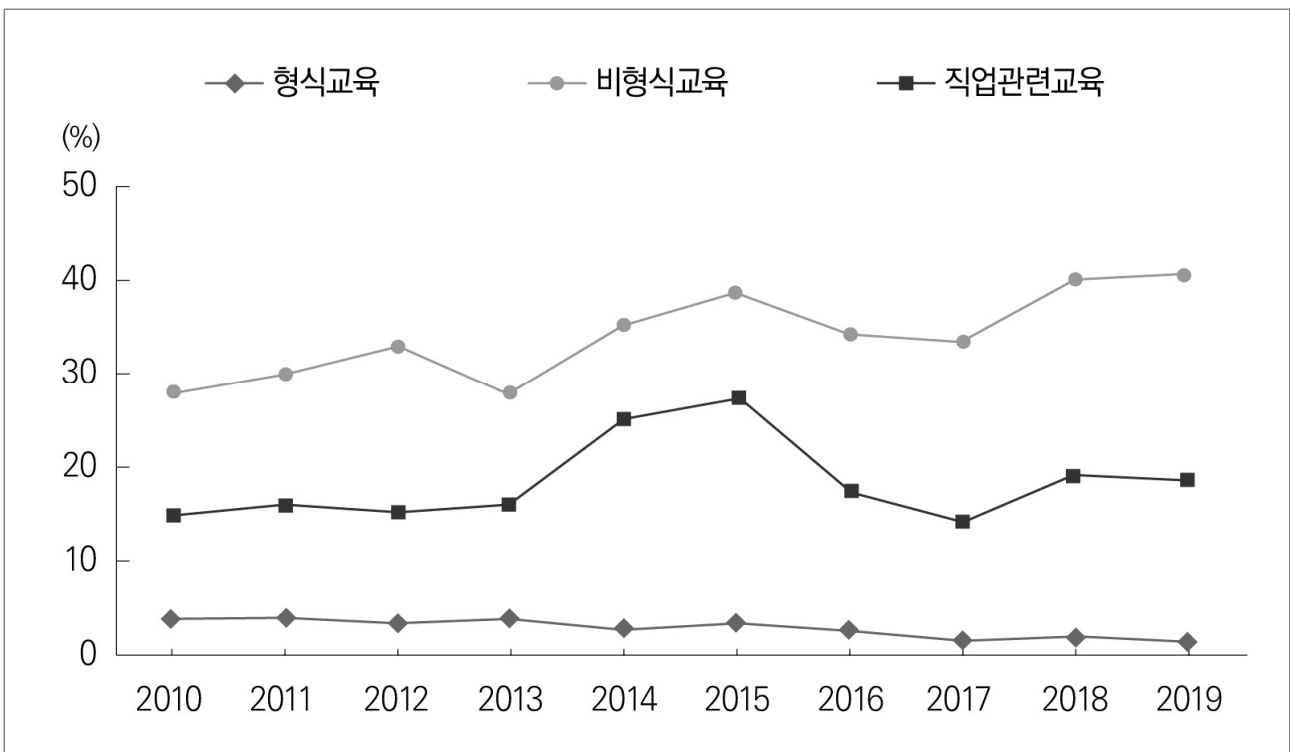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의 필요성 대두

- 급속한 기술변화로 인해 교육 및 노동환경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업과 일자리 변화도 상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형식교육 참여율 2010년 3.9% → 2019년에 1.5%

* 비형식교육 참여율 2010년 28.2% → 2015년 39.1% → 2019년 40.9%

〈 평생학습 참여율, 2010-2019 〉



- 주: 1) 평생학습 참여율은 만 25-64세 이상 성인인구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교육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임.
 2) 형식교육은 평생학습 중에서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졸업장이나 학위의 취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임.
 3)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의 학력 또는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임.
 4) 직업 관련 교육은 비형식교육 중 취·창업이나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 교육, 외국어 학습 및 직장에서의 직무교육을 의미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각 연도.

〈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4,295	3,789	3,848	4,102	3,774	3,205.4	3,539.4	4,044.4	5,227.3
재직자훈련	4,269	3,362	3,477	3,616	3,453	2,895	3,228	3,720	4,916
실업자훈련	56(303)	394	338	451	284	272.4	272.4	291.4	277.3
공공훈련	26	33	33	35	37	38	39	33	34

출처: 고용노동부(2018),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 고등교육 민간재원 의존율 심화

-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나, 민간재원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

〈 GDP 대비 공교육비('16년 회계연도 기준) 〉

(단위 : %)

구 분							초등학교~고등교육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한 국	3.1	0.5	3.7	0.7	1.1	1.7	3.8	1.6	5.4
OECD 평균	3.1	0.4	3.5	0.9	0.5	1.5	4.0	0.9	5.0

주 1) 한국의 연도별 GDP : ('15년) 1,564.1조원 → ('16년) 1,641.8조원

2) OECD 지표 구성이 변경되어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초등학교~고등학교 GDP 대비 0.03%, 고등교육 GDP 대비 0.29%)을 민간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 자원'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만 수록

※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예) : 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

출처 : 「OECD 교육지표」, 2019

2 비전 체계

목 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 신뢰 제고를 통한 교육 형평성 확대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선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등교육 발전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기회 확대 • 평생교육 기반 조성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소외계층의 기초교육 및 포용적인 평생직업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의 기초교육 지원 • 소외계층의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청소년과 성인 문해력 향상을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에게 문해 교육기회 제공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강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학교 구현 • 스마트한 학교 환경 조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교육혁신 주체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전문성 강화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1) 출발선 평등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부

① 공교육 신뢰 제고를 통한 교육 형평성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 해소
- 유아부터 청소년, 대학생까지 생애단계별을 지원 확대
- 더욱 촘촘한 교육안전망 구축

■ 정책과제

- 유아부터 초중등까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교육 구현
 - (유아)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등 돌봄 서비스 내실화
 - (유아) 건강·안전관리 등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전국 확대
 - (초등)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하여 학습-안전-돌봄 영역 책임 지도
 - (초등) 읽기·쓰기·셈하기 등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AI게임을 활용한 초등수학 수업콘텐츠 보급 등 기초학력 책임 교육
 - (중등) 교육과정 개정 및 학사제도 개편 등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기회 보장
 -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확충,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다문화학생) 입국초기 다문화학생 학교 적응 지원,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모델 개발·확산

- (탈북학생) 1:1 맞춤형 지원 및 찾아가는 전문상담단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대응방안 수립, 학교 밖 학습을 통한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업 지속 기회 확대

○ 기초학력 지원 및 교육형평성 지표 개발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진단-보정시스템 활용성 제고, 교·사대 교육과정에 기초학력 교육 내용 포함 등으로 지원 강화
-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 우리 교육의 형평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K-SDGs 세부목표 4-1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취학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2018</td> </tr> <tr> <td>유치원</td> <td style="text-align: right;">50.6</td> </tr> <tr> <td>초등학교</td> <td style="text-align: right;">97.4</td> </tr> <tr> <td>중학교</td> <td style="text-align: right;">97.9</td> </tr> <tr> <td>고등학교</td> <td style="text-align: right;">92.4</td> </tr> <tr> <td>고등교육기관</td> <td style="text-align: right;">67.6</td> </tr> </table>	2018		유치원	50.6	초등학교	97.4	중학교	97.9	고등학교	92.4	고등교육기관	67.6
2018														
유치원	50.6													
초등학교	97.4													
중학교	97.9													
고등학교	92.4													
고등교육기관	67.6													
(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PISA 2~6수준 학생 비율)	- 2019: PISA 85.2 - 2017 : TIMSS 98.9	- 2030: PISA 85.6, TIMSS 99.0 - 2040: 지속 증가												
(3)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 현재 산출된 통계 없음	- 2030: 지속 증가 - 203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2)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선 실현

교육부

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과 시민사회 성숙 등 유아교육 패러다임 변화 요구
-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 조성 및 참여기제 강화 필요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 등 유아교육에 대한 기대 및 요구 증가

■ 정책과제

- 유아교육 공공성·국가책임 강화 및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 수요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학급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 (국공립유치원 확충)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시도별 유아배치계획 수립 후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유치원 지속 확충
 - * 단·병설 신·증설 외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운영학급 증설, 운영시간 다양화 등을 통한 방과후 과정 내실화 및 통학차량 운영 단계적 확대
-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실현
 -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편성)
 -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다문화유아 및 가정에 대한 교육확대, 특수유아에 대한 통합교육 확대 운영

②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필요

■ 정책과제

-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 교육환경 조성
 - 학부모의 유아교육환경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유치원의 건강·안전 관리 책임 강화
- 지속적이고 안전한 학습권 보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등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 유치원 원격수업 등 등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치원 여건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 *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로 인정, 수업일수 감축 등 탄력적 학사운영 지원 및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보급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4-2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 2015: 99.4%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 2017: 58%	- 2030: 75.0% - 2040: 지속 증가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2017: 24%	- 2030: 44.0% - 2040: 지속 증가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 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 최초 조사 시행 필요	- 목표치 설정 불가 (통계 미구축)

[K-SDGs 세부목표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3)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등교육 발전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

교육부

①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성인학습자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역량향상을 위한 학습요구
-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정책과제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성인 재직자들이 대학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모집, 교육과정, 수업 운영 등을 유연화
 - * 취업 창업 특화교육, 자격증 취득, 사회공헌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
- 대학의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K-원격교육) 구축을 통한 질 높은 교육기회 확대
 - 공용 LMS 구축을 통한 원격강의 콘텐츠 제작, 대학 간 학점교류 활성화 지원
- 고등교육비 재정투자 확대
 -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수준을 확보, 과도한 민간의존적 고등교육 재정분담 구조 개선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② 평생교육 기반 조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산업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으로 일자리 변화 촉발
- (인구구조)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로 평생학습 수요 증가
- (사회구조) 소득 양극화 심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 확산
- (교육혁신) IT 활용 교수·학습 혁신, 학습 형태의 변화

■ 정책과제

- 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 시간적·경제적 제한 완화로 평생학습권 실질적 보장, 학습능력 진단 및 진로설계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준과 적성에 맞는 학습 참여 유도
 - 고령자, 고졸취업자, 다문화 가족, 경력단절여성 등 학습자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미래신직업 수요 대비 교육과정 혁신
-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사다리 마련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학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 확대직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비 K-MOOC 운영 개선
 - * 직업교육 MOOC 구축 및 직업교육 혁신 기제로 활용, 4차 산업혁명 관련 K-MOOC 개발 및 제공 확대
 -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
 - *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능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식의 다양한 교육 플랫폼 운영 및 지원 체계 구축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4-3	(1) 고등교육 이수율	- 2018: 49%	- 2030년: 49% 유지 - 2040년: 49% 유지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 2017-1: 1.84(백만원) - 2017-2: 2.05(백만원)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 2017: 35.8%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4-4]

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4)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교육부

①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추진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기술·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
- 성인학습자의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지속적 직업능력 향상 요구
- 코로나19 확산으로 야기된 기업의 고용위축 등으로 사회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시급

■ 정책과제

-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 *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실습 및 고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학생의 안전 보건의 강화 등
-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
 -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
 - * 직업계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교육훈련기관의 학위·비학위 과정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
-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확충
 - 입직 전 단계부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고, 입직 이후에도 후학습이나 훈련, 자격취득 및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4-4	(1) 평생학습 참여율	- 2019: 43.4%	- 2030: 50.0% - 2040: 지속 확대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 2017: 16.1%	- 2030: 40.0% - 2040: 지속 확대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 통계 구축 필요	- 통계 구축 후 확정

[K-SDGs 세부목표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5) 소외계층의 기초교육 및 포용적인 평생직업교육 지원

교육부

① 소외계층의 기초교육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하고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 우리 사회의 개방성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기반 마련

■ 정책과제

- (장애학생)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기회 확대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 (장애학생) 특수학교(급)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특수학교를 계획대로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다문화학생)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제도 안착
 - 원활한 공교육 진입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교육 진입 절차 지원
 -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해소
- (다문화학생)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언어학습 지원
 - 맞춤형 한국어교육,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확대 등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등 기초학력 지원

② 소외계층의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교육훈련 사각지대 존재 및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부족
-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훈련-복지-고용 연계 필요

■ 정책과제

- (여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 여성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장애학생)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강화 및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장애유형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 대상의 공공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
- (다문화학생) 다문화학생 진로 지원 강화
 - 이주배경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진로 역량 강화

K-SDGs 세부목표 4-5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 2015: 0.9	- 2030: 1.0 - 2040: 1.0 유지

[K-SDGs 세부목표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6) 청소년과 성인 문해력 향상을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교육부

① 모든 국민에게 문해 교육기회 제공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읽고, 쓰고, 셈하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문해교육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기대수명 연장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 문해교육의 범위를 금융·정보·영어 등 생활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
- 사회·경제·문화적 이유 등으로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 대상 기초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평생 교육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 마련

■ 정책과제

- 학습자 중심 문해교육 지원
 - 지자체 및 소속기관,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단체 등 문해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수요자 맞춤형 생활문해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다양한 영역과 접목시킨 특성화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선정·지원
 - 청소년 및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EBS 방송으로 제작·방영하여 개인·가정 학습 및 교육 소외지역에서 시·공간 제약 없는 상시학습 지원
- 문해교육의 질 제고
 - 문해 학습자의 생활 속 불편 해소가 필요하거나 취약한 분야에 대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문해교육기관의 행·재정 역량 강화, 교수·학습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 추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4-6	(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AC) (청소년 대상)	- 2013 • (a) 언어 능력 level 2 이상 87.2% • (b) 수리능력 level 2 이상 80.8%	- 2030 • (a) 언어 능력 level 2 이상 90% • (b) 수리 능력 level 2 이상 84% - 2040: 추후 보완
	(2) 성인 문해율	- 2017: 성인문해능력 수준 4이상 인구비율 77.6%	- 2030: 성인문해능력 수준 4 이상 인구 비율 90% - 2040: 추후 보완

[K-SDGs 세부목표 4-7]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7)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 교육 확대

교육부·외교부

①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교육현장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 양성
- 개인·사회·인류에 대한 윤리적 규범과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 대외적으로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하고 개도국을 지원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적 확산기반 마련

■ 정책과제

- 교육과정개발 지원
 - 초·중·고 학교급별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 고등교육 기관 내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강좌 확산을 위한 강좌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특강 및 수강생 활동 지원
- 교육가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교육·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연수 등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기반 조성
 - 교원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세계시민교육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국제기구와의 연계 제휴를 통한 교육활동 추진
 - 시민사회 및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학습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모니터링 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4-7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 2020년 첫 측정 결과를 통하여 도출 예정	- 목표치 설정 불가 (통계 미구축)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 2020년 첫 측정 결과를 통하여 도출 예정	- 목표치 설정 불가 (통계 미구축)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 2020년 첫 측정 결과를 통하여 도출 예정	- 목표치 설정 불가 (통계 미구축)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 2020년 첫 측정 결과를 통하여 도출 예정	- 목표치 설정 불가 (통계 미구축)

[K-SDGs 세부목표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8)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부

① 안전한 학교 구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환경 조성 필요
- 학생안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 강화 필요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시급

■ 정책과제

- 재난 상황 등을 대비한 학교 안팎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예방
 - 학교 안팎 위험요인(통학, 재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예방을 위해 방안 마련
- 미세먼지 관리
 -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및 실내 신체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 시설안전 강화
 - 안전한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관리체계 정비 및 학교 내 유해요소(석면) 제거 추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확대
 -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 *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 확대·내실화 및 가해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② 스마트한 학교 환경 조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요구
-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

■ 정책과제

- ICT 교육을 위한 무선험경 구축
 - SW교육,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협업학습 등 ICT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모든 초·중·고에 기가급 무선험경 구축
 - * 초·중·고등학교 일반교실 등에 무선망(Wi-fi) 설치 추진
 - 디지털교과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율개발 학교선택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 민간 교육용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 AI교육 기반 조성
 - 모든 학생들이 AI 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 AI 전문 연수 등을 통해 현직교사의 AI융합교육 역량 강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4-8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2020: 64.5%	- 2030:지속 증가 - 2030: 지속 증가
	(2) 학교 내진보강률	- 2018: 36.7%	- 2030: 100% - 2040: 100% 유지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 2020.9.: 59.5%	- 2030: 100% - 2040: 100% 유지

[K-SDGs 세부목표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9)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교육부

①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재정 투자 확대 필요

■ 정책과제

- 국공립유치원 확대
 -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산(교부금) 지원
- 교육급여 교육비 확대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 고교 무상교육
 -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
 -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확보 방안 및 법적 기반 마련
- 국가장학제도 구축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 지원

K-SDGs 세부목표 4-9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2016: 0.7%	- 2030: OECD 평균 - 2040: OECD 평균

[K-SDGs 세부목표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10) 교육혁신 주체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교육부

① 교원 전문성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및 각종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원 양성 및 교원 역량 강화 필요

■ 정책과제

- 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확보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 내실화
 - 교원들에게 현장 이해 및 적용도를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사전에 키울 수 있는 연수 과정 운영 및 지원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4-10	(1) 교사 1인당 학생 수	- 2017 • 초등교육 16명 • 중등교육 14명 • 후기 중등교육 13명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 2018: 76.3%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3)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 2020: 4.0명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 2019 • 초등학교 9.8% • 중학교 43.8% • 고등학교 43.3%	- 2030: 100% - 2040: 100% 유지

목 표 5

성평등 보장



1 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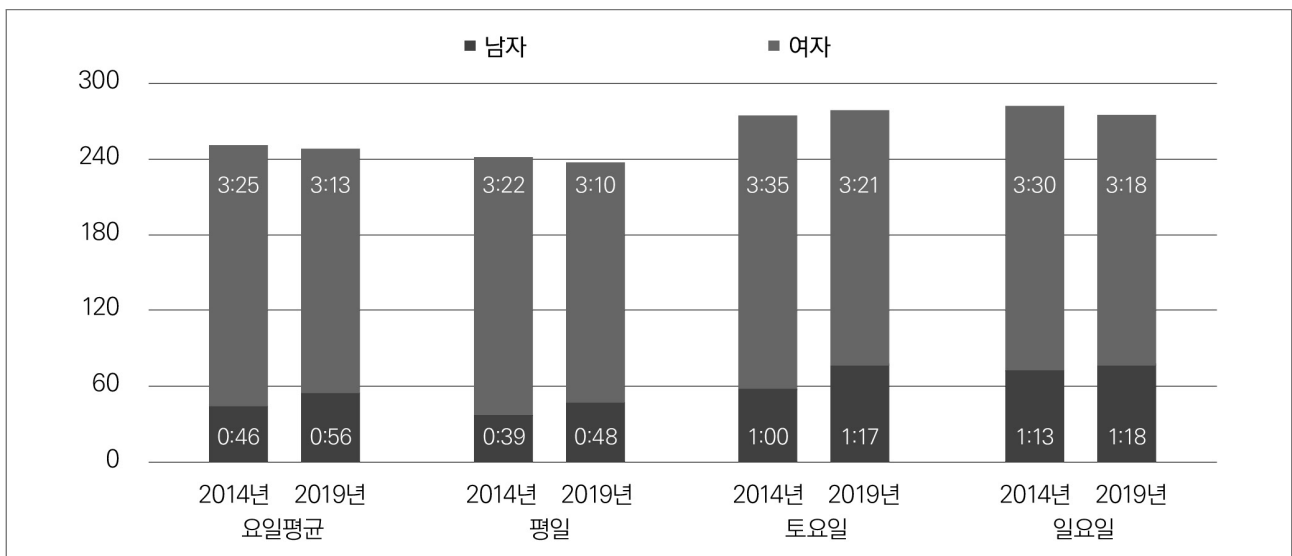
○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성별격차

-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무보수 가사·돌봄 노동은 ‘여성은 가정/무급노동, 남성은 노동시장/유급노동’ 등으로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가늠자로 기능해 왔음. ‘여성을 1차 가사·돌봄 노동 주체’로 여기는 성별역할구분 인식으로 인해 여성은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남성에 비해 가정 내 가사·돌봄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 성인남녀 가사·돌봄 시간의 요일 평균: 여성 3시간 13분, 남성 56분

〈 성별 가사·돌봄 시간(성인) 〉

(단위: 시: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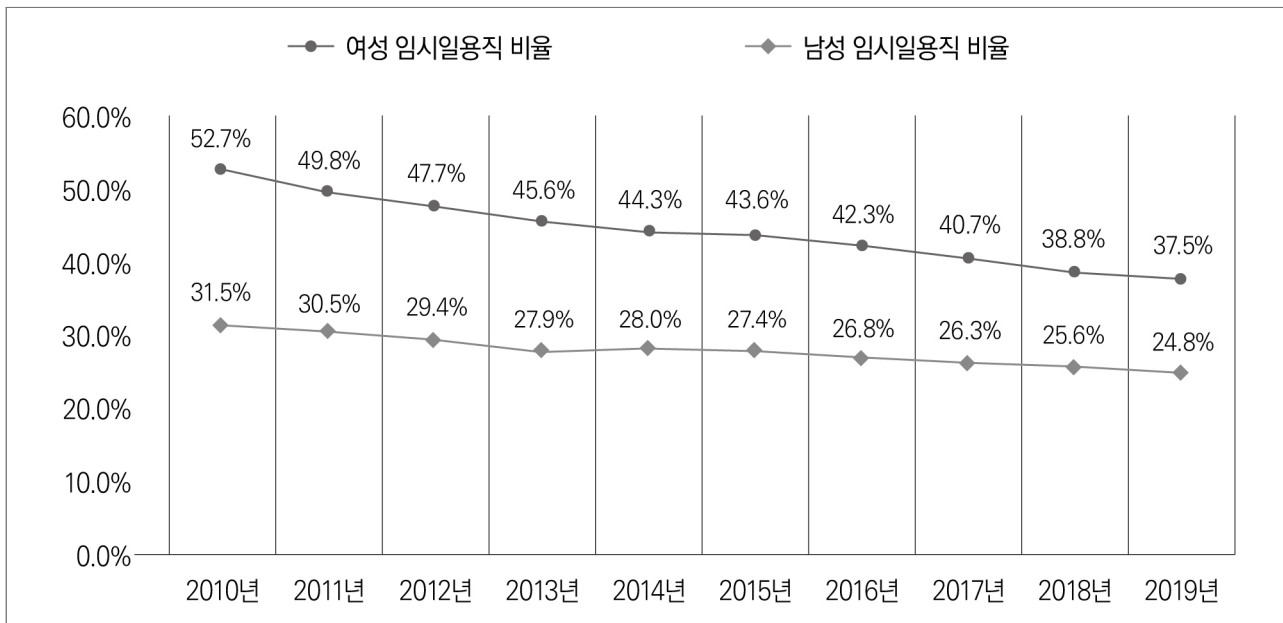
주 : 19세 이상 성인 대상. 가사·돌봄 노동시간은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항목을 합한 시간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이 상존

-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저임금·영세사업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성의 노동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야 함

* 여성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2010년 52.7%에서 2019년 37.5%로 지속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2019년 기준 12.7%p 높은 상황

〈 성별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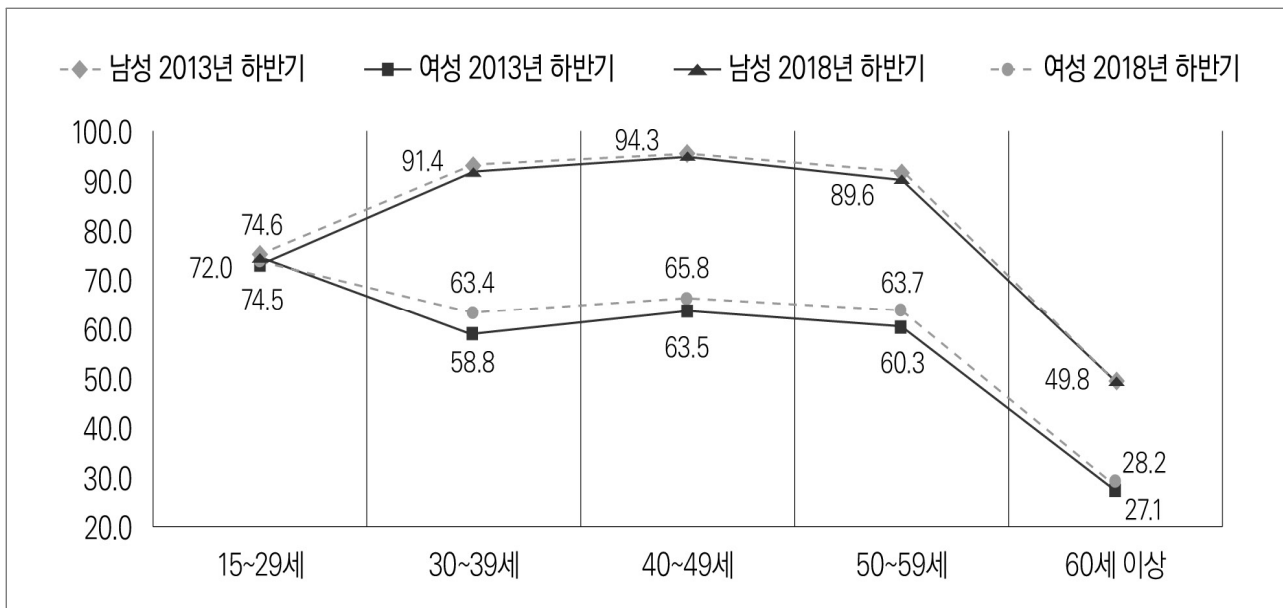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 이를 포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도 함께 살펴보고, 자녀출산·양육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력단절 현상의 변화 양상도 관리해야 함

〈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 (2013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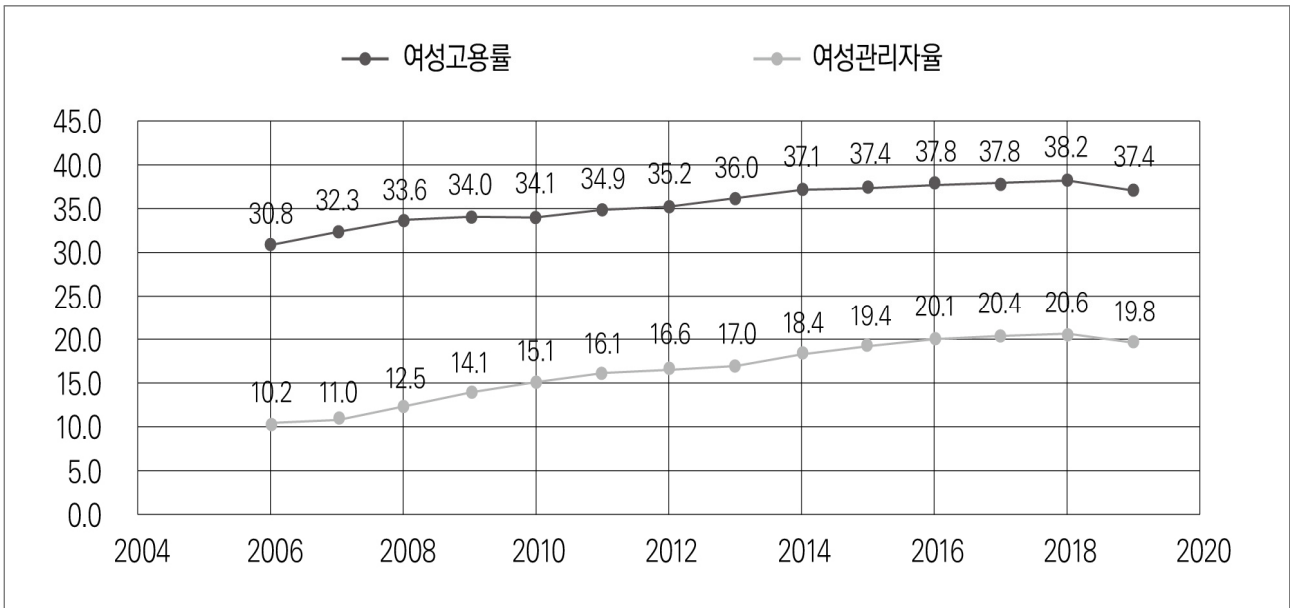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공공 및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 * 정치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성의원비율은 2020년 4월 기준 19%로, 이는 세계 평균인 25.1%(2020년 10월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임.
- * 기업에서 대한민국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018년도 한국의 여성 관리자(female managers) 비율은 20.6%로, OECD 평균인 32.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 변화 추이: 2006-2019 〉



출처: 고용노동부(2019), AA 남녀근로자현황 분석보고서

- 자연·공학계열을 전공여성 중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비율은 58.8%로 타 전공 계열의 여성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학기술분야로의 여성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 ICT산업관련 정책을 성평등 정책과 연계할 필요

〈 전공계열별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여성 현황(2018) 〉

(단위 : 명, %)

경제활동 현황 인력 전공계열	기혼여성(A)						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비율 (C/B)
	인력	구성 비율	비취업 여성(B)	구성 비율	경력단절 여성(C)	구성 비율	
자연·공학계열	1,108,014	21.2	468,265	22.0	275,469	23.5	58.8
자연계열	629,789	12.1	271,589	12.7	147,267	12.6	54.2
공학계열	478,225	9.2	196,676	9.2	128,202	10.9	65.2
의약계열	418,766	8.0	128,707	6.0	78,024	6.7	60.6
인문·사회계열	2,398,064	45.9	1,032,361	48.4	548,219	46.8	53.1
기타계열	1,297,381	24.8	501,545	23.5	270,023	23.0	53.8
합계	5,222,225	100.0	2,130,878	100.0	1,171,734	100.0	55.0

주 : 기혼여성 = 만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혼(유배우, 사별, 이혼) 여성

비취업여성 = 기혼여성 중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 즉 경제활동상태가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경력단절여성 = 비취업여성 중 육아, 결혼, 임신·출산,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 돌봄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만 25세 이상 64세 이하 기혼(유배우, 사별, 이혼)여성 중 최종학위(재학생, 휴학생, 중퇴자를 이전학위로 계산함)는 전문대 졸업생 이상만을 고려함,

기타계열은 예술체육계열과 교육(사범)계열을 포함.

자료 : 통계청,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재분석

2 비전 체계

목표

5

성평등 보장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여성의 성·재생산권과 건강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여성 소외 분야(과학기술 분야) 여성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ICT 분야 활용 역량 강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5-1]

여성과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1)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가부

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추진 배경 및 목적

- 대중매체·온라인 상 성차별적 표현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잔존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또한 여전히 높음
- 성차별 해소 및 신종 성범죄에 대한 대응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한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요구

■ 정책과제

-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청소년 대중매체 모니터단 구성 등을 통해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개선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등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초등 국정도서에 대한 양성평등 모니터링, 대학 교양 교과목 내 양성평등 교육 개설 권장 등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 진로교육법의 양성평등 내용 강화, 진로관련 교원연수 시 양성평등내용 포함 운영 등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제고
 - 학교의 비교원 인력 양성평등 교육 강화,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성차별 언어 및 표현 실태조사 실시 등 생활 속 성평등 실천
 - 남성 실천 모임 및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종사자,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 등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온라인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모바일 콘텐츠 확산

K-SDGs	지표명	현 수치	목표
세부목표 5-1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 2019: 41.7%	- 2030: 58.2% - 2040: 73.2%

[K-SDGs 세부목표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2)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사회 실현

여가부

①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

■ 추진 배경 및 목적

- 여성폭력 범죄는 증가세, 유형과 양상은 다변화
 -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익명성, 시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불법영상물 유포 재유포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한계
 - 정보통신 기술(ICT)을 매개로 하는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
 - 가정폭력, 친족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그루밍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과 강남역 사건, 여성 1인 가구 대상 성폭력 사건 등 여성 대상 불특정한 폭력 대응 필요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과 시스템 변화 요구
 - 피해신고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2차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조치를 통해 피해신고 의지 저하 및 위축 방지 필요
- 성평등한 조직문화 등 일상의 변화 요구

■ 정책과제

-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디지털 성범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여성폭력, 약물이용 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인터폴 등 국제공조 강화
 - 아동 청소년, 1인 가구, 장애인, 이주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 조치
-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범죄 유형별 사건 처리 지침 마련 및 사건 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한 초기 대응 강화
 - 수사 담당자 교육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통한 형사 사법 절차상의 2차 피해 예방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교육, 문화 예술, 민간 공공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신고 피해 구제 등의 체계를 마련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의 신고 활성화
 -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자립 등 서비스 지원 내실화 및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활동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 개발 및 활용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기술 등 개발·적용
-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성폭력 관련 형법 표제* 변경,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강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강화
 - * ('53) '정조에 관한 죄' →('96년~현재) '강간과 추행의 죄'→(변경)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
 - 여성폭력 관련 지원 역량 강화 및 방지정책 이행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통계 개발 추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5-2	(1)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 2017: 13.8%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 2018: 3.6%	- 2030: 지속 저감 - 2040: 지속 저감
	(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 2018: 9.2%	- 2030: 지속 저감 - 2040: 지속 저감

[K-SDGs 세부목표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3)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여가부·고용부

①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고용시장 진입에 있어 성별격차가 존재하고, 고용의 질이나 근로형태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
 - 여성 고용률은 '19년 57.8%로 남성 고용률 75.7%에 비해 약 20.0%p 낮은 수준(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64세 기준)
 -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여성은 45.0%(정규직 55.0%)로 남성 29.4%(정규직 70.6%)에 비해 높은 수준('20년 8월 기준,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도 성별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여성의 경력관리 및 고용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
 -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 대비 65.9%('1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주요 OECD 회원국(평균 12.9%)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큰 수준(OECD Data, Gender wage gap, 2020.10월 조회기준)

■ 정책과제

-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 과학기술분야, 농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 전 지방공기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확대, 남성 집중직종의 성별분리 모집 및 채용제도 개선
-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추진 등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 및 배상절차 마련

○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 성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사업장 대상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 부과
- 가사·돌봄서비스 공식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돌봄노동자 실태파악 및 처우개선 등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 여성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대상별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유형별 새일센터 단계적 확충, 여성창업 아이템 발굴, 창업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새일센터 기능 강화

②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장 수준인 반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음
- 기업현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임신·출산·돌봄의 사유로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며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는 저조한 실정
- 유연근무는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고 유연한 근무형태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실제로 활용은 미흡한 상황

■ 정책과제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초등돌봄 교실 내실화 및
- 단계적 확대를 통한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확대,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등을 확대하여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 육아휴직 허용 제외 동일사업장 근속기간 요건 완화, 육아휴직 사용 촉진제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단계적 확대 및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가사·육아 정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및 실효적 인센티브 발굴·확대
-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시상,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일·생활 균형 근로감독 강화 등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K-SDGs 세부목표 5-3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 2019: 28.9%	- 2030: 35.0% - 2040: 40.0%

[K-SDGs 세부목표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4) 여성 대표성 제고

여가부

①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정치 및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이 점차 확대되어 의사결정영역에서 여성참여율이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확대 노력과 이행관리 강화 필요
- 민간 기업에서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아 여성에게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
 - 기업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4.5%, 임원 중 여성 비율은 3.3%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정책과제

-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 목표제 시행, 국가·지방직 과장급,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관리자 여성 비율 확대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분야 적극적 조치
 - 여군 간부 및 여경 비율 확대 등 군인 및 경찰분야 적극적 조치
 - 교장·교감 및 국립대 교수 여성 비율 확대 등 교원분야 적극적 조치
 -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 등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제고
-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추진 등 기업의 경영 지원
 -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공개, 산업별 여성임원 확대 장애요인 등 관련 연구·조사 발표로 정책공감대 형성

○ 여성 리더십 함양 및 정치 역량 강화

-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공모사업 등 추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5-4	(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2020: 19%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 2020 •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 7.9% • 국가공무원(4급 이상) : 20.8% • 지방공무원(5급 이상) : 17.8%	- 2030: 100% - 2040: 100% 유지
	(3)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 2019: 19.76%	- 2030: 32.4% - 2040: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5-5]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보편적으로 접근을 보장한다.

(5) 여성의 성·재생산권과 건강권 강화

여가부

①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 추진 배경 및 목적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관련한 이슈는 여전히 여성에게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피임과 성관계, 임신 및 출산 선택 등을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전 생애에서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
- 성·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성과 재생산 관련한 보건, 정보, 교육을 법률 및 규정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정책과제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로 패러다임 전환
 - 국가주의적 인구정책이 아닌 여성의 자유권에 기반한 성·재생산 건강 권리 정책으로 전환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법 제도 정비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교육 정보 제공
 -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전 생애의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기혼 여성뿐 아니라 비혼 여성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임신과 출산, 육아 및 본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질제고 및 접근성 강화
 -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존중과 양질의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5-5	(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 수치 없음	- 2030: 제도 수립 - 2040: 제도 수립
	(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 수치 없음 (통계 구축 필요)	- 2030: 100% - 2040: 100%
	(3) 피임 실천율	- 2018: 82.3%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6) 여성 소외 분야(과학기술 분야) 여성 역량 강화

여가부·과기부

① 과학기술·ICT 분야 활용 역량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여성 소외 분야의 여성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여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정책과제

-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발굴·확충과 경력단절 예방·지원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인재 공동 발굴 등 여성 인재 후보군을 확충함
 - 경력복귀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복귀·대체인력 희망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복귀를 지원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극대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5-6	(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 2019: 남 94.4% 여 90.0%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2)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 2018: 19.3%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7)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가부

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우리사회에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필요
- 지방 각 지역에서 양성평등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의식 제고 요망
-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통계에 성인지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어 정확한 성평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

■ 정책과제

-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양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등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기반 마련
 -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평가 기능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주류화 교육 확대 및 분야별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성 주류화 제도 운영,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국 확산 추진
-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 공모사업 성과 확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협력 사업 확산 등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K-SDGs 세부목표 5-7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의견 수용률	- 2019: 85.2%	- 2030: 87.1% - 2040: 89.1%

목 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 여건 및 전망

○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 잠재력 둔화에 대한 대응

- 2019년 현재 국토의 거주지역 가운데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81.03%,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18.96%로 전망(통계청)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자 가구 증가,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구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및 가족형태 변화로 국토 정책의 목표와 전략 우선순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전망
- 1970~80년대 산업화·도시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혁신성장 지체와 국민안전 위협 우려
-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전체 산업단지 중 40%가 노후산업단지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저성장 지속에 따른 재정투자여력 감소로 도시재생, SOC 유지관리 등 기존 시설 이용의 효율화 요구 증가
- 쇠퇴도시 및 소멸위험 지역 증가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확대되고, 국가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삶의질·건강·안전 등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

○ 기후변화 대응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 요구 증대

-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재해 증가로 에너지 과소비형 공간이용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가 증대할 전망
- World Economic Forum(2019)은 미래 발생가능성과 파급력이 높은 글로벌 리스크로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완화·적응실패, 자연재해, 인공 환경 재해 등 환경요소를 들고 있으며, 에너지와 자원의 부족, 온실가스 국제기준 준수 요구 확대 등 환경위험 해소를 향한 현실적 압력도 증대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에서도 의료, 교육, 녹지, 문화시설 등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국내 시·도 지역 간 체감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2018년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미래 도시·국토상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로 삶의질, 친환경, 행복 등이 부각

○ 거주 만족도와 생활서비스 수준의 격차

-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증가로 총량적으로 주택부족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부족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103만 가구(5.3%)에 달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이 취약함
- 보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의 공급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편이며, 특히 주거유형에 따른 생활편의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로 생활서비스 수준의 공간적·계층적 불평등이 심각함

○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

- 1970~198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주택·건축물과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협,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저수지(96%)가 가장 높으며, 댐(45%), 철도(37%), 항만(23%) 등으로 노후화가 높은 수준
- 지하공간 개발 증가와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우려 증가, 지하시설물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통신구 37%, 공동구 25%, 하수관로 23% 외에는 낮으나, 20년 이상은 높은 편으로 향후 관리 필요가 큼
- 2000년대 이후 호우 및 대설발생 횟수와 폭염 등 이상고온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확대
-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대형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나 재해 대비의 통합적·협력적 관리체계는 미흡

2 비전 체계

목표

11

지속 가능한 삶이 이루어지는 안심 생태도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과 임대차시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관리 • 노후·취약 주거지 개선과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대중교통, 녹색교통의 확충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수단 분담률 제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
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확대와 민주적 갈등 관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활용
포용적 안전관리와 재난 회복력 증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체계 혁신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 • 안전취약계층 보호와 재난 회복력 확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폐기물 발생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도시자연 확충과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자연의 확충 •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자연 접근성 보장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과 임대차시장 관리

국토부

①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의 양적 부족 현상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은 여전히 미흡
-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저소득 가구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주거사다리 마련

■ 정책과제

- 생애단계 진전에 맞춘 임대주택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청년·신혼·고령가구 집중)
 - 청년층: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주거관련 정보·교육 제공
 -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 고령층: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 주택개보수 지원강화
 - 저소득·취약가구: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재난 피해주민 주거지원

②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주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 상승과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자가점유율은 50~60% 수준에 정체되어 있고, 저소득층(1~4분위)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하락
- 저렴한 부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부족하고, OECD 및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고율도 낮은 실정

■ 핵심 정책과제

-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 LH 지방공사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수요자의 생애단계에 맞춰 연평균 13만호 공급(준공기준)
 - 공공지원주택(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 연 4만호 공급
-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급분양주택 분양물량을 연평균 3만호로 확대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 확대

③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관리

■ 추진 배경 및 목적

- 그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공적규율 대상보다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 결과, 최대 513만 가구가 주거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임대보증금 보호수단도 강화

■ 정책과제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임대주택 등록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 수단 강구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④ 노후·취약 주거지 개선과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저소득·취약계층의 자가점유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낮은데다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게다가 비주택 거주자가 12.2~39.4만 가구, 지하·반지하·옥탑 거주자가 41.8~59.7만 가구로 추정될 정도로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가구가 여전히 존재
- 기후변화와 도시쇠퇴,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정주 공동체 조성 필요

■ 정책과제

- 노후·취약 주거지 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
 - 최저주거기준 개편·적정주거기준 도입, 주거실태조사 개선 등 적정한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노후·취약 주택 개량,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 단독·다가구주택 개보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개보수 모델 발굴·보급, 전문업체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전문업체 육성
 -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및 기존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문화 구축
 -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 간 소통 기반 제공
 - 실내흡연,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입주자 간 갈등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생활 문화 조성 및 분쟁조정 기준 마련 검토
 -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단지 설계를 적용하여 장애 없는 마을, 담장 없는 마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공간 제공

- 다문화가구, 고령가구 등의 소수자 및 사회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미래형 주거지 조성을 위한 주택 관리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를 통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및 친환경 건축자재·단지설계 R&D 추진
-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선, 모듈러 주택 및 스마트홈 기술개발 및 보급기반 확대 등 미래형 주택 공급 확대
-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1-1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2019: 5.3%	- 2030년: 지속 감소 - 2040년: 지속 감소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 2018: 2.99만호	- 2030년: 지속 확대 - 2040년: 지속 확대
	(3)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 집행액	- 2019: 119.0만 가구 1.6조원	- 2030년: 지속 확대 - 2040년: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2) 대중교통, 녹색교통의 확충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국토부·행안부

①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수단 분담률 제고

■ 추진 배경 및 목적

- 대도시권 광역·고밀화에 따른 교통혼잡의 광역화·상시화에 따라 교통혼잡비용 증가, 침두시 대중교통 공급부족 현상 발생
- 대중교통 이용자 눈높이는 높아진 반면 대중교통 경쟁력 및 편의성은 답보상태로, 긴 통행시간 및 환승불편 등 자가용 대비 편의성 부족

■ 정책과제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KTX 등 고속·대용량 철도 네트워크 및 광역급행버스(M-버스) 도입 권역 확대
 - BRT,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로 버스통행속도와 정시성 향상
 -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및 대용량 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증대
 - 광역·복합 환승센터 및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정비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도시지역 정기이용권 버스 노선 확대,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도입 확대
 - 출퇴근 통행수요 이외 고정적인 통행수요가 적은 산업단지 및 테크노벨리 대상 계약 노선버스 및 통근형 전세버스 투입 확대
 - 심야 시외버스 확대 및 도심 심야시간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도입
- 녹색교통 활성화
 - 그린웨이(녹도), 보행도 및 생활권 내 자전거 이용 기반 확충으로 환경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행 환경 개선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교통약자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목표를 장기적 관점에서 높게 설정·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 교통수단: 버스, 도시철도 및 철도차량 등의 수직손잡이 설치 확대,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등
 - 여객시설: 철도역·여객터미널 등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개선, 장애인 화장실 설치, 안내시설 설치
 - 대기시설: 버스정류장 턱 낮추기, 보도폭 확대, 점자블록 설치, 버스정보 안내시설 설치 등
 - 보도 시설·환경 개선 및 보행 우선구역 설치 운영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경기·광역시·그 외 지역별 저상버스 보급 목표에 따른 저상버스 보급 확대
 - 특별교통서비스 수혜 지역적·계층적 형평성 제고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1-2	(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2016: 44.6%	- 2030년: 지속 확대 - 2040년: 지속 확대
	(2) 저상버스 보급률	- 2018: 23.4%	- 2030년: 지속 확대 - 2040년: 50%
	(3) 자전거 수단분담률	- 2015: 1.43%	- 2030년: 지속 확대 - 2040년: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3) 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도시 계획

국토부·행안부

① 시민참여 확대와 민주적 갈등 관리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국토·도시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부응
- 분권화와 민간부문의 성장, 국민의 참여 요구 증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수립·집행 과정에서의 소통·참여 강화와 정책 체감도 제고

■ 정책과제

- 계획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
 - 민·관 소통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및 체계적인 운영과 시민 주도형 시정 참여 제도(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시민참여형 정책 플랫폼 구축) 추진
 - 시민참여형 정책 플랫폼 및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미래 국토상과 핵심 가치,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환경과 개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론 형성
 - 주요 이해당사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견 수렴, 미래 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미래 세대의 환경적 이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운영 검토
 - 국토계획 및 각종 중·장기계획의 모니터링·평가 과정에서 국민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환경영향평가 및 주요 환경허가 절차상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강화, ‘웹기반 환경영향평가 One-Stop 플랫폼’ 개발을 통해 이해당사자 등 국민에게 정보제공 및 의견개진의 장 마련
- 정책 갈등에 대한 민주적 조정·관리
 - 다양한 주체와 이념, 지역, 계층 등 복잡한 갈등에 대한 민주적 갈등해결 방식 강화와 협력 지원

- 갈등발생 확률이 높은 사안을 비롯하여 계획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예방·관리대책 마련
-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육성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민참여형 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 등)
- 환경위험시설 신규계획수립 및 시설 운영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환경위험시설 입지선정·관리위원회' 설치 검토
- 환경영향평가지 사업자 주관 공청회에서 지자체 주관 공청회로 전환, 사업자 주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자체 주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환 등 공공의 역할 확대 추진
-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갈등조정 사항의 이행처리 등을 포함한 지자체 환경업무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운영 강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1-3	(1)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 구축 통계 없음	- 목표치 설정 불가 (통계 미구축)
	(2)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 구축 통계 없음	- 목표치 설정 불가 (통계 미구축)

[K-SDGs 세부목표 11-4]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활용

문화재청

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활용

■ 추진 배경 및 목적

-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지속적 확대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계속 강화되었으나 세계유산 등재심사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세계유산별로 특화된 활용 콘텐츠 개발과 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

■ 정책과제

-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기록유산 등재 추진
 - 세계유산 자문·심사기구(ICOMOS, IUCN)와의 네트워킹 강화 및 협력 확대를 통한 유산 등재 노력
 - 세계유산 등재환경 평가에 기초한 대책 연구 및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한 등재 지원 고도화
 - 경쟁력 있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기등록 잠정목록의 점검·재검토를 통해 신청계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 세계유산의 보존·활용 강화
 - 세계유산 보존관리 실태 상시 점검 및 보존관리 지원 사업 예산 확대
 - 체계적인 세계유산 활용·홍보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준비, 연속유산의 통합 활용·홍보 프로그램 운영
 -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의 기록유산 보존 및 활용 지원으로 접근성 향상 및 기록유산 향유기회 확대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1-4	(1) 세계유산 등재건수	- 2019: 1건	- 2030년: 지속 확대 - 2040년: 지속 확대
	(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 2020: 45,253백만원	- 2030년: 지속 확대 - 2040년: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5) 포용적 안전관리와 재난 회복력 증강

행안부·국토부

① 재난대응체계 혁신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재난현장 대응체계(현장지휘체계, 정보통신체계, 자원동원체계 등) 미확립으로 초동 대응 실패 사례 반복
- 재난 발생 이후 중대 비상상황에 대한 지휘·조정·통제 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증진하고 재난안전 관리 인력들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 확충

■ 정책과제

- 비상상황 대응체계 혁신
 - 청와대, 중대본부장 관련 부처의 지휘·조정·통제 관계 등에 관한 역할 보완
 - 중대본(행안부)-중수본(재난관리주관기관) 역할 개선: 중대본은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및 지원 기능을, 재난유형별 중수본은 소관분야 대응·수습 기능을 수행
 - 육상·해상 긴급구조는 소방·해경 중심으로 수행하고 그 외 상황대응은 각 소관기관 담당, 지자체는 관내 행정기관을 통괄하는 통합지원본부 운영
 - 모든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화된 재난대응원칙」 제도화
 - 신종재난을 비롯한 재난관리 매뉴얼 및 위기징후 관리 평가체계, 위기경보 제도 등의 정비 및 지속적인 숙달 훈련을 통한 개선
- 육상·해상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재난현장 초기 대응체계 개선: 현장중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재난현장 신속기동 전담팀 신설
 - 육상 현장대응역량 강화: 소방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주도 국가단위 복합재난대응 훈련 실시, 재난대비 역량 강화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위험물질(HAZMAT) 특수사고 대응역량 강화

- 해상 현장대응역량 강화: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조직·인력·장비) 확충, 해양재난 구호훈련 체계 개선 및 고도화, 선진 민간해양구조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해상교통관제(VTS)구역 확대
- 해양 오염사고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스마트 해양오염 예방체계 구축, 해양오염방제 인프라 확충 및 대응체계 강화, 해양오염방제분야 민·관 협업 및 국제협력 강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모든 재난은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부족과 중앙의존적 태도로 대형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초동대응이 미흡함
-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조직·재정적 지원의 불충분 등으로 재난관리 전문성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어려움이 큼

■ 정책과제

- 지역단위 재난 위험성 분석 제도 도입
 - 지역안전진단시스템(행정망)을 통해 지자체별 안전지표 분석 및 맞춤형 진단, 취약점 개선 지원
 - 자치단체 분야별 사망자 감축 및 자체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추진
- 자치단체 재난관리 전담조직/인력 보강
 - 자치단체별 재난안전 현장지원 역할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안전 전담 조직(가칭: 지역안전센터 등) 도입 추진
 - 지역안전조직의 체계적인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침 마련
- 재난관리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지자체 역량 강화 유도
 - 기관의 구성요소별 평가에서 재난관리 단계별로 평가체계 전환(개인·부서·조직·네트워크 실적 → 예방·대비·대응·복구 역량)
 - 재난정보통신, 재난 경감대책 수립, 재난대비훈련, 교육, 재난상황관리, 비상기구 운용 등의 재난관리 핵심역량 수준 진단을 통한 지자체 역량 확대

③ 안전취약계층 보호와 재난 회복력 확보

■ 추진 배경 및 목적

-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 집단인 장애인·노인·어린이·외국인 등에 재난 위험이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
-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국민 안전권을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제도화라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재난 대응 못지않게 신속한 재난 회복과 공동체 복원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음

■ 정책과제

- 안전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안전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법」 및 하위 관령법령 개정
 - 국민안전 기본권 법제화를 위한 법령 제정 추진
-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맞춤형 보행안전 환경 조성
 - 노숙인국고지원(재활·요양)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지원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확대
 -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 화재·가스감지센서와 응급호출장비 설치 확대
 - 사회적 소외계층 및 피난약자 우선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화재취약계층 및 지역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추진
-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복구·지원체계 구축
 - 시혜적인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인권·피해자 중심의 재난지원체계로 전환
 - 생존자·유가족 등 피해자 분류별 보호조치, 인도적 시신 수습·인계, 걱정·신속하며 2차 피해 없는 배·보상, 아동·청소년·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특별 배려조치 마련 등
 - 재난원인조사의 독립성 보장 및 피해지원을 포함한 재난대응·복구, 수습과정 전반의 적정성 조사방안 마련
 - 대형재난 이후 체계적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 공동체 회복계획 마련
 - 국민소득 수준 상승에 부합하는 복구지원체계 개선 추진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총괄 지원체계 및 심리지원 강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1-5	(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 2019: 0.13명	- 2030: 0.1명 이하 - 2040: 0.1명 이하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 2019: 623.8%	- 2030: 일정 비율 유지 - 2040: 일정 비율 유지

[K-SDGs 세부목표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6)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폐기물 발생 억제

환경부·산업부·행안부·해수부

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 추진 배경 및 목적

- '16년 이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 좋은 일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연평균 환경기준($15\mu\text{g}/\text{m}^3$)에는 미달,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가 연평균에 견줘 높고 ($30\sim 32\mu\text{g}/\text{m}^3$)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불편 또한 심화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의 배출량 증가로 오존 등 이른바 선진국형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 증가

■ 정책과제

- 미세먼지 배출 저감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조기폐쇄, 설비·시설 개선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
 -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한 배출원 관리 강화
 - 노후경유차 퇴출 촉진 및 경유차 신차 판매 억제, 저공해차 구매 보조 등으로 저공해차 대중화시대 조기 실현
 - 선박, 항만, 건설·농업기계 등 비도로 수송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감축조치 추진
 - 휘발성 유기화합물, 공사장 비산먼지, 도심 건물 냉난방, 농업·축산 분야 배출 암모니아 등에 대한 배출원 관리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국민건강 보호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대응 연계 비상저감조치 강화, 고농도 발제 억제를 위한 계절관리제(12~3월) 시행
 - 지하 역사 미세먼지 개선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유치원·학교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및 민감계층 생활·이용시설 대상 설비 지원 확대

○ 미세먼지 및 대기질 예측·측정 기반 구축

- 위성·항공기 등을 이용해 측정한 미세먼지 3차원 입체관측 결과에 기초한 ‘대기질 예측영향 시스템(K-MEMS)’ 및 인공지능 예측시스템 구축
- 배출량 관련 정보의 산정·검증·분석·협력 등을 담당할 ‘국가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

○ 위해성 기반의 대기오염물질 감시 강화

- 대기오염의 위해성에 기반한 통합관리를 위해 집중 관측소 확대 운영, 미세먼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전구물질, 유해화학물질 동시 감시
- 개별 입지로 인한 난개발, 악취, 대기중 유해물질 배출 등이 심각한 비도시지역(계획관리 지역 등)의 대기 관리 모니터링(중금속 대기측정망) 강화
- 대기거동 특성, 인체 위해성 등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심사·평가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지정체계 확립 및 관리대상물질 확대, 위해성 감시물질 중 독성·농도·검출빈도를 고려하여 핵심관리 대상물질 선정·우선 배출허용기준 설정
- 오존의 지역적 영향 파악을 위한 전구물질 감시 및 예보기능 강화, 고농도 오존 발생 시 국민 비상대응조치 업그레이드

②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그간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의 감량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장별 자율적 목표 설정 및 목표 관리수단 부재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부족
- 폐기물 처리업자 중심의 자원순환 기술에서 탈피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장 중심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생산공정 내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술개발이 필요, 특히 폐기물 감량 방법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의 감량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 사업장 맞춤형 자원순환 성과관리

-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 등)를 설정한 후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 제조업체-재활용업체 사이에 재활용 기술 공동연구, 자원순환 파트너십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자원순환 실적 향상을 유도

○ 최적 감량기술 개발·보급

-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폐기물 저감·재활용을 촉진하는 R&D 추진, 중소 제조업체 위주의 기술 적용(설비 등) 지원
- 신규시설 설치부터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제도와 연계한 폐기물 저감·재활용 기술을 업종별 BAT에 반영

○ 산업계 폐기물 감량 이행 지원

- 업종별 자원효율 향상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한 공통 적용기술 개발 및 업종별 또는 기술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 공정 전문가, 자원관리 전문기업,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배출공정, 폐기물 특성 등을 고려한 폐기물 저감·재활용 컨설팅 지원
- 업종별 간담회 개최 및 우수 감량사례 홍보 등을 통해 감량기술 확산을 촉진하고 사업장 간 감량정보 공유 기반 마련

③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 추진 배경 및 목적

- 편의성 위주의 대량소비 문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커피전문점 등의 확산으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유통 포장 폐기물 발생도 급증하는 추세

■ 정책과제

○ 대체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

-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대상으로 1회용컵 제로화 추진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 확대, 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 사용 활성화를 통해 대체가능한 1회용 비닐봉투 대체
-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컵 뚜껑 등 현행 1회용품 규제 비대상 품목에 대한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추진
- 포장·배달용 플라스틱 음식 용기의 규격화·감량화 및 재질 개선, 재사용 등을 통한 단계적 배출 저감, 친환경 포장재로의 대체 방안 강구

- 불필요한 과대포장 근절
 - 과대포장 제한 규정의 집중정비 추진
 - 제품출시 전 포장검사 의무화를 통한 과대포장 제품의 시장출시 원천 차단
 - 유통(운송) 포장재 감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법적 제한기준 마련
-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감량 강화
 -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목표 설정·관리
 - 배출자 부담 강화를 위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보급 확대 및 홍보·교육 추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1-6	(1) 미세먼지 나쁨일수	- 2018: 59	- 2030년: 지속 감소 - 2040년: 지속 감소
	(2)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 2017: 25.14 $\mu\text{g}/\text{m}^3$	- 2030년: 지속 감소 - 2040년: 10 $\mu\text{g}/\text{m}^3$
	(3)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 2018 • 생활폐기물 56,035(톤/일) • 사업장 일반폐기물 167,727(톤/일) • 건설폐기물 206,951(톤/일)	- 2030년: 지속 감소 - 2040년: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7) 도시자연의 확충과 접근성 강화

환경부·국토부

① 도시자연의 확충

■ 추진 배경 및 목적

- 도시자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도시생태축 등의 공간권역 설정 부재와 보호지역 중심 정책, 비도시지역의 난개발로 도시 내·외 자연 훼손지역이 계속 늘어나 신규 녹지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

■ 정책과제

- 도시생태축 구축과 그린인프라 형성
 - 국가·광역 생태축과 연결한 도시지역 단위 생태계 중요지역을 설정하고, 생태계 상황에 맞는 보전·복원·연결계획 수립
 - 도시 내 자연, 녹색공간을 그린인프라로 제도화하고, 지능화를 위한 정보수집 및 스마트 기술 활용 등을 토대로 기능 최적화 추진
 - 인구감소와 기반시설 수요 축소로 생겨나는 도시 내 유휴 및 방치부지의 재자연화를 통해 생태환경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원의 강화
 - 그린인프라 대상 토지이용, 토지매수, 지역권, 트러스트 등의 지원정책수단 강구
- 생태 연결성을 고려한 도시자연 확충
 - 파편화된 도시자연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거점녹지, 도시 숲, 수변녹지, 생명농업녹지, 옥상녹지 등 도시 속 자연 확충
 - 소규모 생활권 마을습지, 주거 등 소멸 위험지역, 농지, 임야 복원 및 관리 등 생활권 사각지대 관리 확대
 - 생활권 생태계 우수지역 발굴 및 인벤토리 구축 등 추진
 - 도시화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지역의 자연 연결성 회복을 위해 친환경 빗물관리기법 도입, 투수면적 확대, 저류기능 향상, 도시생태계 회복력 증진 등을 고려한 자연복원 면적 확보제 도입

②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자연 접근성 보장

■ 추진 배경 및 목적

-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의 환경 서비스 향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연생태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기반 부족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누리는 환경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정책과제

- 수요자 특성에 맞는 접근성 지표 개발 및 적용
 - 연령(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도시자연 접근성 지표 개발 및 적용
 - 10분 거리의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의 접근성 요건을 적용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질적 관리 강화
- 그린웨이(녹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확충
 - 도심지 내에 공원, 녹지 등과 건물의 옥상정원, 공개공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그린웨이(녹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가로수 등을 확충하여 도시자연에 대한 접근성 개선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1-7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2018: 10.1㎡	- 2030년: 12.0㎡ - 2040년: 15.0㎡
	(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 2019: 42.8%	- 2030년: 지속 확대 - 2040년: 지속 확대

제 2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주요 정책과제

II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 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1 여건 및 전망

○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고착화

- 한국의 인구규모는 2020년 현재 5,178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0년대 후반에는 4,000만 명 이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 역시 계속 하락하여 200년대 이후 초저출산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함
-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데 반해,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규모는 2025년 1,000만명, 2067년에는 1,82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성장 잠재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저성장 추세 또한 고착화되고 있음(2019년 경제성장률 2.0%)

○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직업구조 변화

-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급격한 사회변동이 추동할 것으로 예측됨
- 한국의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는 2019년 현재 469~538천명 수준으로 추산(한국고용정보원)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경제의 확산으로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 추세가 2006~2015년 평균보다 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됨

○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

-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초 30년(1912-1941)보다 1.4℃ 상승했으며, 2011-2017년에는 연평균 기온이 13.0℃에 달하는 등 상승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명피해 규모는 20.5명, 자연재해에 따른 연평균 피해액 또한 3,517억 원에 달함

- 서울을 비롯한 국내 주요도시들의 대기오염 농도(미세먼지 기준) 또한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아열대성 전염병을 비롯해 곤충·동물매개 전염병의 해외유입 및 국내발생 사례 또한 계속 보고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대
 -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 기관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에 관한 어두운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 또한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에서 -2.0%로 예측
 - 코로나발 경제침체로 모든 연령계층에서 고용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관광 및 서비스업 침체로 인해 취업자수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일자리 안정성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일자리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히 요구됨
-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 등 지표상의 소득불평등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고소득가구의 자산소득 집중도가 심해지면서 자산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분배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음
 - 노인, 여성, 장애인, 여성 가구주, 한부모가구, 1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절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 또한 2016년 기준 10.3%에 달함

2 비전 체계

목 표

8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포용적 성장

추진 전략	추진 과제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마련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비정규직 감축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전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성차별 없는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 없는 일터
취약집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청년 구직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안전한 일터 조성 • 일·생활 균형의 확보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1)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마련

기재부

①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및 목적

-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등으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생계 위협요인을 완화함으로써, 발전의 혜택을 온 사회가 골고루 나누는 성장방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정책과제

-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 반등
 - 민간·민자·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 소비·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 도모
 - 분야별 수출 지원 및 수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출 반등 견인
 - 코로나19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한 경기 불확실성 최소화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경제·금융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가동, 가계부채·금융·외환·부동산 등 경제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등)

○ 혁신성장 성과의 가시화

- 데이터경제,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반도체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
-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통한 기존 주력산업 구조혁신 가속화
- 서비스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한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유망 서비스 분야 육성방안 제시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지속 발굴 등 국내공급 생태계 강화, 핵심 전략품목별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실행

○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성장

- 생애주기·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고용친화적 재정운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상생형 지역자리’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의 발굴·지원
- 복지수요 증대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보육·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보건-복지, 주거-돌봄 등 맞춤형 융합 돌봄 서비스 발굴 및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마련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장애인일자리 확대,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주거·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기반 확충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 대비와 생산성 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K-SDGs 세부목표 8-1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 2019: 2.0%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2)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

고용노동부

①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자동화·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 등에 따른 고용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생겨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
- 경제의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경제침체가 맞물려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제공’에 중점에 둔 사회보장 정책의 필요성 증대

■ 정책과제

-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 확대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 확대,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 가입 활성화
 -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 검토
-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근로빈곤층(중위소득 50%이하), 청년층(중위소득 120%이하)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취업 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실업부조)’ 시행
 - 구직의지가 높은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수급자를 중심으로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실업자·무급휴직자 대상 교육훈련 지원 확대
 - 취약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1단계: 상담·지원, 2단계: 직업능력 향상, 3단계: 취업알선) 지원 확대, 마지막 3단계에 진입한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제조업 둔화·기술변화 등으로 인한 40대 고용부진 해소 지원, 직업훈련-체험-채용을 연계한 훈련·교육과정 확대, 생계부담 해소와 경력전환 지원 확대 등

- 청년·신중년·노년의 생애 특성에 맞춘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지원 규모 확대 및 대상 직무 범위 확대
-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도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지원

② 비정규직 감축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고용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

■ 정책과제

- 비정규직 감축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적 해소 추진
 -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 관련 정책적 지원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 전환자 처우 개선 및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정규직 고용원칙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지원 확대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방안 마련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 근절
 - 개정 파견지침의 현장 안착 및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한 비정규직 활용 질서 마련
 -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의 전문성 제고 및 심층 컨설팅 지원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8-2	(1) 인구집단별 고용률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 2019: • 성별, 연령집단별 61.5% • 장애인 34.9%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 2019: 36.4%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8-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3)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혁신 지원

중기부

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

■ 추진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 확산, 오프라인 소비 감소 등 변화로 소상공인 대응방안 필요
-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회안전망 마련 및 위기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 정책과제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 확충
 - 매출 급감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설
 - 폐업(예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기 지원 확대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 지원하는 ‘리스타트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소상공인 영업부담 경감 및 위기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 임대료·전기요금·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부담 경감
 - 의무휴업일 적용대상 확대(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 복합쇼핑몰)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 사례 발굴·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운영
 - ‘골목형상점가’ 및 지역 소상공인 보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 위기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진단·지원체계 마련: ‘中企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 도입, ‘기업비즈니스센터’ 확대 설치·운영, 제조혁신 바우처사업·기술닥터제 등

②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추진 배경 및 목적

-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나 고령화, 자본력 한계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이 다수 존재
- 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디지털 기반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및 새로운 경쟁력 확보

■ 정책과제

- 비대면·디지털·그린 등 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
 -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 글로벌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창업·벤처기업 250개를 선정, 전주기 맞춤형 지원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육성
 - 녹색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R&D, 사업화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
 -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발굴, 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AI 교·보육 및 국제 연계 지원 등
-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적 기반 확충
 -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혁신기업 지원 인프라와 교통·주거·문화 등 정주여건이 결합된 지역 혁신 거점 조성
 - 혁신창업 클러스터, 해외 스타트업 거점(K-스타트업 센터), 캠퍼스 혁신파크,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한 창업·성장 인프라 제공
 - 기술창업 플랫폼(TIPS)을 통한 민간 주도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혁신기업 및 융·복합 분야 금융지원
-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중소제조업의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인프라 확충: AI 제조 플랫폼(KAMP), AI 표준모델 등

- 데이터 기반 스마트제조 촉진, 확산을 위한 규제완화 및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 추진
- 스마트 제조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 시행
- 첨단 ICT를 활용, 전통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서비스 도입 촉진

○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통시장·디지털 상권 육성

-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 5만개 보급 확산
- 소상공인의 스마트상점 전환 촉진을 위해 맞춤형 디지털 교육,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원 인프라 구축
- 디지털 배송·결제·판매 등이 접목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복합체험판매 라운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③ 전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글로벌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제조업)·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혁신 및 수출 지원, 소상공인 판로 확충을 통한 매출증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정책과제

-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및 R&D혁신
 - 스마트공장 고도화
 - 제조공장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 생태공장 보급·확산
 - 소공인 집적지역에 대한 혁신성장 거점 확대 구축 및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통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특허기술에 대한 전략적 사업화 지원 강화
-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
 - ‘K-라이브커머스’ 구축 및 O2O(Offline to Online)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제품 판매 촉진

- V-커머스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관광명소화 및 대국민 참여형 행사 추진
- 상품권 및 소비쿠폰 발행, '상권 르네상스 사업' 확대 등을 통한 골목상권·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기반조성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8-3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	-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기준 확정 필요	- 2030: 안정적 유지 - 2040: 안정적 유지
	(2) 창업기업 수	- 2019: 1,285,259	- 2030: 안정적 유지 - 2040: 안정적 유지

[K-SDGs 세부목표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4) 성차별 없는 일터

고용노동부·여가부

① 성차별 없는 일터

■ 추진 배경 및 목적

-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세대별·성별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청년실업, 근로빈곤 확산 등과 같은 갈등 요소로 인해 사회통합 및 연대가 저하되고 있음
-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보험이 시작된 이래 여성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OECD 평균 및 남성과 견줘서는 낮음, 특히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하고 고용 형태, 임금 등 근로조건, 승진 전망 등에서의 차별 또한 여전함

■ 정책과제

- 노동시장 격차 완화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상시 지속, 생명 안전 업무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 민간부문에도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산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고용개선 추진, 파견지침 안착 지원과 기간제·하내하도급 가인드라인 개정 등을 통한 규제·감독 강화
 - 공시된 성별 고용정보를 활용한 성별격차 현황 공표 및 인사담당자 등 교육을 통한 고용상 성별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사회 각 부문에 여성노동자 및 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적용대상 확대 검토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확충, 대체인력 지원강화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폴리텍,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부가가치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등 재취업 지원 강화
- 아동양육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아동수당 지급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K-SDGs 세부목표 8-4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남녀 임금격차	- 2018: 67.8%	- 2030: 85.5%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8-5]

이주노동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5) 취약집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청년 구직난 해소

고용노동부·법무부

①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에서 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권침해 및 성범죄, 경제·육체적 부당행위로부터 보호와 구제에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 특히, 농축산어업과 예술흥행분야 등 취약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시급한 실정

■ 정책과제

-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 입국 전 기초소양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 입국 후 산업안전 및 관련 법령 교육 강화
 - 고용허가제 관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해 외국인 인력배정 점수제 관련 규정의 가점·감점 항목 조정 추진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및 보급,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 인권·노동단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인권침해 등을 당한 피해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 허용, 성범죄 전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 등
-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 신규 입국 농축산어업 외국인근로자 대상 범죄피해예방교육 시행
 -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 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 통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자문단 운영, 외국인 고용 해양·수산 사업장에서의 육체·경제적 부당행위 집중 단속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에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도, 최소 기준 미충족 여부를 신규인력 배정 기준으로 반영

○ 예술흥행 종사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강화

- 예술흥행자격 소지자에 대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시 인권침해 예방교육, 인신매매 피해 구제절차 안내 등 실시
- 인권침해 사전 인지 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업무 처리
-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에 주거, 상담, 의료·법률 및 귀국 지원 서비스 제공
- 업소·공연기획사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행

②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계속된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청년세대의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고, 이는 청년세대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가정형성의 지체와 출산율의 저하라는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

■ 정책과제

○ 청년 취업 지원 확대

- 지역 노·사·민·정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으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가능성 확대
-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 일자리정책 정보 제공, 취업, 창업, 복지, 주거, 금융 등 청년정책 안내 및 상담
- 산업계(기업·협회) 주도 맞춤형 청년 직업훈련 신설

○ 청년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S/W 개발자 등 신규 직종의 노무 제공 원칙을 규정하는 표준 계약서 제정 추진
-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지속 확대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 확대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근로빈곤층(중위소득 50%이하), 청년층(중위소득 120%이하) 등의 취업 촉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8-5	(1)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 2019: • 외국인 65.3% • 귀화허가자 64.8%	- 2030: 안정적 유지 - 2040: 안정적 유지
	(2)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 통계산출식 개발 필요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6)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고용노동부

①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및 목적

-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노동자 권익 구제 강화

■ 정책과제

-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및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노력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위상·기능 강화를 통한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
- 노동존중인식 확산
 - 노동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학교·민간단체 대상 교육지원 인프라 확대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진흥 활동 강화
 - 범정부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관별로 산재한 노동교육의 유기적 연계 추진
- 취약근로자의 권리 보호
 - 저임금 노동자 지원 강화 및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
 - 산업·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금' 설립 및 사업장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
 - 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한 체당금 제도 개편·시행과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노동인권 사각지대 등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 추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② 안전한 일터 조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특수형태 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의 정책화가 진행되었으나, 적용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여 제도개선의 효과가 작음
- 저성장 기조 및 경제침체로 위축될 우려가 큰 저임금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 역할 필요

■ 정책과제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특고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방문·돌봄, 화물차주, IT업종 프리랜서 등 특고·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고위험·저소득 직종(퀵서비스, 택배기사 등)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료 한시 경감 추진
 - 노사정 협의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플랫폼 노동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마련
- 원·하청 안전·보건 공생협력 지원
 - 100인 이상 모기업 및 사내·외 협력업체의 공동 재해예방계획 수립 지원
 -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위험성평가 등 산재예방활동 지원시 기술 지도 등의 정부 지원
 - 하도급 산재발생에 대한 책임이 원청에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요율 산정시 하도급 산재발생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 건설업-추락, 제조업-끼임 등 주요 위험요인 중심으로 집중 감독, 사업장 패트룰 점검과 감독 연계 등 현장 중심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귀책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 작업중지 범위·해제절차 지침,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도 지침,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가이드,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등의 사업장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중소기업장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확대

③ 일·생활 균형의 확보

■ 추진 배경 및 목적

- 연간 노동시간이 2014시간(17)에 달할 정도로 긴 장기간 근무관행과 비효율적인 직장문화를 쇠신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노동환경 창출 필요
- 서비스산업 발달로 급증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와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운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현장 계도 및 지원 확대
 -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신속 추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 해소
 -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안착방안 마련, 희망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과 연계한 현장 지원
-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통한 제도 안착 지원
 - 일·생활·제도·지자체 관심도로 구성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매년 산출·발표하여 지역별 일·생활 균형 정도를 파악
 - 중소기업이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하게 이행할 경우 정부지원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확대 실시

○ 노동자 건강 지원

-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건강서비스 확대를 위해 ‘분소’ 순차적 확충 검토
- 300인 이하 사업장의 감정노동자 등 마음건강 치유가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
- 감정노동자의 마음건강,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 지원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등을 위한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8-6	(1) 사고사망만인율	- 2019: 0.46%	- 2030: 0.22% - 2040: 지속 감소
	(2) 전체 재해율	- 2020.3: 0.14%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목 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1 여건 및 전망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그간 과학기술의 성장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주력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1년 5.7%에서 2015년 5.3%로 약화되는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신흥국 등장으로 인해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저하되고 있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스마트화와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제고해야 할 필요 증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유전공학 및 의료기술, 기후변화적응기술 등과 같은 혁신기술·서비스의 사회적 확산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 성장동력과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
- 과학기술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R&D의 전략성과 혁신 유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 저탄소 자원순환형 경제로의 전환

- 한국은 기후온난화 속도가 세계평균보다 높고 기후피해비용도 2020년 3.6조원에서 2050년 6.9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른 국가보다 클 것으로 예측됨
-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에 달하는 제조업 비중과 자원·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생산구조를 감안할 때, 제조업 및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이 시급히 요구됨
-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중심의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함, 2000년대 들어 둔화하는 듯 하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단위가 OECD 36개국 중 33위에 그치는 등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도 더딘 상황
- 자원효율적 생산공정의 확산과 에너지 절감기술의 보급, 자원순환성이 높은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생산으로의 전환이 필요

○ 디지털 전환 대응과 디지털 포용 실현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산업·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됨
-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ICT 환경변화와 초연결·초지능 사회로의 변모,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펼쳐지는 디지털 전환이 겹쳐지면서, 교육·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디지털화 역시 빠르게 진척되고 있음
-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 접근수준(91%)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기본적 정보 역량수준(51.9%)과 활용수준(65.3%)은 여전히 저조한데다가, PC·인터넷 중심의 정보 활용 교육이 모바일·지능화로의 정보화 패러다임 전환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기반 확충 및 활용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2 비전 체계

목표

9

지속가능한 혁신적 성장

추진 전략	추진 과제
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디지털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교통 이용편의 증진 •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실현
산업 다양성의 확보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금융 •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의 중추로 육성 •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응 기반 구축
혁신성장 동력 및 신기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과학기술 개발 • 혁신성장동력 육성 •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고도화
R&D 투자의 혁신과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R&D 투자시스템 혁신 •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자원·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생산구조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분야 자원생산성 제고 • 에너지 고효율 산업으로의 전환 •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9-1]

대다수 국민이 정보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디지털 포용

국토부·통계청·과기부

①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교통 이용편의 증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도로, 철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교통망의 골격을 형성하였으나 교통인프라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견줘 취약, 특히 도로 연결성, 철도 밀도 불충분 등으로 지역 간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 격차가 큼
- 교통서비스 이용자의 통행패턴 변화에 따라 이용자 중심으로 국가교통망을 재편하고 교통안전, SOC 노후화, 지역불균형에 대비할 필요 증가

■ 정책과제

-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
 - 고속 교통(철도·도로·항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 도로 단절구간의 연결, 기존 철도의 전철화·고속화, 간선·지선 버스노선 확충 등을 바탕으로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 구축
 - 기존 도로 정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환승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고속도로 IC, KTX 정차역 등 고속서비스 결절점과 연결성 강화
 -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 교통수단별 연계 강화를 통해 교통낙후지역의 접근성 개선, 모바일 플랫폼 정보서비스를 통한 최적 접근방안 제공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국 주요 지점 간 교통량과 효율성 평가를 토대로 수요 기반 교통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검토

○ 도로 네트워크 보완 및 효율적 운영

- 교통수단간 연계 강화, 도로망 단절구간 보완 및 연결관리, 수도권 내 교통혼잡 개선 등의 변화된 교통 요구를 반영한 국가간선도로망(7×9+6R) 계획 개편
- 국가도로망의 권역별 통합운영관리 체계 구축
- 국가도로망의 이동성, 접근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도 및 국지도 도로망 네트워크의 재편 및 보완

○ 교통서비스 혁신을 통한 교통이용자 편의 증진

- 실시간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교통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다양한 교통수단과 모바일 플랫폼을 결합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확대
- 광역알뜰카드 전국 확산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용 교통수단, 이용기간, 이용 시간대 등의 수요자 이용행태를 고려한 요금체계 개편 검토(다양한 할인권·정기권 등의 도입)
- 교통카드,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대중교통 노선, 배차 조정 시스템 개발

②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실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로 매년 지속 증가 중이나, 정보 접근(91.7%)에 비해 여전히 정보 역량(60.2%)과 활용(68.8%)은 여전히 낮은 수준(2019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 코로나19로 무인·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전면화 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일상 속 불편을 넘어 사회·경제적 격차까지 확대될 우려
- 이에 따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교육장소에 접근하고, 모바일·실생활 중심 실습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 체계 개편 필요

■ 정책과제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
 -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에 고성능 WiFi 신규설치, 통합관리센터를 통한 공공 와이파이 품질관리 강화
-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정보 역량 강화 교육
 -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민센터·도서관·경로당 등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배움터」 매년 1,000개소씩 운영
 - 교육대상을 취약계층→국민 누구나, 교육장소를 복지관→주민센터, 경로당 등 생활공간, 교육내용을 PC→모바일·실생활 교육으로 개편
 - 스마트폰 등 기초 작동법부터 모바일 금융, 기차표 예매, 인터넷 쇼핑 등 디지털 생활, 스마트 오피스 등 디지털 중급까지 수준별 교육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9-1	(1) 도로 보급률	- 2019: 1.5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 2019: 69.9%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2) 산업 다양성의 확보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중기부·금융위·산업부·과기부

①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금융

■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계·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담보·보증 중심의 보수적 영업 관행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기능이 여전히 부진
-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다양한 글로벌 이슈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타개를 위한 금융 역할이 필요

■ 정책과제

- 기업금융 여신시스템 혁신
 - 기술력·미래 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여신평가방식 전면혁신
 -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심사기법, 신상품을 도입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 확대
 - 기업 다중분석 DB, 상거래신용지수 등 기업의 영업력 미래 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정책금융 지원 강화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수요별로 종합적·적극적으로 금융지원
 - 협력관계가 있는 복수기업군에 대한 공동보증 프로그램,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 등 새로운 금융상품 발굴·확산
 - 혁신·벤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증공급 체계 효율화를 추진
 -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자금, 산업구조고도화와 환경안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공급
 - 소·부·장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 및 투자기관, 기업,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오픈플랫폼」 구축

-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황 평가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가동, 정상화 자금 지원 및 임대료 등 비용부담 경감, 행정절차 단축(경영악화 단계), 채무조정 및 재기자금 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맞춤형 상품 공급

②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의 중추로 육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국제 경쟁력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R&D 확대와 지원체계의 전략적 배분·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 필요

■ 정책과제

- 기업 친화적 R&D 투자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효율화
 - 중소기업 전용 정부 연구개발투자 확대
 - 중소·벤처기업 대상 R&D 지원체계를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진입장벽 완화, 기획+개발+사업화의 패키지 지원
 -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중심의 연구개발 세제감면 등 R&D 간접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연구개발투자 확대 유도
 - 중소기업 R&D 사업의 관리체계를 기술혁신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전환
- 중소·벤처기업 우수 인적자원 확보 지원
 - 정부 연구개발사업-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연계 및 4차 산업혁명 계약학과 확대 등 산·학 연계 강화
 -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벤처기업 취업 연계형 사업 확대 및 취업자 대상 정주여건 개선
 - 기업부설연구소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체계 강화
- 우수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전략·원천기술 개발 및 수출시장 다각화 등을 지원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 기술력 있는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지원 지속확대 및 기술규격 상호인정협정(MRA) 필요분야 발굴·확대

③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응 기반 구축

■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람·사물·정보가 광범위하게 연결되고 고도화된 정보처리 지능의 활용이 대중화되는 초연결·초지능 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 이후 출현하는 비대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료·군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디지털인프라 강화

■ 정책과제

- 인공지능 기반기술 확보
 - 현 인공지능 기술의 학습능력 및 활용성을 개선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 확보
 -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산업화 로드맵 마련, 각 분야별 인재확보 계획 수립
 - 양자컴퓨팅, 뉴로모픽컴퓨팅 등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기술개발
 - 지능형컴퓨팅 반도체 등의 부품 및 디바이스 확보, 임베디드 인텔리전스 컴퓨팅 SW 기술 확보
-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구축
 - 5G 및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확대, IoT 서비스 확산 등을 통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 5G·IoT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간이 창의적으로 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 자율지능, 고신뢰, 저전력, 초저지연 네트워크 등 초연결 지능정보사회 실현에 필요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기술 개발
 - 초연결 서비스 확산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대책 및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 데이터 공유·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민간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산업 전반에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위한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개방
 - 신산업 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방 표준화 체계 수립,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도 확대
 -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 대상별 데이터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데이터 유통·거래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집중 육성

-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 모든 초중고에 고성능 WiFi망, 교원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설치
 -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CC)의 형태로 개발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 및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 민간 직업훈련기관 대상 온라인 훈련 전환 콘텐츠 제공,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임대비(LMS) 지원

- 비대면 산업 육성
 -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통한 스마트 의료체계 구축
 - 건강취약계층 대상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대상 웨어러블기기 보급·질환 관리 등 돌봄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대상 원격근무 도입을 위한 화상회의, 재택근무 및 컨설팅 이용 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 밀집 거점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영상회의 품질 향상 및 보완기술, 업무관리 SW 등 개발 지원
 -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및 구독경제 시범사업 추진, 5G·AI 기반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공방 구축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9-2	(1)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 현재 통계 미구축	- 목표치 설정 불가 (통계 미구축)
	(2)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 2019: 168,693억원	- 2030년: 지속 증가 - 2040년: 지속 증가
	(3) 산업집중도	- 2015: 50%	- 2030년: 지속 감소 - 2040년: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3) 혁신성장 동력 및 신기술 확보

과기부·산업부·중기부

① 중점 과학기술 개발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유전공학 및 의료기술, 기후변화적응기술 등과 같은 혁신기술·서비스의 사회적 확산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 성장동력과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

■ 정책과제

- 중점과학기술 선정 및 투자전략 수립
 - 경제·사회적 가치가 높아 국가 차원의 중점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중점과학기술 선정(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준 11개 분야, 120개 세부기술)
 - 기술별 산업화 속도, 민간 연구개발 역량,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적 기여도, 혁신성·도전성, 정책수요 등의 분석을 통해 유형별 정부 역할모델 및 투자전략 수립
- 시장과 민간역량을 맞춤형 정부역할 정립·이행
 - 산업화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기술경쟁력이 높은 기술 분야에서 제도개선, 인력양성, 후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조력자 역할)
 - 산업화 속도가 빠르나 민간의 기술경쟁력이 낮은 기술 분야에서는 공공연구기관 등을 통해 시장진입에 필요한 실용화기술 개발·공급 (기술공급자 역할)
 - 산업화 속도가 느리나 민간 기술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는 연구인력 유지 정책 추진 등의 시장 및 생태계 조성자 역할 수행
 - 산업화 속도와 민간의 기술경쟁력이 모두 낮은 분야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기초 연구인력 및 신진 연구자 양성에 나서는 등 장기 기술개발자 역할 수행
- 기초과학 분야와의 상호교류·협력 강화
 - 중점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분야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해당 기술 및 기초과학분야 역량의 동시 강화

- 중점과학기술 분야의 사업기획, 수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관련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자, 학회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② 혁신성장동력 육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혁신기술·서비스의 보편화와 포스트 코로나 사회 도래로 경제·산업, 의료·건강, 금융, 교육, 재난·안전관리 등 사회생활의 전면적인 변화 전망
- 혁신적 기술·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신서비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규제를 국민적 공감대 아래 정비할 필요

■ 정책과제

- 맞춤형 혁신성장동력 육성전략 마련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동력 분야(13개)를 조기상용화분야와 원천기술확보 분야로 유형화하여 맞춤형 지원·육성
 - 5년 내 상업화가 가능한 조기상용화 분야는 제도개선·실증·공공수요·세액공제 등 민간 참여 유도 지원,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산업융합을 위한 개발연구와 중장기적 원천연구 지원
 - 성장동력 분야 규제혁신, 실증, 초기시장 조성 지원 등을 통한 조기 산업화 도모
- 신성장동력 전주기(발굴·지원·평가) 관리체계 정착
 - 신산업분야 중 일자리 창출이 높고, 범부처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신규분야로 추가 검토
 - 복잡한 사업 추진체계 단순화·통합, 추진단·사업단·사업단협의체로 재편
 -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사업평가 정례화, 분야별 성과 DB화, 특허실태조사 등 시행
 - 사업평가, 특허분석,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일반사업 전환 등 혁신 성장동력 분야 조정 실시
- 유망 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
 - 세계적 수준의 SW 핵심기술 개발 및 SW전문기업·산업별 클라우드 플랫폼 육성, SW와 기존산업, 사회문제 등과의 융합 확산
 - 3D 프린팅, 초실감 콘텐츠, IoT가전, 친환경·스마트카, 공간정보, 스마트 선박, 친환경 해양플랜트,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웨어러블디바이스·탄소소재 등 미래 유망분야 기반강화에 필요한 신소재·부품 산업 고도화
- 바이오와 ICT를 접목한 스마트 농업시스템 구축 및 농축산물 생산·질병관리 기술 고도화
- 유용 농림·수·축산자원 발굴 등 국산 농수산물생명 소재 산업화를 촉진하고 차세대 육종 첨단기술 개발

③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고도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신흥국 등장으로 인해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저하되고 있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스마트화와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제고해야 할 필요 증대
- 스마트 제조혁신과 녹색 전환, 제조-서비스 융합 등으로 새로워진 산업들과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신산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재도약

■ 정책과제

- 스마트공장·산단 전환
 -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및 연결기술(플랫폼) 역량 제고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병행을 통한 스마트 공장 확산·고도화 유도
 - 스마트기술 접목을 통한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시범 구축
- 연구개발 고도화를 통한 핵심요소·원천기술 확보
 - 주력 제조업의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산업·기술이 연계된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 연구개발’ 추진
 - 소재·제품·생산시스템 등 전후방 연계 연구개발, 종전 제조업 기술에 첨단 요소기술을 도입하는 융합형 연구개발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창업 스타트업 지원 확대 및 도시재생지구 내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 친환경 기술 보유사 선정, R&D → 실증 → 사업화 단계의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
 -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순환 등 녹색산업 선도 5대 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 유망 녹색융합기술 분야 전문 녹색인재 양성
-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 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기업 육성
 - 미래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나노·소재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성과 창출
 - 소재·부품·장비 중점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및 소재·부품기술 로드맵을 전후방 산업과 연계된 매트릭스형 전략으로 고도화
- 서비스업 고도화 및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
 - 서비스 R&D 투자 규모 지속적으로 확대, 유망 서비스 분야 발굴 및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 교육, 관광, 스포츠, 문화,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융합 서비스 분야 고부가가치화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제조지원 서비스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제조-서비스 융합 생태계 기반 조성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9-3	(1)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 역량부문 10개 지표의 점수	- 2019: 13위	- 2030년: 지속 순위 상승 - 2040년: 지속 순위 상승
	(2)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 2019: 11위	- 2030년: 지속 상승과 상위 순위 유지 - 2040년: 지속적인 상승과 상위 순위 유지

[K-SDGs 세부목표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4) R&D 투자의 혁신과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과기부·산업부

① 정부 R&D 투자시스템 혁신

■ 추진 배경 및 목적

- 그간 과학기술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차기 성장동력 마련은 부진한 상황
- 과학기술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R&D의 전략성과 혁신 유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 및 효율화
 - 정책 수립 시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사전에 계획 중복성 등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수립 절차 강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부처별 R&D 중장기계획과 R&D 사업정보 제공
 - 종료예정 분야별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심층분석을 정례화하여 차기 계획의 전략성 제고
- 혁신성장 분야 중심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 도입
 -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지원하는 ‘연구개발투자 플랫폼(R&D PIE)’ 도입
 - 부처별·개별 사업 중심의 R&D 예산 심의에서 벗어나 범부처 공동기획 및 분야별 패키지형 예산 배분·조정 체계로 전환
 - 부처별 제도개선 실적과 관련 R&D 예산 배분·조정을 연계하고, 분야별 평가, 성과관리, 컨설팅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

- R&D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 도입 강화
 - 대형 R&D 과제에 대해 고품질 IP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 지원 확대
 - R&D 평가·관리 과정에 지식재산 정보 활용 및 IP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IP data 기반 R&D 관리 강화
 - 포트폴리오형 기술이전 모델 확대를 통해 미활용 특허기술의 이전 및 상용화 촉진, 대학·출연(연)의 개별 특허 기술을 유망제품별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축·이전
- 기초·원천연구의 평가 프로세스 혁신
 - 성과중심(전략연구과제)의 연구과제와 과정 존중(자유공모/혼합형)의 연구과제를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평가체계 이원화
 - 과정 존중 연구과제는 연차·중간평가를 면제하고 성실수행 여부를 중심의 최종평가 진행, 성과 중심 연구과제는 철저한 계획과 관리 이행, 목표달성도, 성과 우수성·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구비 및 목표를 조정하는 Moving Target 제도 적용 및 기초연구과제의 성공/실패판정 폐지

②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경제성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대

■ 정책과제

- 정부 R&D와 인력고용 간 연계 강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등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R&D 지원을 확대
 - 중소·벤처기업 R&D 지원구조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
 -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확대
- R&D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관련시장을 활성화 하고, 유망 연구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

- 우수 연구장비 핵심기술 확보, 한국주도형 차세대 연구장비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국내 연구장비산업 육성

○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 강화

- 미래 일자리 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직업훈련, 자격제도 신설 등에 분석결과를 활용
- 과학기술인력의 역량진단, 경력경로 연구 및 교육훈련 과정 개발
- AI 대체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인터넷을 통한 업무, 1인 창직 등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9-4	(1) GDP 대비 연구개발비	- 2018: GDP대비 4.53%	- 2030년: 지속적인 상승 혹은 적정 수준 유지 - 2040년: 지속적인 상승 혹은 적정 수준 유지
	(2) 경제활동 천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 2018: 14.7명	- 2030년: 지속적인 상승 혹은 적정 수준 유지 - 2040년: 지속적인 상승 혹은 적정 수준 유지

[K-SDGs 세부목표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5) 자원·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생산구조 확립

산업부·환경부

① 산업 분야 자원생산성 제고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자원 손실을 줄이고 투입 대비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효율적 생산의 필요성 대두
- 산업별 자원효율 관리 현황 파악과 이를 통한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관리 지표, 통계 및 관리시스템 미비

■ 정책과제

- 국가 자원효율지표·관리 시스템 구축
 - 원료의 투입, 생산과정, 폐기 이후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원효율 분석 지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자원 소모량 또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주요 업종별, 자원 가치가 높은 주요 물질별로 세분화된 전 과정 물질흐름분석 추진
 - 재활용 잔재물을 구분하여 실제 재활용된 양을 측정하고, 물질·에너지·매체접촉형 등 용도별 재활용 산정을 통해 자원순환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
- 업종별 자원효율성 향상 지원
 - 국내 산업자원 이용현황 파악 및 평가·분석 등을 위한 자원생산성 지표 개발 및 관련 통계 간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업종별 자원생산성 산정 및 중장기 관리 목표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계 향상 지원체계 도입
 - 자원 효율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 적용 및 보급·확산
 - REMS를 바탕으로 자원생산성 향상에 대한 종합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업체 육성

-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원료 재사용 촉진
 -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너지의 기업 자체, 기업-기업 간, 기업-지역 간 순환을 통한 생태산업개발(EID) 촉진
 - 산업단지 외부로의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 간을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및 폐쇄순환 기술개발
 -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 중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물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원료 재사용 촉진
 - 제도 해설서 및 유형별 순환자원 인정사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배포하여, 업계의 순환자원 인정 적극 유도

② 에너지 고효율 산업으로의 전환

■ 추진 배경 및 목적

-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00년대 들어 둔화되었으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중심의 산업구조가 유지됨에 따라 소비 증가율이 최근 다시 상승
- 산업부문 배출권 거래제만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관리에 한계가 있고 산업부문 고효율 기기 시스템 교체도 더딘 편,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도 초기 비용 대비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도입이 저조

■ 정책과제

- 원단위 절감 협약 추진
 - 에너지 다소비업종 사업장별(2천 TOE 이상) 원단위를 연간1% 절감하는 자발적 협약 추진
 - 목표 달성 '우수사업장' 인증, 에너지진단 면제 등 추진
-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
 - 산업용 저압전동기를 고효율 전동기로 교체 촉진, 팬·펌프 등 응용기기 최저효율기준 적용
 - 노후 산업용 보일러의 고효율 보일러로의 교체 지원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확대
 - 10만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업체 FEMS 설치 의무화('25)

- 10만TOE 미만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과 연계하여 FEMS 보급 지원 확대 ('40년까지 신규 3,000개 이상)

○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에너지자립 모델 구축
-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형 시스템 구축, 마이크로그리드 구현 및 산단 내 고효율기기·클라우드 EMS 보급, 공장 간 폐열 활용 활성화

③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제품의 서로 다른 재질, 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 저해 요소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례 빈번
-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위해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한 재질·구조 개선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준수 의무가 없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 지속 생산됨

■ 정책과제

- 재활용 저해 제품의 순환이용성 개선
 - 재활용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현황 조사 및 순환이용성 평가 실시(3년마다 10여개 제품군) 및 개선 권고
 -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및 우수 개선사례 등을 제품군별, 유형별로 DB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 및 확산
-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 전체에 대한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분담금 차등화
 -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생수) 등은 사용금지 추진
 - 기존 재활용 용이성 평가의 실효성 강화, 수리 용이성, 내구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전자제품 재질·구조 개선지침 개선
 - 가구류, 기타 생활용품 등에 대해서 업종별 협회 등과 연계하여 각 제품군별 자원순환형 생산 가이드라인 마련

○ 자원순환형 소재·디자인 개발 지원

-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R&D 추진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 부여
- 복합·이종재질 제품을 단일·동일재질 제품으로 개선(유니소재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지원 확대
- 에코디자인 지원 사업, 친환경 디자인기술개발 사업 등을 확대하여 자원순환형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9-5	(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2017: 455.7톤CO2eq./10억원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 2018: 81.63%	- 2030: 지속 상승 - 2040: 지속 상승

목 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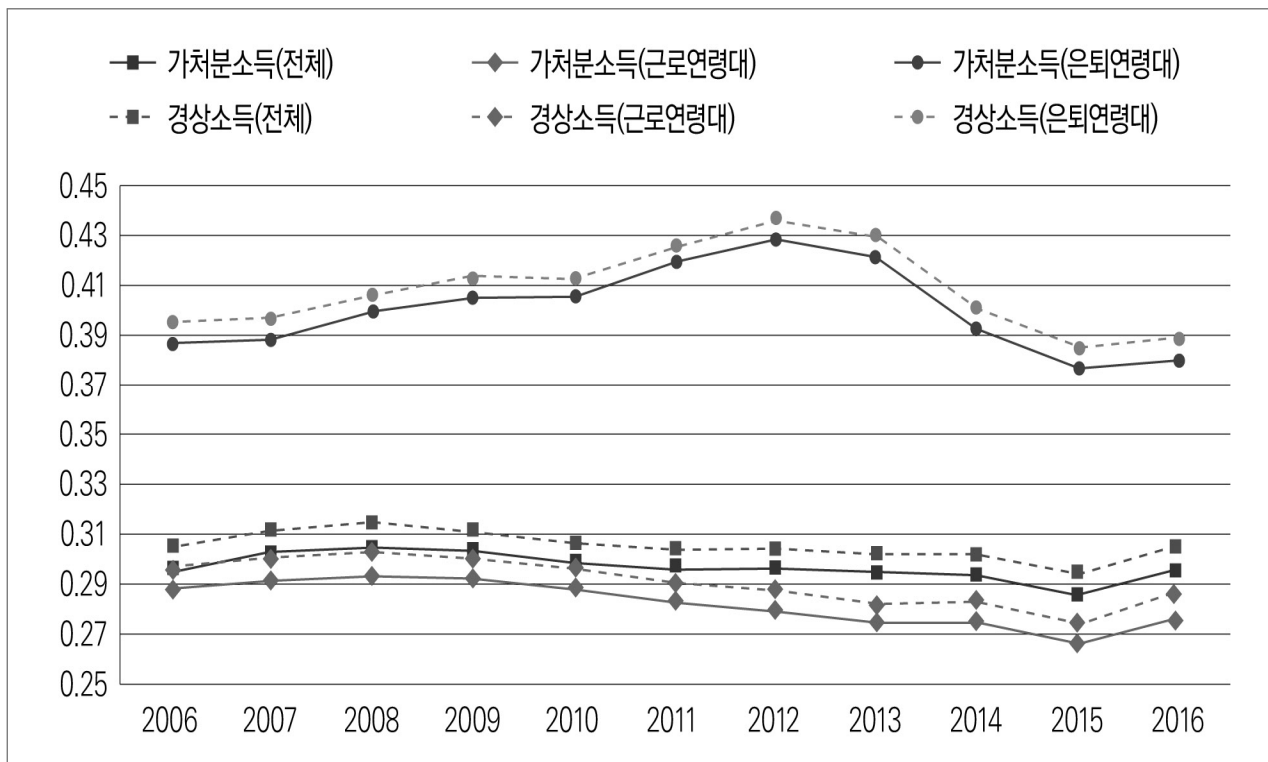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 여건 및 전망

- 한국은 지속적으로 불평등도의 증가 추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 소득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건강, 고용, 주거 등 기본적인 접근에서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소득원천별, 집단별 소득불평등 수준 비교 〉



- 1996년 이후 20년간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증가 경향을 살펴보면 소득증가율의 역진성이 나타남
 - 소득 1분위~3분위까지 시장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재분배 정책의 확대에 따라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역진성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하위 20%의 평균 증가율은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낮음

〈 소득분위별 연평균 실질소득증가율 〉

(단위: %)

소득계층	시장소득증가율			가처분소득증가율		
	1996 ~2006	2006 ~2016	1996 ~2016	1996 ~2006	2006 ~2016	1996 ~2016
전체	-0.2	1.4	0.6	-0.2	1.5	0.6
1	-5.9	-5.6	-5.8	-1.4	1.7	0.1
2	-2.2	0.0	-1.1	-1.5	1.8	0.1
3	-1.1	1.3	0.1	-0.9	1.8	0.5
4	-0.4	1.4	0.5	-0.3	1.5	0.6
5	0.0	1.6	0.8	-0.1	1.5	0.7
6	0.2	1.6	0.9	0.2	1.5	0.8
7	0.4	1.5	1.0	0.1	1.4	0.8
8	0.5	1.5	1.0	0.2	1.3	0.8
9	0.6	1.5	1.0	0.2	1.4	0.8
10분위	0.0	1.7	0.8	-0.5	1.5	0.5

주: 분위 구분과 소득 비교에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 노동조합조직률은 경제적, 투표율은 정치적 포용을 위한 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포용은 단순히 소득 분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이라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청년 집단은 다차원 빈곤이 소득빈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불평등 해소를 넘어서는 다양한 차원의 포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

(단위: %)

구분	다차원 빈곤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 문화적 자본	안정성	소득 빈곤율	전체
청년	10.8	2.0	1.8	1.3	2.4	1.7	1.5	3.8	6.0
19-24세	15.5	2.8	1.9	1.4	4.7	2.1	2.6	6.8	8.4
25-34세	9.8	1.8	1.8	1.3	2.0	1.6	1.3	3.1	5.5
중장년	11.1	1.6	1.5	2.5	1.9	2.2	1.3	5.6	9.8
노인	18.1	3.1	1.4	7.3	2.7	2.8	0.7	34.5	45.3
전체	11.6	1.8	1.6	2.6	2.1	2.2	1.3	7.6	13.5

주: 소득빈곤율은 가구원수 기준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인 경우의 비율이며, 비교를 위하여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지표값을 가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분석 대상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율을 제시함.

자료: 김문길 외(2017: 269) 미발간

2 비전 체계

목표

10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한 포용사회 구축

추진 전략	추진 과제
하위 40%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 위한 빈곤사다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 자활일자리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별·급여별 완화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차별 대우 철폐 및 공정한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확대 • 장애인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지원 강화 • 장애인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여성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정책적 개입 강화를 통한 높은 수준의 평등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1) 하위 40%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 위한 빈곤사다리 정책

복지부·기재부

①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빈곤층인 수급자가 공공부조에서 벗어나 자립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

■ 정책과제

- 대상별 자립지원 강화
 - 국민연금 보험료의 본인부담분에 대해 현행 50%에서 75%까지 공제율 상향
 -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기금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장기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포함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립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 일정기간(예, 6년) 이상 장기 수급중인 수급가구에 대한 현황분석
 - 자활센터 등 민간 복지기관, 직업훈련 및 교육 기관 등과 연계하여, 자립 저해 요인에 대해 돌봄·양육, 취업 지원 등 연계

② 자활일자리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 취업연계 등 ‘자활사업’ 시행

■ 정책과제

- 자활일자리 확대 및 자활급여 인상
 -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 지원제도 개선 및 자활일자리 확대를 통해 3년간 4.5천명 추가 일자리 창출('16년, 45천개→'20년, 49.5천개)
 - 자활 참여자의 근로유인 강화 및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자활근로유형별 차등 인상)
 - 참여자의 근로역량·가구환경을 반영하여 자활근로 종류 다변화
- 수급자의 자활노력 이행 강화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방안 검토
 - 조건부과 유예 소득기준을 상향조정(예, 現60만원→90만원)하고 새로이 진입하는 3만 2천명에 자립지원 교육·상담 프로그램 제공
- 자활기업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개편
 - 전국·광역·지역 (예비)자활기업 600개 신규창업 추진 ('17년, 1,200개 → '20년, 1,800개)
 - 중앙(1개소)·광역자활센터(14개소) 등 자활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사회적 경제 모태 역할을 하는 자활사업단·자활 기업 체계적 육성·지원
- 자산형성 지원
 -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향후 3년간 자산형성 지원 9만 가구 신규 지원 추진
 - 다양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체계 개편

③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별·급여별 완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93만명 (63만 가구)로 2014년 118만명(71만 가구)에서 대폭 감소
-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

■ 정책과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탄력적 보호 강화
 -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 의무화 추진(14~16년 연간 각 10만명 보호)
 -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 사업’으로 우선 의뢰하고, 긴급 의료비 지원,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0-1	(1)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비율	- 2018: 46%	- 2030: 50.0% - 2040: 55.0%
	(2) 소득격차비율	- 2018: 34.2%	- 2030: 30.0% - 2040: 28.0%

[K-SDGs 세부목표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2)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 확대

복지부·고용부·기재부

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은퇴와 나이 들에 따라 소득 감소, 건강 악화, 준비되지 않은 마무리 등으로 삶의 질 급격히 저하
-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신체·정신적 돌봄 필요가 큰 고령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증가로 노인돌봄 문제 심화
- 호스피스, 웰다잉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효성 저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정책과제

- 다층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
 -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공·사연금의 활성화 및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역할 강화
 - (기초연금)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
 - (국민연금)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국민연금 확립
-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 (주택연금) 주택연금 총액의 일시인출한도 확대(70%→90%),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 및 주택연금 활성화
 -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 도입 확산 및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관련 제도 개선
 - (농지연금)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②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 추진 배경 및 목적

- 특수학교 반대 등 장애인차별인식이 남아 있고, 장애인 학대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등 사회 전반의 인식, 학대 예방 등 장애인권의 보호 강화 필요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대상 기관이 확대('16.6월)되었으나, 교육내용 체계화 및 교육 과정 운영 활성화 필요

■ 정책과제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18)
 - 현재 기관별로 분산·시행되고 있는 인식 개선 관련 교육을 통합·연계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설치
-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중앙 및 시도 권익옹호기관(17개소)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18~)
 - 권익옹호기관-공공후견법인-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범죄 피해 논스톱 권익옹호 체계 구축 운영
-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인력배치('22년까지 약 15백명),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구축('18) 추진
 - 치료 및 사회복귀 과정 등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절차 보조인, 공공후견인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18~)
 - * 절차보조인: 입원시의사결정 투약 등 치료과정에서 환자 입장에 의견 제시
 - * 공공후견인: 정신요양시설입소자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0-2	(1) 소득 5분위 배율	- 2017: 5.1	- 2030: 안정적 유지 - 2040: 안정적 유지
	(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 2019: 17.9%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3) 차별 대우 철폐 및 공정한 기회 제공

복지부·고용부·기재부

① 노인일자리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인의 근로의욕 증가로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의 필요성 증대
-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확대 제도 추진

■ 정책과제

- 노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상담·연계 및 중고령층 시장형 일자리 참여 확대
 - 시장형 일자리의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중고령층(60~64세)의 일자리 확대
- 민간 노인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51만개('18년) → 80만개('22년))

② 장애인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지원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미 이행률이 56.5%로 여전히 많은 기관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실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복지시설의 범주 안에서 생산을 통한 고용창출을 담당하고 있으나 취약한 생산성, 경영역량 부족 등으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및 처우개선 효과가 제한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매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장애인 고용처우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 정책과제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 개발원' 신설('23년)
 - 타 장애유형과 통합 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 대상 전용 훈련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감각(시·청각) 장애인 훈련센터 확대도 추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 장애인의 최저임금 지급 가능한 생산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형 직업재활시설 모형(가칭, 기업형모델)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18.~)
 -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연 30→ 50개소 이상) 및 생산성 확충을 위한 시설 인프라(신·증축, 생산장비 등) 구축 지원('19~)
 - 생산성 창출에 한계가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중증장애인 보호·교육·훈련 통합지원 기능 강화

③ 장애인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17년 현재 70%가 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나,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실화 필요
- 전체 장애인의 약 60%(140만명)가 중졸 이하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등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필요

■ 정책과제

- 장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충, 시설·기능 보강 지원
 - * ('18)1,124개소→ ('22)1,184개소매년12개소씩 5년간 60개소 신설)
 - 유아단계부터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일제 통합형태의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 지역별수요를 고려하여 '22년까지 특수학교(총22교) 및 특수학급(총 1,250학급) 신·증설
 - * (특수학교) 174교('17.)→196교('22.), (특수학급)10,325학급('17.)→11,575학급('22.)
 -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도시계획 수립시 특수학교 설립이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정 개선
-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진로탐색 활동 및 미래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 자유 학기제 전면시행 및 자유학년제 확대*
 -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8) 48교→ ('22) 139교
 -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 및 지원
 - * ('18) '평생교육바우처' 활용지원및학력인정맞춤형학습시스템 개발 연구 → ('19)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 ('20~) 전국확대

④ 여성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고용시장 진입에 있어 성별격차가 존재하고, 고용의 질이나 근로형태에 있어서도 성별차이가 존재
-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여전하고, 군인·경찰 등의 직종은 성별분리 채용을 실시하며 여성 채용비율이 남성에 비해 극히 낮아 진입 자체가 어려운 실정
-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도 성별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여성의 경력관리 및 고용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

■ 정책과제

-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개선 (고용노동부)
-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 및 피해자 구제 강화 (고용노동부)

○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 성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사업장 대상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 부과
- 가사·돌봄서비스 공식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돌봄노동자 실태파악 및 처우개선 등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0-3	(1) 인구집단별 고용률	- 2019 • 여성 51.6% • 장애인 34.9%	- 2030 • (여성) 62.0% • (장애인) 지속 확대 - 2040 • (여성) 67.0% • (장애인) 지속 확대
	(2) 장애인의무고용률	- 2019: 3.1%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4) 정책적 개입 강화를 통한 높은 수준의 평등 달성

고용부·기재부·중기부

①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소득이전 정책(재정정책, 사회보호정책)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하나, 시장 소득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보 가능하므로 임금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사회부조 수혜금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각 지원책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발전 단계를 상정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책과제

-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를 통한 빈곤탈출 유도
 - 소득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 (현행) 166만 가구, 1.2조원 → ('19년 개편) 334만 가구, 3.8조원 예상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정책의 일환

■ 정책과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가입 활성화
 -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 단계적 확대* 및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허용('23년)
 - * (기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 ('20.7월) 방문판매원 등 5개직종 추가 적용 → ('21.7월)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추가 적용

③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정책의 일환

■ 정책과제

-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동시에 확대해 생활안정 도모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도입 방안 중장기 추진

K-SDGs 세부목표 10-4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 2017: 53.8%	- 2030: 56.0% - 2040: 57.0%

[K-SDGs 세부목표 10-5]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을 조성한다.

(5)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 조성

법무부·여가부

①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에 도달한 후, 9년 만인 2016년 전체 인구의 3.9% 수준인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준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참여를 촉진시켜 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

■ 정책과제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 온라인(다누리 포털 등) E오프라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접근성 향상
 - 의료서비스 정보와 연계하여 병원 E의료상품 정보 및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국민권익위 연계 강화로 체류외국인 고충민원 처리 지원
-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체류허가, 영주자격 취득 시 인센티브 부여, 국적 취득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우대 추진

②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이민배경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한국어 교육, 공교육 진입 강화, 진로·직업교육 지원 등을 시행

■ 정책과제

-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 DB’ 등록자 수 확대, 이중언어 인재 진출 가능 분야·직종 등 정보 제공 활성화, 이중언어 인재 우수사례 공유·확산
- 성장주기별·대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 교육 및 정서 상담 실시
 - 다문화 유치원을 확대하여 다문화 유아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개발

③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균형 있는 복지 제도 운영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장기체류외국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처우하여 ‘자립과 참여’의 책임을 부여하고, 정착 및 통합 지원 서비스 확대

■ 정책과제

-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 재한외국인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관련법에 근거하여 생계비·주거비 지원
 -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 근로자 제공 숙소의 주거형태 등 주거시설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생활시설개선을 지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시 숙소 최저기준 충족여부 병행 점검
 -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지속시행
-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등이 각종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등)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④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국내법에 따른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
-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권리보장과 인권중심적인 이민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적용대상이 되는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시행 중인 법률에 따른 공백에 없는지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 차별방지 제도 강화
 - 이민자 차별(혐오 등 포함) 유형 및 구제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인권옹호 및 차별금지 관련 교육·홍보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 활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이주민·이주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이행 모니터링 충실
-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 권익구제 등 신청 창구 상설화, 재한외국인 지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업무 관련 고충 및 인권침해 사례 발굴
 -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 보장된 외국인 인권증진 및 차별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및 해당 협약 이행검토 메커니즘과 긴밀한 협력

⑤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짧은 이주의 역사와 단기간에 증가 한 이주민의 규모, 국민 대다수의 이주민과의 관계 경험 수준 등을 고려하면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상당한 특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이러한 특수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집합·원격교육 운영, 예비교원 단계부터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교수학습자료에 문화다양성 및 문화상대주의 관련 내용 개발·보급, 초·중등 교원연수 실시
- 전국 지역문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하여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 * 다문화 이해교육 :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교육 등 실시
- 국민·이민자 등 대상 특성별 맞춤형 교안 개발,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참여형 교육 연수 기획 및 운영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0-5	(1)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 2018 • (국제) 27.69% • (국내) 100.0%	- 2030 • (국제) 50.0% • (국내) 100.0% - 2040 • (국제) 100.0% • (국내) 100.0% 유지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 2020.9: 32%	- 2030: 100% - 2040: 100% 유지
	(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 2018 • (일반국민) 52.81점 • (청소년) 71.2점	- 2030 • (일반국민) 70점 • (청소년) 80점 - 2040 • (일반국민) 80점 • (청소년) 90점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율	- 현재 통계 미구축	- 2030: 70.0% - 2040: 100.0%

목 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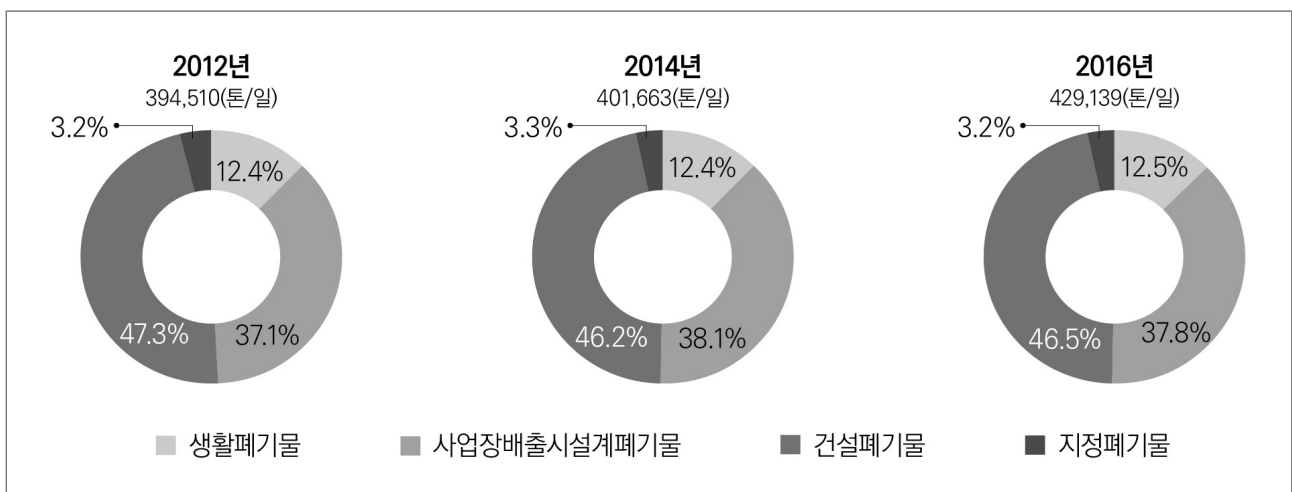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 여건 및 전망

- 국내 총 폐기물발생량은 최근 7년간('10~'16) 연평균 약 2.3% 증가, '16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429,139톤/일로, 전년 대비 약 2.6% 증가
 - 발생폐기물 구성비('16)는 생활계폐기물 12.5%, 사업장폐기물 37.8%, 건설폐기물 46.5%, 지정폐기물 3.2%로 건설폐기물이 가장 큰 비율 차지

〈 폐기물 구성변화 추이 〉



- 폐기물 재활용 증가율 및 매립률 감소율은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소각율은 큰 변화 없이 답보 상태
 - 폐기물 처리구조는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전환되었지만, '16년 현재까지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률 소폭 증가 및 매립률 소폭 감소 추세
 -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다가 '16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조치가 시행되자 해역배출량이 큰 폭으로 급감하여, '10년도 대비 약 88%만큼 해양배출량 감축

〈 연도별 폐기물 처리현황 〉

(단위 : 톤/일)

구분 \ 연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계		374,642	394,510	401,663	429,139
매립	소계	36,137	36,572	37,906	37,942
	생활	8,797	7,778	7,813	7,909
	사업장	27,340	28,794	30,093	30,033
소각	소계	21,215	24,899	24,528	26,461
	생활	10,609	12,261	12,648	13,610
	사업장	10,606	12,638	11,880	12,851
재활용	소계	309,708	329,207	336,815	363,800
	생활	29,753	28,951	29,454	32,253
	사업장	279,955	300,256	307,361	331,547
기타*		7,583	3,832	2,414	936

* 해양배출 및 보관 등

- 생활계폐기물은 분리배출제도 정착,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 비중은 60% 수준 유지
 -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량은 '16년 32,253톤/일로 '10년 대비 8.4% 증가하고, 매립량은 '16년 7,909톤/일로 '10년 대비 약 10% 감소
- 음식물류폐기물은 직매립 금지 등으로 '01년 이후 '13년까지 매립처리가 꾸준히 감소하여 전체 발생폐기물 중 1% 수준까지 감소
 - 재활용률도 96%까지 증가했으나, '14년도 이후부터 매립률 소폭 상승 및 소각비중 상승 추세('13년 대비 '16년 4.3%p 상승)
- 사업장폐기물 처리구조는 '16년 기준으로 매립률 8.0%, 소각률 3.4%, 재활용 88.3%, 기타(해양배출 등) 0.2%를 나타냄
- 건설폐기물의 경우 '10년~'16년까지 매립률은 2%내, 소각률은 0.5% 안팎, 재활용률은 97~98%선에서 큰 변동없이 유지하는 추세
- 반면 지정폐기물의 경우, '13년부터 '16년까지 매립률은 소폭 증가하고, 재활용률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

2 비전 체계

목표

12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 •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기반 조성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보급 확대 및 홍보·교육 추진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에 대한 촘촘한 관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부문과 사각지대 해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폐쇄 및 폐기물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관리
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 확대를 통해 녹색 소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 녹색구매 정책기반 강화 • 인증기업 및 재활용산업 대상 제도적 지원 강화

추진 전략	추진 과제
<p>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환경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환경교육 다변화 •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지원 •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 • 유아 환경교육 강화 • 청소년 환경교육 체험기회 확대
<p>플라스틱의 선순환을 위한 제조·생산 및 재활용 관리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 자원순환형 소재·디자인 개발 지원
<p>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한 환경보전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지역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대
<p>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1)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기재부·환경부·산업부·중기부

①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내 자원순환 기술은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하여 한정된 수요에 맞게 공급자(처리업자) 중심으로 처리되는 재활용이 대부분
- 자원 및 에너지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 정책과제

-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의 제도적 기반마련
 - 폐기물이 일정요건(경제성, 환경성)을 충족 시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부담완화와 국민 안전성 담보
 - 폐기물 다량배출업종(발전·철강 등 18개 업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여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폐기물 처분 최소화
- * 폐기물처리 전 과정을 고려하여 최종처분율, 재활용률, 에너지회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자의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목표를 할당 후 평가·환류하는 제도

②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경제·환경 등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자원효율성 관리의 필요성 대두
- 자원의 손실을 줄이고 투입 대비 최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 정책과제

- 재활용 관리제도를 선진화(포지티브방식 → 네거티브 방식)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최대한 발굴
 - 환경과 인체건강에 위해성이 없는 재활용 가능자원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신기술의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단축(2년 → 즉시 또는 6개월 이내)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폐기물 분류 세분화, 재활용 가능여부 제시 등)
-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지속
 - 재활용기술 업그레이드 및 희유금속 대체금속 개발 등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강화
 -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③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기반 조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자원효율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에서 자원생산성 향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생산과정에서의 자원생산성 향상과 폐자원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연계하여 자원효율적인 생산구조 확립 필요

■ 정책과제

- 물질흐름분석(MFA) 및 물질흐름 통계 구축·갱신
 -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63개 금속별 전과정에 대한 물질흐름분석 및 통계구축·갱신
 - 전과정 물질흐름단계별(8단계) 통계분석, 금속별 물질흐름분석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자원 전과정 프로파일 구축 등 수행
- 산업계(제조)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체계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보급·확산으로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쏠생산공정(폐기물관리 포함)에서의 물질·에너지 손실 최소화, 품질·수율·가동률 최대화 등을 통한 산업계의 효율적 자원관리 지원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2-1	(1)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 관련 통계 미구축	- 2030: 18건 - 2040: 18건 유지
	(2) 국가 지속가능생산· 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 없음	- 2030: 기반 마련 - 2040: 수립

[K-SDGs 세부목표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2)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환경부·산업부

①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재생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 이후 배출·수거·선별 과정에서 부터 재활용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분리선별이 필수
-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수거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 정책과제

- 재활용을 고려한 분리배출 개선
 - 분리배출 폐기물의 품목별 재활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시장·소비패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분리배출 기준 지속 개선
 - 지자체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분리배출 시스템 정착을 위해 유형별(공동주택·단독주택·다중이용시설·농어촌 등) 우수모델 마련·확산
- 재사용과 연계된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
 -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자체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수거 중단 등 비상대응 체계 완비('19)
 - 폐가전, 폐의류 등 재사용 가능 제품은 별도 수거체계 구축 및 재사용매장 등 수요처 연계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19~)

②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그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약 15%가 지속적으로 매립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의 쾌적한 환경권과 직결된 사항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신규시설 소요를 줄이는 노력 필요

■ 정책과제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
 - 폐기물 매립·소각 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18~)를 통해 매립 최소화 및 재활용 극대화
 - 폐기물 매립률 변동 및 매립시설 잔여용량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폐기물 매립 시 전처리 의무화 및 직매립 원천 금지 추진(~'27)
-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한 폐기물 처리 최적화
 - 권역별로 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 주민 의견수렴 등 의사소통을 통해 납비현상 최소화
 - 경제성, 환경성 외에 주민수용성 및 환경정의 등을 고려한 연차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 및 공개('18~)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2-2	(1)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 2016: 12.8(톤/인)	- 2030: 13.0(톤/인) - 2040: 13.4(톤/인)
	(2) 물질흐름통계(MFA) 구축 대상 자원수	- 2019: 24개	- 2030: 100개 - 2040: 100개

[K-SDGs 세부목표 12-3]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환경부

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보급 확대 및 홍보·교육 추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인책을 마련하였으나, 1인 가구 증가, 외식산업 발달 등으로 인해 발생량 증가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정책과제

- 감량효과가 뛰어난 세대별 RFID 종량제 방식을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 향후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에 확대 적용 추진
 - 신규 공동주택, 식당가 인허가 시 세대별 무게계량 종량시스템 도입 의무화('20~, 지자체 조례 제정)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RFID 도입 위한 국비지원 추진(~'22, 전국 보급률 30% 미만인 지자체) → 소형 음식점에 거점 RFID 도입(~'27)
- 배출원별 지속적인 맞춤형 홍보·교육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 감량실천 유도
 - 민간단체·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급식소, 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등에서의 낭비 없는 음식문화 인식 개선(식재료 절약, 잔반 줄이기 등)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2-3	(1) 식품손실지수	- 현재 통계치 없음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 2018: 0.28kg/인·일	- 2030: 0.23kg/인·일 - 2040: 0.21kg/인·일

[K-SDGs 세부목표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에 대한 촘촘한 관리체계 확립

환경부

① 취약부문과 사각지대 해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화관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입·유통 등 사각지대 발생
- 화학물질 통관검사 확대(관세청 협업), 항만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강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관리강화 등 추진

■ 정책과제

- 유해화학물질 통관단계 검사대상을 기존 인천공항세관에서 인천·부산세관으로 검사대상 세관 확대('16)
 - 인천세관에서 평택·양산세관으로 협업검사 세관확대('17)
- 온라인 불법 화학물질 판매·유통업체 연중 감시
 -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3사와 자율관리협약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를 구축,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활용하여 무허가 화학물질 판매·유통 사이트, 폭발물 제조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적발하여 폐쇄조치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폐쇄 및 폐기물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 추진 배경 및 목적

- 폐유독물질은 화관법상 유독물질로서 취급시설 관리기준 적용대상이나, 영세한 폐기물처리 업체의 경우에는 동 기준 준수가 곤란한 실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폐쇄시 잔여물질 처분 등 적정조치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조치 기준 등이 미흡

■ 정책과제

- 폐유독물질 관리에 관한 폐관법-화관법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16)
 - 폐관법상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기준과 화관법상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 폐유독물질 처리·재활용시설의 안전기준강화 등 유독물질 폐기 후부터 폐기물처리업체 인계 전까지 전과정 안전관리 방안 검토
- 수은의 취급(사용-폐기 -철거 등)에 대한 전과정 안전관리 규정 마련 (‘16)
 - 수은 취급사업장에서 사용가능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③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관리

■ 추진 배경 및 목적

- 화학물질 운반차량 관리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화학물질분류, 표시방법이 서로 달라 유사시 신속 대응 곤란
- 또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는 운반시마다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한 실정

■ 정책과제

- 운반차량 유해화학물질 분류 체계 및 표시제도 개선
 - 다품종 운반차량의 표시 방법 개선 및 혼합물의 UN번호 부여 방법 지침 마련 (‘17)
 - EU 등 외국의 화학물질 운송 규정에 따른 차량의 표시방법 조사 및 국내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표시 단일화방안 마련 (‘18)
- 타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운송정보시스템 구축(‘18)
 - 안전처, 국토부, 해수부 등의 정보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현황 파악 및 연계
 - (대응기관 정보 조회 권한 설정) 한국도로공사, 국민안전처 등 사고 발생 시 대응기관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 제공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2-4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 현재 수치 산출 필요	- 2030: 70% - 2040: 100.0%
	(2)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 2019: 97개	- 2030: 140개 - 2040: 200개
	(3)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 2018: 109.6kg/인·년	- 2030: 90kg/인·년 - 2040: 80kg/인·년

[K-SDGs 세부목표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5) 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한 생산과 소비단계에서의 노력확립

환경부

①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경제발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10년부터 '16년까지 지속적으로 연 평균 2.1%씩 증가
-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자 중심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생산 공정 내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술 개발 필요

■ 정책과제

- 사업장별 맞춤형 자원순환 성과관리
 - 제조업체와 재활용업체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재활용업자 역량 강화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실적 향상 유도
 -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명단 공개
- 생산자 중심의 폐기물 저감·재활용 기술개발·확산
 -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폐기물 저감·재활용을 촉진하는 R&D 추진, 중소 제조업체 위주의 기술 적용(설비 등) 지원
 - 신규 시설 설치부터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폐기물 저감·재활용 기술을 업종별 BAT에 반영('19~)

②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제품의 서로 다른 재질, 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 저해 요소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례 빈번

- 재활용업체, 생산자 등 제품 흐름 쏠과정을 연계한 현장의 순환이용 관련 애로사항 분석 및 이를 반영한 제품설계 곤란
-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미비

■ 정책과제

- 자원순환형 소재·디자인 개발 지원
 -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R&D 추진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 부여
 - 복합·이종재질 제품을 단일·동일재질 제품으로 개선(유니소재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지원 확대
- 재활용 저해 제품의 순환이용성 개선
 - 재활용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현황 조사 및 순환이용성 평가 실시(매 3년마다 10여개 제품군) 및 개선 권고
 -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및 우수 개선사례 등을 제품군별, 유형별로 DB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 및 확산

③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 추진 배경 및 목적

- 편의성 위주의 대량소비 문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속 증가 추세
- 특히, 커피전문점 등 확산으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한 유통 포장 폐기물 발생도 급증

■ 정책과제

- 대체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
 -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19), 점진적 보증금 대상 확대 시행
 -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컵 뚜껑 등 현행 1회용품 규제 비대상 품목에 대한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추진

○ 불필요한 과대포장 근절

- 과도한 이중포장(마트 등의 행사상품 추가포장)의 자발적 감축을 우선 유도하고,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한 이중포장 제한('19)
- 제품출시 전 포장검사 의무화('19)를 통해 획기적인 포장폐기물 발생 감량 추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2-5	(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2018: 62.0%	- 2030: 68.0% - 2040: 75.0%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 2018: 81.6%	- 2030: 85.0% - 2040: 90.0%

[K-SDGs 세부목표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6)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산업부·중기부

①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 추진 배경 및 목적

- 대기업 중심의 환경경영 기법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범 산업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요구됨

■ 정책과제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사업장 중심의 청정제조기술 개발 및 보급
 - (기술개발) 다수의 중소·중견기업 보급 가능성이 높은 범용적 장비·공정에 IT, 서비스 등 이종(異種)기술을 융합하여 효율성을 높인 기술 개발과 보급에 초점
 - (기술보급) 보편적인 R&D사업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 - 이전” 방식과는 달리 “발굴 - 개발 - 보급” 방식의 수평적 이전(산업계 보급)으로 확산을 도모
- 대기업의 환경경영 기법·기술 등 노하우를 중소협력사에 이전하여 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공동 대응기반 구축 지원
 - (기반구축) 화학물질·에너지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모기업-협력사간 그린파트너십 체계 구축
 - (성과확산) 중소협력사 지원을 위한 산업부-모기업 대표간 자발적 협약식 개최, 성공 사례집 발행 등 산업계 성과보급 및 확산 추진
- 중소기업, 비제조업 분야 등의 친환경 경영 역량강화
 - 중소기업 조합·협회 단위의 효율적인 환경경영 확산 위한 그린업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의 친환경 아이템을 발굴하여 녹색시장을 확산하기 위한 혁신형 에코디자인 지원사업

②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환경규제와 관련된 초국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환경규제와 관련된 선제적인 대응 마련이 요구됨

■ 정책과제

-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인식 확산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컨설팅 제공
 - 국가별·산업별 환경규제 최신 동향 및 대응 가이드 제공
 -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지원 및 역량 강화
- WTO/TBT 협정* 역이용을 위한 국제표준기반 친환경제품(서비스) 인증 체계 및 신제품 R&D 인프라구축 추진
 - * 세계무역기구 기술무역장벽 철폐협정, 국제표준에 근거한 환경 관련 인증은 기술무역장벽의 예외로 인정
 - 국제표준에 따른 물발자국 인증 체계구축 추진을 통한 EU 등 선진국 시장과 호환성 있는 친환경제품 인증기반구축 추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2-6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 2017: 108개(추정)	- 2030: 200개 - 2040: 400개
	(2) 녹색경영 참여 기업수	- 2017: 160개	- 2030: 300개 - 2040: 1,000개

[K-SDGs 세부목표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 확대를 통해 녹색 소비 촉진

환경부·행안부·기재부

① 공공분야 녹색구매 정책기반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공공기관 업무평가기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반영된 기관은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외된 기관은 구매금액이 계속 감소
- 대부분 지자체(‘15.11월, 99.2%)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변화를 반영한 개정 필요

■ 정책과제

- 녹색조달 교육 신설
 - 예산·회계 시스템에 ‘녹색제품구매/입찰공고 검증 프로세스’ 구축(‘16)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 확대 실시

② 인증기업 및 재활용산업 대상 제도적 지원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환경표지 인증비용 부담과 장기간의 인증획득 소요기간으로 인해 인증제도 확산에 한계
- 개별 기업이 녹색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미흡
- 환경표지 인증업무 전 과정을 원스톱 방식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

■ 정책과제

- 원스톱 환경표지 인증시스템 구축
 - 인증업무 전 과정을 하나의 웹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인증시스템 구축(~’20)
 - ‘인증업무 전 과정 시스템 고도화 중장기 로드맵’ 수립(‘16) 및 주요 시험분석기관의 분석정보 연계(‘16-’17)

- 인증제도 이용 편의성 제고
 - 파생상품별 인증 방식별 제품별 인증으로 개선(~'20)
 - 환경표지 인증이 부결된 제품을 재신청시, 부적합 항목만 검증하여 소요기간 및 시험비용을 경감
- '자가검증 인정제도' 확대
 - '자가검증 인정제도'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16)
 -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2-7	(1)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 2019: 54.4%	- 2030: 70.0% - 2040: 75.0%
	(2)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 2017: 59건	- 2030: 100건 - 2040: 100건

[K-SDGs 세부목표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8)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환경교육 강화

환경부

① 대상별 환경교육 다변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환경교육을 생소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 필요
- 일반인들이 쉽고 흥미 있게 접근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언론, 종교 등을 통한 간접 교육 형태로의 사회 환경교육 확대가 바람직

■ 정책과제

- 언론인, 종교인 등의 사회 환경교육 활동 지원 및 유도
 - 한국PD협회, 작가협회, 언론재단, 독립제작사협회 등 미디어 종사자 교육 과정을 통한 언론인 환경교육 기회 제공
 - 종교별 종교인 연수와 연계한 환경교육 기회 제공
- 지자체 공무원, 환경관련 분야 종사자 대상 지역형 환경교육 실시
 - 지자체 공무원 환경역량 강화를 위한 교재 및 콘텐츠 개발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환경관련 분야 지자체 공무원 및 종사자 대상 환경소양교육 가화

②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교실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과 접목된 형태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수요 증
- 체험환경교육을 접목한 환경교육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환경감수성 증진에 도움

■ 정책과제

- 여가와 환경교육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공공기관, 민간단체 대상 지속가능여행과 체험환경학습을 연계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공모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업 연계를 통해 체험환경학습 프로그램 컨설팅 및 운영 지원, 우수 프로그램 발굴
-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
 - 다양한 봉사활동 유관 기관·단체와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자원봉사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역 내에서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있지만, 이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 부족
- 지역사회 내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환경교육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필요

■ 정책과제

- 지자체 내 시설과 연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역 환경교육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
 - 국립공원, 환경교육센터, 시·도 자연환경연수원, 민간 교육기관등 관련기관의 교육자원·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강화
 -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환경교육 활동 발굴 및 지원
 - 기업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지원

④ 유아 환경교육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누리과정 시행으로 환경교육 부문이 강화되면서 유아환경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 특히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로 유아 대상 환경교육 강화는 환경감수성 함양에 효과적
- 유아 환경교육이 생애주기 환경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하에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유아 환경교육 전문성 제고 필요

■ 정책과제

- 유아환경교육관 확대 운영
 - 체험형 환경교육을 위한 유아환경교육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년까지 유아환경교육관 10개소 지정·운영
 -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유아교사를 위한 환경교육 거점(center)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 방문형 유아교육 확대
 - 찾아가는 유아환경교실 확대 운영
 - 유아환경교육관의 방문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⑤ 청소년 환경교육 체험기회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학교와 사회(민간환경단체) 간 연계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

■ 정책과제

- 학교-사회 환경교육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사업지원
 - 광역지자체 수준의 교육청(학교)-지자체-사회환경교육네트워크 간 협력사업 공모
 - 지역 내 환경교육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제공하여 환경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응

- 지역 환경교육정책협의회, 간담회, 공동연수를 통해 교사-환경 교육 지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유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2-8	(1)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2019: 19.2%	- 2030: 35.0% - 2040: 50.0%
	(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 2018: 55.4점	- 2030: 65점 - 2040: 75점

[K-SDGs 세부목표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9) 플라스틱의 선순환을 위한 제조·생산 및 재활용 관리 강화

환경부

①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화려한 색상, 분리가 어려운 라벨,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 등의 생산이 늘어 재활용이 어려움
-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구조 확립이 요구됨

■ 정책과제

-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생수)은 사용금지 추진(자원재활용법 개정, '18~)
 - 페트병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색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평가 후 개선 권고('18.10) 및 미 이행시 제품명 공개('19)
- (생산자 책임 강화) 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EPR 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18~)
 - 생산자 분담금 납부품목을 확대하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도 증액

②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플라스틱을 절약하고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 노력 미흡하므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순환성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정책과제

- 공공·민간 부문의 폐자원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자원의 지속적 순환체계 구축
 -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2~6월, 6개 도시) 등 분리배출 체계 개선, 고급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선별품 품질등급제 도입
 - 페트병 재생산을 통해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 사용을 촉진

③ 자원순환형 소재·디자인 개발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위해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한 재질·구조 개선 지침 시행 중(포장재, 전기·전자제품)
-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생산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며, 제품 소재·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은 미흡

■ 정책과제

- 자원순환형 소재·디자인 개발 지원
 -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R&D 추진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 부여
 - 복합·이종재질 제품을 단일·동일재질 제품으로 개선(유니소재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지원 확대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2-9	(1)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 2018: 122kg/인/년	- 2030: 110kg/인/년 - 2040: 98kg/인/년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 2017: 58.9%	- 2030: 70.0% - 2040: 100.0%

[K-SDGs 세부목표 12-10]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10)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한 환경보전 증진

환경부·문체부

① 환경과 지역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 관광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정책과제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모델 정립과 확산
 - 자연자원, 문화자원 및 지역 인적자원을 포함한 관광자원의 특성과 환경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각 조건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보완·확산
 - * 저탄소녹색관광개발 가이드라인 수립·보급('09년~): 자연환경 및 문화 보전, 탄소배출 축소 등 환경 보전 및 주민참여 확대 등 지역 문화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
 - 지역 관광자원개발의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
 - *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지역 관광자원 개발 사무·사업 다수 지방 이양
- 지속가능한 관광 인증제도 마련 및 행동강령 보급
 -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 도입 및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관광목적지(지역) 및 사업체 등에 인센티브 부여
 -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의 중요 주체인 관광객의 행동변화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관광객 행동강령' 개발·보급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2-10	(1)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수	- 생태관광운영평가 보고서를 확인하여 수치 산출 필요	- 2030 • (방문자수) 오백만 명 • (해설사) 오천 명 - 2040 • (방문자수) 칠백만 명 • (해설사) 칠천 명

[K-SDGs 세부목표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

산업부

① 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탄보조금 폐지
- 연탄사용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은 보다 강화

■ 정책과제

- (연탄보조금 폐지)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연탄보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
 - 단계적인 연탄가격 현실화를 통해 연탄 제조업자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 단계적으로 생산자 보조금 철폐
 -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간접지원에서 연탄사용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전환 추진
 -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 가격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지원수준 강화
 -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감안, 가격인상분만큼 연탄쿠폰* 지원금액 인상
- * 저소득층(기초생활, 차상위, 소외계층) 7.7만 가구에 가구당 16.9만원 지원('15년)

K-SDGs 세부목표 12-11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 2018: 0.21%	- 2030: 0.10% - 2040: 0.00%

III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목 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1 여건 및 전망

○ 안전하고 공평한 물 복지

- 2018년 상수도 통계 기준 전국의 상수도보급률은 97.0%에 달하나, 농어촌(면)지역은 77.0%에 불과하여, 도 농간 상수도 혜택의 불균형은 여전한
- 전국의 공공 하수도 보급률은 2018년 하수도통계 기준 93.9%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어 있으나, 도시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2.6%에 그쳐,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최근의 '수돗물 적수 및 유충 발생' 등 수돗물 수질사고로 국민들의 '내 집 수돗물 수질'에 관심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수도 서비스 요구 증대

○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

- BOD기반의 수질관리제도는 지역개발과 오염원 관리를 연계하는 수질관리 수단으로써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지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TOC 기반의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이 필요함. TOC 농도의 하천달성도는 115개 중권역 대표지점, 호소달성도는 49개 주요호소에서 측정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천 TOC의 경우 지난 4년간 변동 폭이 크지 않지만 호소 TOC의 경우 달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16년: 57.1%→'19년: 36.7%) 목표 달성을 위한 저감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자연계의 유기오염물질과 산업활동에 의한 화학물질, 농약류, 의약품질 및 인공화학물 등 기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들의 검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과학적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를 통해 수계 미량물질 관리지표 설정 등 중장기적인 정책·제도·기술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신규오염물질 관리 수 : '13년: 81개 → '19년: 88개)
- 기후변화, 도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생물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훼손된 생태하천 복원, 수생태계 연결성 회복, 수변 생태 벨트의 구축, 습지보호 지정·관리 강화 등이 요구됨. (지방하천 3,774개소 26,822km 중 35%(9,335km)가 생태적으로 훼손, 서식 및 수변환경평가지수 : '14년: 53.8 → '18년: 52.0)

○ 안정적인 물 확보와 주민참여

-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제한되어 물이용량의 비율이 높은 관계로 물이용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여건임. 생활·공업·농업용수는 2020년 기준 5년 빈도 가뭄 시 1.91억^m³, 과거 최대 가뭄 시 4.04억^m³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에 내린 수자원 총량(1,323억^m³/년) 중 실제 이용량은 28%에 불과(372억^m³/년) 하고 나머지는 바다로 유출되거나 대기 중 손실되고 있으며, '16년 기준 하수처리수 72억톤/일 중 11.2억 톤(15.6%),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폐수 3.8억 톤 중 0.38억 톤(9.9%)이 재이용 중임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 '14년: 13.5% → '18년 15.5%)
- 우리나라의 1인당 담수 취수량은 OECD 평균(819^m³/인)의 약 절반(447^m³/인) 수준으로, OECD의 물 스트레스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균 33%로 OECD 국가에서 6번째로 높음
- 기존 물 관리 정책수립이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존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분절된 정책 운영으로 유역기반 통합관리를 위한 유역단위 가치형성과 의견수렴 기반이 미비. 유역단위 관계기관과 관련 기업, 대학,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학·연 거버넌스 조직 구성 및 상시 의견수렴 등 기능 활성화 방안 필요

2 비전 체계

목 표

6

수자원 이용과 순환의 건전성 강화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공급과 처리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
취약지역 하수도인프라 확대 및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복지 형평성 제고 •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한 물순환 건전성 확대와 건강한 상수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오염원 억제 • 수질 오염 관리 고도화 (오염물질 총량제 강화)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수자원 공급과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누수율 개선 • 물부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물순환 정책강화
수생태계 복원을 통한 안전한 수변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수생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 시민 참여 지원 확대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1)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공급과 처리 인프라 개선

환경부

①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방상수도 시설 21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증가(관로 32.9%, 정수장 68.2%)로 깨끗하게 생산된 물이 안전하게 가정까지 공급되지 못하고, 도심 내 노후 상수관에서 녹물 발생 등의 사유로 건강 위협 문제
- 취수에서 정수생산 및 공급까지 수질 및 누수 관리는 물론, 수도관 파손 또는 수질 오염사고 등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 강화

■ 정책과제

- (그린뉴딜)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
 - 상수도 전 과정 관리 고도화
 -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 도입
- 노후 상수관 교체와 노후 정수장 정비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 유수율 70% 미만 또는 누수율 20%이상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 관망정비 공사시 누수 탐사 및 정비 등 지원
 - 경과 년수 20년 이상 정수 처리 기능이 저하된 시설 중 시급한 시설에 대해 정수장 개량 사업 시행

○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 수계 내 맛·냄새 물질 또는 미량유해물질 등으로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추가 공정이 필요한 정수처리시설(정수장)을 대상으로 우선도입
-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홍보 및 교육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6-1	(1) 수돗물 만족도	- 2017: 46.6%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 2018: 77.0%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6-2]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취약지역 하수도인프라 확대 및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① 물 복지 형평성 제고

■ 추진 배경 및 목적

- 도시와 농촌의 하수서비스 격차가 여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과 함께 농어촌지역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 하수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정책과제

- 농어촌 지역(군단위 이하 지역) 하수도 보급률 확충
 - 농어촌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연계·통합을 추진

②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및 목적

- 하수도시설의 빗물관리 능력을 높여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지역 침수피해 발생 최소화 및 방류수에 의한 수질오염 억제로 도시 안전 확보 필요

■ 정책과제

- 중점관리지역내 하수도시설(하수관로, 저류시설, 빗물펌프장) 확충 및 안정적인 방류수질 운영체계 마련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정비대책 수립 확대
 - 최적의 하수처리·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공정별 데이터 측정 및 분석·제어 등 제4차산업 기술(ICT, IoT) 적용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6-2	(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2017: 70.1%	- 2030: 85.0% - 2040: 90.0%
	(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 2019: 12개소	- 2030: 150개소 - 2040: 200개소

[K-SDGs 세부목표 6-3]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3)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한 물 순환 건전성 확대와 건강한 상수원 관리

환경부

① 상수 오염원 억제

■ 추진 배경 및 목적

- 유역별 배출원별 특성에 맞는 사전 예방적 비점 오염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질 오염 총량제 고도화 이행

■ 정책과제

- 공공수역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수질오염물질 관리 강화
 - 수질오염물질 지정 항목 수 확대
 -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한 배출기준 설정
 - 유해물질 배출 저감 최적 가용기법(BAT) 강화

② 수질 오염 관리 고도화 (오염물질 총량제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근래 증가되고 있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발생 감소를 위하여 정체 혹은 악화 추세인 TOC 오염도 개선과 미량 오염물질 감시를 강화하여 물이용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

■ 정책과제

- TOC(총 유기탄소) 기준 수질 목표 관리 강화
 - TOC(총 유기탄소) 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모델링 개발 및 감측 기술 시범 사업 추진
 - 하천/호소 수질 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유역별 TOC 방류수질 기준과 저감 대책 수립

○ 미량오염물질 측정 대상 및 개소 확대

- 미량물질 측정센터 확대 (4개소, '30년까지)
- 미량물질 모니터링 항목 확대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6-3	(1) 유역별 물순환율	- 통계 구축 필요	- 2030: 통계 구축 - 2040: 90.0%
	(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 (TOC 기준)	- 2019: 41%	- 2030년: 60.0% - 2040년: 70.0%
	(3)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 2019: 56종	- 2030년: 66종 - 2040년: 76종

[K-SDGs 세부목표 6-4]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4)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수자원 공급과 인프라 개선

환경부

① 상수도 누수율 개선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전국 단위 상수도 누수율이 지난 5년 동안 10% 내외를 유지하는 등 유수율 개선이 정체되어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 관로 또한 총 관로 연장의 10%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통해 누수 취약 지역의 노후 관로 교체 지원

■ 정책과제

- 노후 상수도관망 개대체 확대
 - 노후관 교체·개량 지역 선정 및 상수도관망 현대화 사업 진행

② 물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순으로 재이용수 활용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생성 관리 중인 가뭄 홍수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신속한 홍수 대응, 가뭄의 전주기적 통합 대응 추진

■ 정책과제

- 대체수자원 발굴 및 이용 공급 체계 확대
 - 해수 담수화 설비 도입
 - 수계 내 물 공급 시설을 통합 연계해 대응력 확보
 - 재이용수 수요 공급 정보 제공 및 정책 지원

- 가뭄 극복을 위한 가뭄정보 연계·통합 및 서비스 강화
 - 가뭄전망정보 고도화 및 가뭄 위험성, 취약성 노출성 지도 구축
 - 국가가뭄정보포털을 활용한 분야별 가뭄정보 통합 대국민 서비스 강화 (우리동네 가뭄정보, 가뭄교육, 국민행동요령 등)

③ 물순환 정책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물순환 회복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탄력성 제고 도시 구축을 위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물영양 최소화 기법을 도입하고 하수/우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건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

■ 정책과제

-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대상 및 기준 확대 (하수도법/수도법 개정추진)
 - 물 재이용 수요처 및 용도 발굴, 정책 기술 지원 등의 재이용수 관리 체계를 개선한 (가칭) 하수처리수 활용 기본 계획 수립
- LID(저영향 개발기법) 시설 적용 확산 유도
 - 저영향개발 기법의 민간 부문 확대
 - 그린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6-4	(1) 상수도 누수율	- 2018: 10.8%	- 2030: 9.0% - 2040: 8.0%
	(2) 지방상수도 자급률	- 2018: 53.9%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3)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 2018: 15.5%	- 2030: 20.5% - 2040: 25.5%

[K-SDGs 세부목표 6-5]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5) 수생태계 복원을 통한 안전한 수변환경 제공

환경부

①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하천생태계 교란이 가중되어 국내 고유종의 출현 감소, 외래 종 출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유역관리 등의 이행 및 모니터링 평가가 시급함

■ 정책과제

- 자연성 회복 중심의 생태하천 복원 확대
 - 자연성 회복을 위한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 지표 개발
 - 하구 수생태계 모니터링, 평가, 서식처 조성 기술 개발 및 지역 주민 참여 하구 수생태계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6-5	(1)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HRI)	- 2017: C등급 52점	- 2030: 전체평균 B등급 (60점 이상) - 2040: 전체평균 B등급 (70점 이상)
	(2) 어류건강성 평가지수 (FAI)	- 2018: C등급 52.9점	- 2030: 전체평균 B등급 (60점 이상) - 2040: 전체평균 B등급 (70점 이상)
	(3)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면적 증감	- 2020.02: 3,106km ²	- 2030년: 면적 지속 확대 - 2040년: 면적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6-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수생 문화 정착

환경부

① 물관리 시민 참여 지원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상생발전과 연계한 유역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자발적 시민 참여가 수반된 물 관련 문화 확산 지원

■ 정책과제

- 유역별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관련 자료 DB화
 - 기존의 주민참여 거버넌스 현황 분석과 소유역 중심의 지역 주민 및 이해당사자 자치체계 제도 마련 필요
 - 중·소 유역별 거버넌스 지원과 모델 구축사업을 통한 효율적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실행계획 수립 필요
- 수생태계 건강성 체험을 위한 유역 거점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마을만들기, 유기농축산업 전환 등 오염원 줄이기 공동체 사업으로 수질개선 효과 증진
 - 유역 물 거버넌스 주체 형성과 지원 대책과 근거 강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6-6	(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	- 2019: 13.7회 (회의 개최 횟수)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2)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 통계치 산출 필요	- 2030: 5.0% - 2040: 지속 확대

목 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1 여건 및 전망

○ 청정에너지원 확대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총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환부문의 탈탄소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정 과제로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4년: 4.92% → '18년: 8.88%)
- '1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17년 발전 및 집단에너지 부문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19.6)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 달성을 위하여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 '14년: 4.09% → '18년 5.80%)

○ 에너지 효율 향상과 친환경 운송 수단

- IEA(2015)에서 밝힌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 37%,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통해 36%로 밝힌바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특성 상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에너지 저효율 소비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대부분 OECD 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 에너지 소비가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우리는 여전히 연평균 2%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0.159, '17년)는 OECD 35개국 중 33위로, 동일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서 선진국 대비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너지 원단위(toe/1,000USD): '14년 0.198 → '18년: 0.192)
- 교통연구원에 따르면(2016) 미래 총수송거리(인·km)는 2025년 이후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앞으로도 건물부문 산업부문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이 매우 중요한 부문임. 다양한 변화를 반영한 수송분담을 추정 결과 2050년 교통수단별 분담율은 2014년 승용차 67.4%, 대중교통 32.6%에서 2050년 승용차 58%, 대중교통 42%로 예측됨
- 2017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8.3백만 톤(2019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이며, 국가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2018.7)에서 수송부문은 BAU배출량(105.2 백만톤)에서 30.8백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2017년 배출량 대비 24.3% 감축 필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12년: 75,863대 → '16년 244,071대)

-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을 통해 2030년 친환경차(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보급목표를 누적 385만대로 잡고 있음. 이는 신차 판매의 약 30% 수준이며, 전체 자동차 보급대수는 2400~2600만대로 추정(교통연구원, 2012)되고 있어, 약 15%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실효적 지원

- 한국의 에너지 접근성은 이미 높은 수준이기에 양적인 측면의 접근성 강화 목표보다는 질적인 측면 즉, 복지라는 관점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노력이 필요함.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고소득 가구대비 에너지비용 부담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됨 ('16년 기준 소득분위별 경상소득대비 연료비 비율: 최상위 소득계층(10분위): 1.3%, 저소득층(1분위): 8.0%)
- 국내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의 합리적 선정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너지 빈곤가구 비율: '12년: 12.3% → '19년: 6.2%)

2 비전 체계

목표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보편적 복지로서의 에너지 기본권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기본 복지 강화
청정에너지 발전원 확충과 사회적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
그린뉴딜 관련 에너지산업 육성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뉴딜 관련 에너지 산업 육성 • 신축 건물에너지 효율화와 기존 건물 노후 설비 개선 지원
친환경 이동수단의 대중화 및 대기오염 물질원 감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량 공급 확대 •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 억제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1) 보편적 복지로서의 에너지 기본권 확립

산업부

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기본 복지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 중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

■ 정책과제

-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실효성 강화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현실화
 - 에너지바우처 제도 보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7-1	(1)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수	- 2019: 6.2%	- 2030 : 100만 가구 - 2040 : 200만 가구 * '15~'19 에너지 바우처 연평균 증가율(6.3%) 반영

[K-SDGs 세부목표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2) 청정에너지 발전원 확충과 사회적 정착

산업부

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 20%, 2040년 35%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제도와 기술 개발을 지원함

■ 핵심 정책과제

-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정비
 - 입지 및 사업 모델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 분산 발전원 기반 에너지 생태계 정착 지원을 위한 가상발전 제도 개선 확대
-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지원 제도 확대
 - 에너지 신산업 발굴 강화
 - 인공지능과 결합된 에너지 수요 관리 고도화

②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을 보이는 반면에 부작용 및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석탄 및 원자력 발전 감소 등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소비자 부담의 연착륙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 강화 문제 대두

■ 정책과제

-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대 및 관리 기반 고도화
 - 재생에너지 성능 통합 모니터링
 - 사업자의 분산형 전원체 운영 유지 관련 책임성/자격 강화
 - 재생에너지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 도입
 - 분산 자원과 기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 기존 계통 연계 시스템 안정화
 - 재생에너지 연계 확충을 통해 접속 대기 물량 적체 해소
 - 지역별 다양한 계통 연계 맞춤 인프라 구축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7-2	(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2018: 8.88%	- 2030: 30% - 2040: 35.0%
	(2)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 2018: 5.80%	- 2030: 12.0% - 2040: 17.6%

[K-SDGs 세부목표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3) 그린뉴딜 관련 에너지산업 육성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

산업부·국토부

① 그린 뉴딜 관련 에너지 산업 육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그린뉴딜 관련 에너지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여 단기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정책과제

- 지능형 마이크로 그리드, 국가 기간망 전력저장시스템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지원
 - 아파트 500만호 스마트 전력망 구축
 -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프로젝트 추진
- 미래형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 산업 육성
 - 녹색 인재 확대 및 환경 기업 대상 용자 공급
 - 녹색 산업 선도 융합 클러스터 조성

② 신축 건물에너지 효율화와 기축 건물 노후 설비 개선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 비율확대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신재생에너지 의무 도입 비율 준수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 설계 및 설비 도입에 따른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 기대
-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조사됨. 특히 13만 5000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5만 동은 어린이,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함

■ 핵심 정책과제

- 신재생에너지 의무화비율 점진적 확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단계적 상향 조정
 - 공공건물의 의무적 제로에너지화 전환
- 그린 리모델링 확대 지원
 - 생활 SOC 등의 에너지 고효율화
 -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 및 의무화
 - 국립학교를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7-3	(1) 국가에너지효율지표	- 2018: 0.0979toe/ 백만원	- 2030: 추후 보완 - 2040: 추후 보완
	(2) 건물에너지효율지표	- 현재 국내 통계로 산출 가능	- 2030: 2017년 대비 14.4% 저감 - 2040: 지속 저감

[K-SDGs 세부목표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4) 친환경 이동수단의 대중화 및 대기오염 물질원 감축 강화

환경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① 친환경차량 공급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저공해차 판매율과 전체 판매 차량의 평균 연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친환경차량 판매를 늘려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을 이루고 친환경 이동 수단을 보편화함

■ 정책과제

- 친환경차량 공급 의무 비율
 - 공공용 차량 100% 친환경차량 의무 구매
- 연비 효율화 기준 강화
 -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강화
 - 자동차 온실 가스 기준 강화
 -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시행

②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 억제

■ 추진 배경 및 목적

- 경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NO_x)과 황산화물(SO_x)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외에도 광화학 반응을 통한 대기질 악화의 요인으로 밝혀지며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에 대한 규제 강화

■ 정책과제

-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선박으로 조기 전환 확대
 - PM(미세먼지)·NO_x(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확대
 - 5등급 노후 경유차 교체 확대
 - 전기 이륜차 보급 및 노후 함정과 건설기계 등의 조기 교체 지원
 - 친환경 관공선 대체건조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7-4	(1) 친환경차 확대 수	- 2019: 4.8만대	- 2030: 300만대(누적) - 2040: 안정적 유지
	(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 2018: 42,959 (1,000 TOE)	- 2030: 2017년 대비 14.4% 저감 - 2040: 2030년 대비 50.0% 저감

목 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1 여건 및 전망

○ 재난적 기후로 인한 피해

- 전 지구 평균기온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환경부는 5년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임

* (1차) '10~'15, (2차) '16~'20, (3차) '21~'25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09~'18) 자연재해로 194명의 인명피해 및 약 20만명의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3조 4천억원 발생하고, 복구비용은 그 2~3배로 추산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시민 참여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1~2%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 배출량(잠정)이 전년대비 3.4% 감소함.(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17년: 709.7백만톤 → '18년: 727.6백만톤 → '19년(잠정): 702.8백만톤)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올해 6월 5일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여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7월 7일에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발족되어 17개 시도를 포함한 80개 광역·기초지자체 참여함
- 행정과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 시민참여 조직화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함. 일부 지자체에 기후·에너지 관련 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매우 제한적임
- 적응대책 모니터링 주체로서 행정뿐 아니라 민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적응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 환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2 비전 체계

목 표

13

신기후체제 모델 국가

추진 전략	추진 과제
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회복 탄력성 및 적응능력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 기후재난 대비 제도 정비 • 기후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 •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 • 기후변화 적응 사업 단위별 관리
저탄소 안전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조치계획의 정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 •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이행 지원 확대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정책 형성 단계부터 시민 참여 지원 •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
절대량 기준 감축 목표 달성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평가 체계 고도화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1) 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회복 탄력성 및 적응능력 내재화

환경부·행안부·해수부·기상청·농진청

①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폭염, 열대야, 집중호우 등의 증가로 건강, 도시 및 산업시설 분야의 기후변화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건강/재난재해/물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이상기후 현상과 같은 기후 위협에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력을 제고해나가는 것이 시급함

■ 정책과제

- 기후변화 위험 평가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체계 구축
 - 사회 경제적 피해 등 정량적 영향평가체계 고도화
 - 기후변화 예측 모델 고도화
- 통합적인 기상재해 서비스 제공
 -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 구축
 - 고온·병충해에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 제공

② 기후재난 대비 제도 정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재난성 기후에 대해서도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하고 신 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 등 전 부문을 포괄하는 제도적 정비 및 대응체계 개발 필요

■ 정책과제

- 방재 성능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의 성능 기준 강화
 - 100년 강우빈도 설계 기준 적용 방안 연구
 - 연안정비사업 확대(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 대규모 공공사업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도입
 -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단위 기술 발굴

③ 기후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과학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 관련 모든 부문·주체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한반도 내 심화되는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의 해상도를 높여서 일상생활 내 혹은 지역 단위 활용성을 제고함

■ 정책과제

- 기후변화 관측, 감시, 예측 역량 강화 / 영향 모니터링 확대
 -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정보 다원화 및 예측모델 개발
 - 장기 기후전망 예측에 따른 폭염·한파 지도 구축

④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적응 사업과 관련된 부문별 대표 사업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평가를 통해 적응의 주류화 실현

■ 정책과제

- 6대 부문 기후리스크(84개)*에 대응하는 사회 쉼부문의 적응력 강화
 - * △ (물관리) 홍수·가뭄 증가, △ (생태계) 멸종위기종 감소, 서식지 축소, △ (국토·연안) 기반시설 피해, 연안침식, △ (농수산) 식량생산성 저하, △ (건강) 감염병·질환 증가, △ (산업·에너지) 취약산업 위험 증가 등
- 기후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인프라 구축
- 모든 적응 이행주체의 적응역량 강화로 적응 주류화 실현

⑤ 기후변화 적응 사업 단위별 관리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기초지자체 등 적응 사업의 시행 주체가 중심이 된 단위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 효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정책과제

- 지역주도의 기후 취약 계층 (영유아, 노인, 저소득층) 지원 사업 확대
 -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구축
 -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및 신규 발굴, 폭염·한파 조기경보 제공

K-SDGs 세부목표 13-1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방재시설 집행 비율	- 2019: 95.32%	- 2030: 97.0% - 2040: 98.5%

[K-SDGs 세부목표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2) 저탄소 안전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조치계획의 정책 반영

환경부·산업부

① 기후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조직 등 기초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국가 정책, 전략, 실행과 관련된 기후변화 정책간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정책과제

- 기후변화대응 관련 규정 통합 정비
 - 기후변화 법제 정비: 「(가칭)기후변화대응법」제정 추진 검토
 - 기후변화 대응기금 설치·운영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과 성과에 대한 통합 관리
 -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별 효과성 평가 모니터링 강화
 - 핵심 4대 배출원에서 집중 감축 목표 달성 지원
-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이행기반 마련
 - 탄소중립(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을 비전으로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 2050년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

②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이행 지원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자체 단위 적응 세부시행계획 작성이 법제화 이후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민간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 정책과제

- 지자체/공공기관 등 세부시행계획 이행 모니터링
 - 지자체 단위 기후·에너지 전담 기관 설치 확대
 -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도 도입
- 민간부문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지원
 - 민간부문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기후적응 보험제도 도입 추진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3-2	(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 현 수치 산출 필요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기후·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지자체 비율	- 현 수치 산출 필요	- 2030: 50.0% - 2040: 100.0%
	(3)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지자체 비율	- 현 수치 산출 필요	- 목표치 설정 불가 (통계 미구축)

[K-SDGs 세부목표 13-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3)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촉진

환경부·산업부

① 기후변화 정책 형성 단계부터 시민 참여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변화 정책수립 과정 전반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감축계획 수립 의무화

■ 정책과제

- 적응 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환류 촉진
- 국민참여 운동 확산
 - 주요 인사 기후변화 홍보대사 임명 및 국민 참여 운동 확산

②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전 국민의 기후변화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참여 확산을 위해 미래세대 저탄소 생활양식 정착에 기여하는 선제적 교육 강화

■ 정책과제

-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과정 연계 지원
 -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 강화(누리과정 연계 등)
 - 공무원 기후변화 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 기본계획 이행강화를 위한 표준매뉴얼 제작
 - 기후변화 체험관 등 지역별 거점을 주축으로 실질적 체험 기회 확대

- 생애전주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령 세대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 기후변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3-3	(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 2019: 10.03%	- 2030: 100% - 2040: 100% 유지
	(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 현재 통계치 활용하여 산출 필요	- 2030: 100% - 2040: 100% 유지

[K-SDGs 세부목표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4) 절대량 기준 감축 목표 달성 (2017년 7.09억톤 → 2030년 5.36억톤)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환경부·국조실·산업부·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①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평가 체계 고도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철저히 함

■ 정책과제

- 온실가스 감축 실적 분석 평가 심화
 -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 공개
 - 8대 부문에 대한 이행 지표구축하고 목표달성 실적 종합평가 실시
 - 핵심 4대 배출원의 감축 실적 집중 점검 및 벤치마킹 방식의 배출권 할당 적용 확대
-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 이행 사항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계획의 정합성 확보
 - 3대 핵심전략, 10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성과 관리 공표
 - K-SDGs 성과 목표와 연계한 이행 관리 체계 마련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3-4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2017: 709.1MtCO ₂ eg.	- 2030: 2017년 대비 24.4% 감축 - 2040: 2017년 대비 33.6% 감축

목 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1 여건 및 전망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 2100년 우리나라 표층수온은 약 3~6℃ 상승 전망되며(RCP 8.5), 온난화된 바다는 열대성 또는 아열대성 생물, 특히 유해생물군(노무라입깃해파리 등)의 대량 출현이 예상됨
- 기후변화 대응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그린뉴딜 발표('20.7) 이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 제고 등을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인식
- 이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20년, 30개소 1,782.2km²)하고, 「갯벌법」 제정('18년) 및 갯벌복원사업 추진 확대('11년~) 등 해양생태계 보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 해양생물의 서식지 및 주요 이동로를 중심으로 해양생태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대 핵심 해양생태축 설정 및 생태축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해양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갯벌생태관광 인증지침 마련('20년)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 서천·고창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정원' 조성 추진
- 수족관 내 해양포유동물의 폐사 이후 해양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및 서식환경 평가 의무화 하는 등 동물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종복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추진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한국은 어구·어선·어법 등 다양한 투입자원 규제(input control)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해왔으나 연근해 생산량은 계속 감소세임('90 147만톤 → '00 119만톤 → '16 91만톤 → '18 101만톤 → '19 91만톤)
- 따라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규제중심형에서 TAC(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자원관리형(Out control)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2019년 2월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수산혁신 2030」 역시 '연근해 어업의 TAC 기반 어업구조정착' 추진계획을 담고 있음
- 과잉어획, 환경변화 등 다양한 자원감소 원인의 과학적인 정밀 분석을 통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종별 자원관리 계획 수립 등 자원관리 이행 체제 마련 필요

-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국내어선 어구 과다사용 등 불법어업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임. 특히 어린물고기는 생태계 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획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음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식량, 해양관광, 해상무역, 이산화탄소 무역 등 해양에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는 최소 24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한국의 경우 연안인접 시·군·구에 30% 인구가 거주하면서 59개 항만, 386개소 산업단지 등이 입주해 있을 정도로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간임
- 그러나 대규모 간척·매립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감소, 어촌 쇠락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 현재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약 72.6%이며, 어가부채까지 감안할 경우 더욱 낮은 수준임
- 수산자원 감소, 어촌 고령·과소화는 100만 명 이상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수산업의 성장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함.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급식 중단, 외국인 노동력 부족 등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 대비하는 수산업 분야의 혁신을 요구함
- 적극적이고 과감한 해양신산업(해양바이오·관상어 산업, 해양로봇 및 스마트 장비 산업 등) 육성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 신성장동력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 물론 해양·어촌은 국민 관광·여가공간으로서도 지대한 중요성과 가능성을 지님. 해양·어촌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복지를 꾀하면서 어촌경제 활성화, 어가소득 다변화도 동시에 꾀할 수 있음
- 한편 어선원 보험 가입률 제고 등을 통해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을 지원할 필요 있음. 열악한 어촌 정주기반 역시 어촌 붕괴를 가속화하는 요인인 만큼 ‘어촌뉴딜 300’(‘19-’22) 등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어촌재생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됨

2 비전 체계

목표

14

사람, 경제, 환경이 상생하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바다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육상 및 해상 오염물질 관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오염물질 유입 차단 • 해양 플라스틱 저감
해양생태계 서식지 및 해양생물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 해양생물 보호
해양산성화 영향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협력 강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어린물고기 보호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산업 혁신, 해양·어촌관광 활성화 및 해양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 혁신 • 해양·어촌관광 활성화 •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 • 해양과학기술 이전 확대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어업·복지 여건 개선 • 어촌·어항·연안지역 정주여건 개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을 통한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1) 육상 및 해상 오염물질 관리체계 확립

해수부·환경부

① 육상 오염물질 유입 차단

■ 추진 배경 및 목적

- 2016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지속적인 연안 개발 압력으로 육상 기인 오염부하 및 오염해역 증가 우려
 - 특히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해역(5개소: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 울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등 오염해역을 중심으로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유입 우려

■ 정책과제¹⁾

- 점(點)오염원 관리
 - 점오염원 조사
 - 하수관로 설치 및 관리
 - 환경기초시설(하수·분뇨처리시설, 자원화시설 등) 설치 및 관리
- 비점(非點)오염원 관리
 - 비점오염원 조사
 -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정비
 - 비점오염물질 연안 유입 저감

1) 각 정책과제·단위사업 세부내용은 『제3차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66~83쪽 참조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관리
 -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 연안 유역 쓰레기 관리
- 연안오염총량관리
 -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및 시행
 -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② 해양 플라스틱 저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으로 추정됨
 -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함과 더불어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은 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해라는 우려 제기
-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연 발생량은 6.7만톤으로 추정('18)
 - 4만톤(60%)이 해양기인으로 특히 3.6만톤이 폐어구·폐부표임
 - 그러나 발생, 수거·운반, 처리·재활용 등에서 미흡한 부분 많음

■ 정책과제

- 해양 발생원 예방
 - ‘어구·부표 보증금’ 도입을 통한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 유도
 - 산란·성육기(매년 5, 10월) 불법어업 집중 단속
 - 기준미달 어구에 대한 수입·유통 전면 금지
 - 스티로폼부표의 친환경부표 교체를 위한 제도 및 지원책 마련
- 육상 발생원 예방
 - 하천관리청에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부과 추진
 - 장마·태풍 전 하천변 쓰레기 집중 수거, 유입 차단막 확충·개선
 -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현황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 외국 발생원 예방

- 지역기구(NOWPAP 등) 및 양자 협의체를 통한 주변국과의 공동 조사·연구 및 대응기반 마련

○ 수거·운반 체계 개선

- 도서 등 수거사각지대 해소(집하장 설치, 정화운반선·차량 보급)
- 어업인·어촌의 수거 인센티브 부여 및 정화 선박·장비 지원
- (ICT 기반 모니터링 도입, 고효율 장비 도입 등) 수거체계 효율화

○ 처리·재활용 촉진

- (폐어구 前처리시설 구축 등) 처리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
- (양식용 부표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 재활용의무를 상향

○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 환경부(폐기물관리법)와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법) 간의 이원적 권한·책임구조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위원회 설치
- 해양수산부 조직개편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기능 강화
- 미세플라스틱 관련 유관부처 R&D 예산 확대
- 해양쓰레기 통계자료의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격, 배출·회수·잔존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대상별(어업인, 낚시인, 관광객 등)·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및 어촌 현장방문 교육 강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4-1	(1)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 2019: 81%	- 2030: 90.0% - 2040: 지속 확대
	(2) 해양쓰레기 수거량	- 2019: 11만톤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2) 해양생태계 서식지 및 해양생물 보호

해수부·환경부

①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 추진 배경 및 목적

-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인 갯벌의 약 716km²가 1987년 이후 간척과 매립 등으로 상실되었고, 연안개발·이상기후 등으로 해조류·해초류 군락도 감소
 - 기존의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수행된 면이 강했으며, 사후 복원 효과 검증도 미실시

■ 정책과제

-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복원
 - 유형별(개발사업, 자연재해 등) 해양생태계 훼손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훼손된 주요 산란·서식지부터 복원 사업 추진
 - 폐양식장, 폐염전 등 과거 갯벌 지역의 해양생태계 개선을 통한 갯벌생태계 회복사업 지속 추진
 -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 관련 전문업종 신설 및 자격제도 마련

② 해양생물 보호

■ 추진 배경 및 목적

- 연안개발과 서식지 훼손, 불법포획 및 남획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정·해제 운영 체계 미흡
 - 총 80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되었으나 부처별로 보호종 관리체계가 달라 중복 지정 및 관리 효율성 저하 우려
 -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실태 및 증식·복원 관계기관 정보공유 부족, 사후관리 체계 미흡
- 국제 해상운송 증대, 기후변화 등으로 유입된 유해·교란해양생물(해파리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대응전략 미흡

-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해수면 상승, 바다 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 위협이 증가세
 - 그러나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계획이 비법정계획으로 구속성 및 이행의 실효성 저하

■ 정책과제

- 해양보호생물 보호·복원
 - 해양보호생물 기초정보(서식지, 개체수, 위협요인 등) 확보 및 지정·관리 제도 개선
 - 해양보호생물 서식지·산란지 보호·복원 및 개체수 회복
 - 불법 포획·채취, 유통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외래해양생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외래해양생물의 유입 예방 및 유입된 외래종의 사후관리체계 마련
 -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생물종 목록화 및 관리 강화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강화
-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물 보호·관리
 - 폭염 등 이상수온,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물·생태계 현황 파악 및 적응대책 마련
 - 기후변화에 취약해 멸종 등이 우려되는 한국 고유종의 서식지의 보전 체계 구축
 -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평가 체계 구축
- 바다숲 조성
 - (자연암반 개선, 모조주머니 시설, 천연해조장 보전 등) 갯녹음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갯녹음 변동특성 파악, 전국 연안 갯녹음 발생 실태 분석을 통해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과성 검증 추진
 - 바다숲 조성시 자연암반 비율 제고 및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함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4-2	(1) 갯벌복원면적	- 2016: 2.04km ²	- 2030: 10km ² - 2040: 지속 확대
	(2)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 21,490ha	- 2030: 54,000ha - 2040: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3) 해양산성화 영향 최소화

해수부

① 과학기술 협력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바다의 pH가 낮아지는 해양산성화로 바다생물의 외각(shell)이 녹고 생리(physiology)가 변화하는 등의 현상이 국제적으로 관찰
 - 한국에서도 동해 표층(울릉분지)의 이산화탄소가 전 지구 평균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나며, 남동부 연안에서도 해양산성화 조짐 발현
- 해양산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이지만 하천수의 유입, 대기상태 등 주로 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역특수적 요인도 큼
 - 따라서 산성화의 변화 정도나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정량화하거나 지역별로 비교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임
 - 현재까지 한국에서 해양산성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나 생태계 파괴 등이 체계적으로 보고되지는 않고 있으나, 실제 영향이 없다가보다 연구조사가 불충분한 문제

■ 정책과제

- 해양산성화에 취약한 생물·생태계 현황 파악 및 적응대책 마련
 - 해양산성화가 유생, 단세포생물, 해조류, 어패류들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어종별 산란·출현 시기 등의 변화 양상 파악을 통한 해양생물자원 관리방안 마련
- 해양산성화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남동부 연안, 동해 울릉분지 등의 해수 pH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수행 및 시계열(time-series) 자료 축적
 - 황해 연안에 대한 해양산성화 조사연구 착수

○ 국제협력 강화

- GOA-ON(Global Ocean Acidification Observing Network) 등 해양산성화 연구분야의 국제협력 및 모니터링 네트워크 참여

K-SDGs	지표명	현 수치	목표
세부목표 14-3	(1) 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 2017: 8.1pH	- 2030: 8.1pH - 2040: 8.1pH

[K-SDGs 세부목표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4)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해수부

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 추진 배경 및 목적

- 그간 우리나라는 어선·어구·어법 규제(Input control)를 중심으로 어업관리를 하였으나 수산자원과 연근해 어획량은 지속 감소 추세
 -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업종간 어업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어린물고기 남획, 어구 과다사용 및 고질적 불법어업 지속
- 생산지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의 정책방향 전환 시급
 - 연근해 자원관리체계를 어구·어법 등 규제중심형(Input Control)에서 TAC(총허용 어획량) 중심의 자원관리형(Output Control)으로 재편

■ 정책과제

- TAC 중심 자원관리시스템 개편
 - 상업적 이용이 높은 오징어, 참조기, 삼치 등을 TAC 관리대상 어종으로 참여 확대
 - TAC 참여로 손실을 보는 어업인 대상 경영안정 보험제도 등 도입 검토
 - TAC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수산자원 인력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웹기반 실시간 TAC 관리체계 도입 추진
-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및 지원체제로 전환
 -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 상습적 불법조업 어선과 자원 남획이 우려되고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어선감척 추진
 - TAC 기반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

○ 자원관리시스템 내실화

- 선령 25년 이상(FRP선박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자원조사선을 첨단 관측장비를 갖춘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추진
- 첨단 조사장비를 갖춘 수산자원 전용조사선 4척을 활용하여 연근해 전(全)해역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정밀조사 강화
- TAC 정착, 어구 관리 강화 등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근거 법령 마련

○ 어선 현대화 및 어선건조산업 육성

- 화재에 취약한 노후어선(목선·FRP 등)을 대체하고, 대상 범위를 근해어선 모든 업종(3종→21종)과 연안어선으로 확대 추진
- 어선건조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건조업 등록제 도입 및 어선건조클러스터 구축 추진
- 화재 등 주요사고 예방기술·장비 보급

②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어린물고기 보호

■ 추진 배경 및 목적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국내 업종간 경쟁조업으로 인한 갈등 심화로 수산자원에 악영향, 어업분쟁 초래, 은밀·상습적인 불법어업 지속
 - 특히 어린물고기는 생태계 관리를 위해 보호되어야 함에도 양식장생사로 공급, 가공품 원료 공급 등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및 혼획을 위반 등 불법어획 지속

■ 정책과제

○ 불법어업 감시망 구축

- 디지털 중단파망, 전자어획보고시스템 등 구축
- 지방해양수산청의 특별사법경찰 및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불법 포획·채취 등에 관한 정기·특별단속 실시
-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홍보 강화

- 불법어업 단속·처벌 강화
 - 불법어업 감시를 위한 무인항공기 개발 및 활용, 어업지도선 확충 등 해상 불법어업 지도·단속 역량강화
 - 해상중심의 지도·단속방식에서 육상중심의 불법어업 관리체계 전환 등을 위한 어획물 검사 및 양륙제한 등 추진
 - 중대위반 등에 대한 실효적 처분이 가능토록 행정처분 제도강화
-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
 - 어린물고기 보호 및 남획 방지를 위한 포획금지체장 상향 및 포획금지기간 확대 강화 추진
 - 양식장 생사료로 투입되는 어종 집중 관리 및 업종별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 비율 설정
- 바다 생태계 개선을 위한 자원회복
 -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및 어구 관리를 통한 어장환경 개선
 - 우리나라 연근해 주요 어종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친화적인 산란·서식장 조성 및 갯녹음 회복을 위한 바다 숲 조성
 - 유령어업 피해 및 해양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유실이 많은 어구(자방, 통발 등)부터 생분해성 어구사용 의무화 단계적 추진
- 국제사회 협력 강화
 -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한·중 수산고위급회담, 어업공동위원회,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의 자구책 마련 촉구 등 한중협력 지속

K-SDGs 세부목표 14-4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비율 확대	- 2020: 29%	- 2030: 80.0% - 2040: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5)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해수부·환경부

①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해양생태계 서식지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해양 내 보호구역의 지정 개소 및 면적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권고수준에는 아직 미달
- CBD에서는 2020년까지 전 해양 면적의 1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
 - 한국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총 82개소 9675.48km²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바다 면적의 2.18%에 불과
 - 게다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관리전략의 부재로 지역·부처별 관리계획 수준 상이

■ 정책과제

- 해양보호구역 확대
 - CBD 아이치목표(해양의 10%) 달성 추진
 - 랍사르습지 등 국제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보호구역 등 지정 확대
- 해양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 및 보호구역 지정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체계 마련
 -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본지침 마련 및 관리계획 수립·이행 강화
 - 지자체 보호구역 관리자 역량 강화 및 지역전문가 육성·지원

○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강화

- 해양보호구역 가치평가 및 관리 위협요인 관리
- CBD의 보호구역 관리평가기준(MEE)을 국내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기준 마련
- 해양보호구역센터 강화

K-SDGs	지표명	현 수치	목표
세부목표 14-5	(1)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 2020: 7,979km ²	- 2030: 4,300km ² - 2040: 지속확대

[K-SDGs 세부목표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산업 혁신, 해양·어촌관광 활성화 및 해양신산업 육성

해수부

① 수산업 혁신

■ 추진 배경 및 목적

- 수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약 104만 명으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대표적인 웰빙·건강식품임
 - 반면 수산자원 감소, 어촌 고령·과소화는 수산업 성장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도 여전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공공급식 중단, 외국인노동력 부족 등이 수산업에도 큰 시련과 도전 제기
 -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조기 극복하는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 대비하는 수산업 분야의 근본적 체질개선 요구

■ 정책과제

- 어선어업 혁신
 - 스마트폰 앱 활용 전자어획보고시스템 구축 및 AI 기술 기반 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
 - 어구 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단계적 도입 및 해상-육상-항공 감시망을 결합한 4차원 불법어업 감시
 - 원거리(1,500km)에서도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원거리 디지털통신망을 운영하여 원거리 조업어선 안전관리 강화
 - 어선원 안전·복지 공간 확보 등 어선현대화 시설을 지속 구축하고, 친환경적으로 에너지절감을 통해 조업할 수 있는 표준선형 개발 추진
- 양식어업 혁신
 - 양식어업의 규모화·기업화에 대한 제도·금융적 지원

- AI, ICT 등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 보급 및 대규모 스마트양식장
- 어장환경·입식량 관리 개선, 우수종자 개발 등을 통한 재해 예방 및 사료·약품 관리 개선 등을 통한 양식 수산물 안전성 강화

○ 수산기업 육성

- 강소(強小) 수산기업 창업모델 창출,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및 성장플랫폼(수출가공 클러스터 등) 구축
- 어묵·전복·굴 등 차세대 유망품목 맞춤형 지원 및 인구구조·소비패턴 변화(소포장·간편조리식품·건강식)를 반영한 신상품 개발
-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 수산유통 혁신

- 전국단위 수산물 신유통망 확산 및 종합유통시설 건립 확대
- 스마트기술 등을 통한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기반 강화
- 수산물이력제, 원산지표시제도 등을 통한 유통안전성 제고

② 해양·어촌관광 활성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해양·어촌은 국민 관광·여가공간으로서도 지대한 중요성과 가능성을 지님
 - 해양·어촌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복지를 증진하면서 어촌경제의 활성화, 어가소득의 다변화도 동시에 꾀할 수 있음

■ 정책과제

- 해양·어촌관광 인프라 확충
 - 해양레저관광 종합시설 및 거점형 마리나 조성
 - 역사·문화체험마을 등 국민휴양형 어촌 개발
 - 관광·레저기능 특화어항 개발 및 바다둘레길 조성
-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확산
 -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갯벌해설사 육성 등으로 갯벌 가치 활용기반 마련
 - 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차원의 다양한 콘텐츠 발굴

③ 해양신산업 육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적 대응과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요구됨
 - ICT, BT 등의 고도화는 해양수산업에도 전례없는 고부가가치화, 미래 신성장동력화 가능성 제공

■ 정책과제

-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형 고부가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
 - 유용소재 발굴, 제품화 필수정보에 대한 DB 구축 등 산업화 기반기술 개발
 -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화 인큐베이터 등 해양바이오 특화 지원 인프라 구축
- 수입산이 주를 이루는 관상어의 국산대체 및 연관산업 육성 지원
- 스마트 해양장비산업 육성
 - 해양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로봇(탐사, 해양 수중공사), 드론(불법어업 단속,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장비의 개발, 성능향상 및 시장진출 지원
- 해양치유산업 육성
 - 우수 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 선박 연관산업 육성
 - LNG추진선박, 수소·전기선박 등 연구개발 지원
- 해양에너지 산업 육성
 -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등 해양에너지별 표준모듈 기술개발 및 실증인프라 구축, 시범운영 등 해양에너지 산업화 육성 지원

K-SDGs 세부목표 14-6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 2020: 72.6%	- 2030: 80.0% - 2040: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 확대

해수부

①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

■ 추진 배경 및 목적

-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해양사고 저감, 수산물 품질·안전 확보, 해양 예·경보, 해양환경관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대안 제시에 대한 요구 확산
 - 또한 해양바이오, 해양장비 등 혁신적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 증대
- 해양수산업에서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능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바이오·나노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위해 학계·산업계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폐쇄적 연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

■ 정책과제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 부처의 정책 총괄 기능 강화, 기획연구 수행체계 개편, 출연연구기관의 대표과제 육성 등을 통한 R&D 전략성 강화
 - 연구개발단계부터 적용·확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통합투자패키지 모델을 도입하고 다부처·융합 프로젝트 확대 추진
 - 연구현장을 고려한 R&D 평가관리체계 구축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민간-정부간 역할모델을 정립하고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내실화 및 기술기반 창업 지원 확대

② 해양과학기술 이전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해양과학 분야의 국제협력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해양발전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임
 - 주요 해양과학 관련 국제지구 지원 및 협력, 국내 전문가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주도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확대하여 전 지구적 해양과학 역량제고에 기여할 필요 있음
- 한편 국내적으로는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2019)’,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2019)’ 등을 통해 해양과학기술기반의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기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이전, 기술거래, 해양과학기술 기반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 기술이전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다른 사람 또는 기업으로 기술이 전달되는 것으로,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민간 또는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실용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정책과제

- 국내 해양과학 기술이전 활성화
 - 2019년에 발족된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 내실화
 -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모 확대
- 정부 ODA 중 해양수산분야 무상원조 확대
 - 연안개도국 대상으로 해양환경, 해양관측 인프라 확충, 기술이전, 정책연수 등 수원국 자립기반 및 역량강화사업 지원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4-7	(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 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 2020: 2.86%	- 2030: 4.0% - 2040: 5.0%
	(2)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	- 2019: 100건	- 2030: 150건 - 2040: 200건
	(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 분야 무상원조 규모	- 2020: 158.20억원	- 2030: 300억 원 - 2040: 지속확대

[K-SDGs 세부목표]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8)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해수부

① 어업인 어업·복지 여건 개선

■ 추진 배경 및 목적

- 2017년 기준으로 어가 규모는 5.3만 가구, 어가인구는 12.2만 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어가소득(4,900만 원)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5,900만 원)의 82.3% 수준으로서 어가부채 감안시 낮은 수준임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급식 중단, 외식업 침체 등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함
 -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 한편 수산자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조업이 근거리로 확대됨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져,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을 영위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음
 - 2004년 어선원보험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4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함
 - 동법 개정('15)으로 가입 대상 어선이 4톤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4톤 미만은 임의 가입 대상이므로 가입률이 아직 9% 미만임

■ 정책과제

-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제고
 -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원에 대한 의무 가입 대상 확대 추진
- 기타 어업·복지 지원 강화
 -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저리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
 - 어업인 세제감면 지속

- 수산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고가장비 구입·임대 지원
- 여성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 추진

② 어촌·어항·연안지역 정주여건 개선

■ 추진 배경 및 목적

- 도시, 농촌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통·주택 등 어촌 정주기반은 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이탈현상 초래
 - 어업인구 감소, 어촌 고령·과소화 등 어촌사회 붕괴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시급한 개선 요망

■ 정책과제

- 어촌뉴딜 300 사업('19-'22)을 중심으로 어촌재생 본격화
 - 항·포구 접안시설(선착장, 물양장 등), 편의시설(대합실, 화장실 등), 안전시설(CCTV 등) 확충
 - 어촌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해양레저 등 특화사업 지원 등 어촌·어항 통합개발 추진
- 청년 귀어·정착 기반 확충
 - '어업권거래은행'(가칭) 설립
 - 청년 귀어·정착을 위한 컨설팅, 금융지원 확대
-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 단거리·생활구간 여객 운임 및 화물차량 운임에 대한 지원 확대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 승강설비, 진입경사로 등 설치지원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대

K-SDGs 세부목표 14-8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 2019.10: 8.8%	- 2030: 60.0% - 2040: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14-9]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9)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을 통한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강화

해수부

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

■ 추진 배경 및 목적

- UN-SDG 14를 위한 국제법으로는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그리고 동 협약의 실천을 위해 후속적으로 채택된 일련의 국제규범이 있음(95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업 이행협정, FAO 주도 IUU어업 대응협약, 지역수산기구 합의 등)
 - 우리나라는 이들 국제규범에 성실히 비준 또는 가입하였으며, 또한 이들 국제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다양한 국내법을 이미 제·개정해 옴
 - 이제까지의 대표적인 입법으로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2002), 해양환경관리법(2007),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17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2), 선박평형수관리법(2007), 수산업법(1953), 수산자원관리법(200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04), 습지보전법(1999), 원양산업발전법(2007) 등이 있음
- 다만 국제사회는 해양·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그간 실천의 효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함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국제입법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가장 가시적인 것은 유엔이 주도하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약’ 제정 노력임
 - 이 새로운 국제규범이 제정되고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될 경우, 해양환경영향평가, 해양보호 구역,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해양기술이전 분야 등에 있어 관련 국내법 개정 내지 신규입법이 요구됨

■ 정책과제

- 해양생태계 관련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 노력
 - 유엔 BBNJ 협약 내용 및 국내입법화 가능성 연구
 - 해양 관련 기존 국내법 검토 및 개정 추진

K-SDGs 세부목표 14-9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진행율	- 최초 산출 필요	- 2030: 100.0% - 2040: 100.0%

목 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1 여건 및 전망

- (산림과 산악생태계)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이용과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매우 큼
 - 산악생태계 및 (산악)생물다양성은 UN SDG 15.4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산림강국인 스웨덴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악 생태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가 필요함
- (생태축 복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축 복원은 산림생태계의 다양한 가치와 서비스를 증진시켜 우리나라의 산림생태계에 있어 상징적 역할을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과 보호지역의 확대 등의 노력으로 생태축의 연결성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
 - 보전가치가 높은 백두대간·DMZ 내 훼손지의 생태복원 추진이 필요하며, 단절된 산림 생태축 연결·복원에 대한 관심 필요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92년 유엔환경 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였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산림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을 강조함
 - SFM은 산림이 지닌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현 세대와 다음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모든 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2006년 홍천국유림관리소를 시작으로 국유림 중심의 산림경영인증을 실시함

-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견고해지면서 생물종 관리의 국가적 책임이 분명해 지고 있음
 - 자연생태계, 문화적 가치 중 자연환경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확보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각종 보호지역의 확대와 함께 보호구역 관리 효과성 증진 필요
 -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5개 부처 소관으로 총 14개 법률에 의거 지정·관리됨. 2017년 10월 기준, 국토면적대비 11.57% (육상), 해양면적 대비(1.4%)가 보호지역으로 설정
- 관리되지 않는 무분별한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 접촉점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신종질병의 직접적 원인 역할을 함
- 팬데믹은 사람, 가축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양서류 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 항아리곰팡이병, 박쥐흰코증후군, 뱀곰팡이병 등 야생동물의 신종질병과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특정 종의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이 야생 생태계로 다시 돌아가 야생동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호랑이, 사자, 멧돼지, 개, 고양이, 페렛, 햄스터 등 야생동물 및 기타동물에게 전파된 많은 사례가 있음)
- 야생동물·가축·사람과의 접촉은 팬데믹의 가장 직접적 원인임. 따라서 이 접촉점을 감소시키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팬데믹 발생과 전파 위험을 의미있게 줄일 수 있으며, 비용 대비 효과 비율이 가장 큰 팬데믹 예방 정책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 및 밀거래는 야생동물·가축·사람과의 접촉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이 접촉점은 「야생동물·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제도가 존재하며, 따라서 처벌되는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렵과 밀거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도 상아와 호골, 웅담 등을 포함한 멸종위기종과 그 부산물을 얻기 위한 밀렵과 밀거래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멸종위기종의 보전의 큰 위협이 되고 있음

2 비전 체계

목 표

15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명다양성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육상 생태계 다양화와 보전과 복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줄기/하천/습지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개선 • 습지보전계획 수립 및 실시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 DMZ 생태축 보전 사업
황폐화된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방지 및 재해 방지 • 황폐화된 산림 복원 •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폐화된 토지 복원
생물다양성을 위해 멸종위기종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증식 복원 • 공존 서식지 사업: 멸종위기종 서식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생물 다양성 살리기' • 멸종위기종 복원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 생물다양성 조사 및 종분포 지도 •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스테이션 구축
동식물 포획과 불법 거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테스 조약 준수 및 야생동물 검역 및 유통 관리강화 • 야생동물 포획 및 밀거래 금지 •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
침입외래종 예방 및 생태계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입 외래종 관리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 백두대간 등 보전·복원계획 • 남북산림협력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1) 육상 생태계 다양화와 보전과 복원활동

환경부·산림청

① 산줄기/하천/습지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개선

■ 추진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자연공원법」, 「자원환경보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나고야의정서 국내발효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육상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 K-SDGs의 목표에서는 ‘제 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9-23)’에 따라 육상보호지역비율 17%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을 63.05%에서 지속확대하도록 함

■ 정책과제

- 멸종위기종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사·평가 및 서식지 보전기능 강화 및 환경 개선
-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종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서식지 변동가능성에 따른 신규 서식지를 발굴·보전
- 생태통로 설치와 야생동물 찾길 사고 현황 DB 화 등 야생동물 교통사고 저감대책

② 습지보전계획 수립 및 실시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구온난화 및 인간의 인위적 행위 증가에 따른 서식지 훼손 및 서식환경 악화로 생물다양성 감소하고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습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습지보전이 핵심 환경문제의 하나로 대두
- 과거 5년간('13~'17) 습지 발굴조사('17 누적, 2,499개),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12개소), 람사르습지 등록(4개소) 등 습지보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
- 습지보전·관리와 관련된 조직·예산, 조사·정보제공, 국민인식 및 국제협력 등에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 국립습지센터의 기능·역할은 불충분하며, 사유지 매입 및 훼손지 복원 등을 추진할 재정적 뒷받침도 부족
 - 시민과학자 참여, 최신 ICT 도입·적용 등을 통해 습지조사의 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노력도 필요
 -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에 있어 보전과 개발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며, 습지보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에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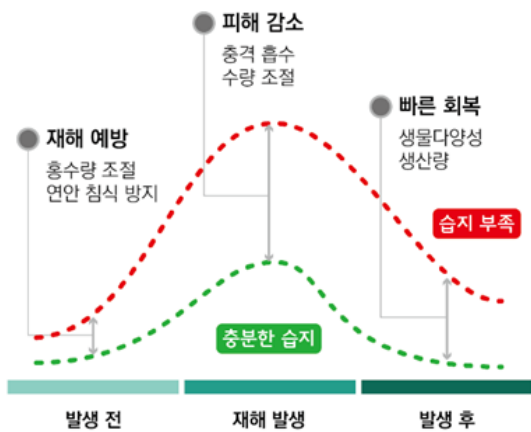
(참고) 습지의 기능과 가치

습지의 기능

- 폭우 방지 및 홍수 완화(이·치수)
- 해안선 안정화 및 침식 조절
- 지하수 충전 및 배출
- 물의 저장 및 정화
- 영양소 및 퇴적물 보유
- 오염물질 잔류
- 강우 및 기온 분야의 미시적 기후 안정화

습지의 가치

- 물의 공급(양적/질적)
- 어업과 농업, 운송
 - * 세계 어획량의 2/3 이상이 습지 건강상태와 연관
- 목재 및 기타 건축자재
- 이탄 및 식물성 에너지 자원
- 야생생물자원, 약초 등 습지 산물
- 생태관광 등 휴양 및 경관적 가치



순천만 갯벌

갯벌

- 내염성 있는 관목 및 교목 군락
-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얇은 연안에 분포, 해안 침식 방지
- 1km 맹그로브 습지는 해일 50cm 감소
- 습지 1ha당 연간 15,161달러 자연재해 방지 / 복구비용 절약 효과



우포늪

강과 범람원

- 강,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범람원 형성
- 내륙과 연결되어 거대한 저수지 역할
- 폭우와 홍수 발생 시 여분의 물을 저장하거나 분산시켜 하류지역 피해 감소
 - * 도시의 많은 강이 직강화 되어 홍수 조절 능력 상실



대암산 용늪

이탄습지

- 식물의 잔해가 오랜 기간 쌓여 형성
- 최대 30cm 깊이로 지구상 육지 면적의 총 3% 차지
- 기후변화 조절·완화에 중요 역할
- 전 세계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의 약 2배 저장

■ 정책과제

- 과학적 습지조사
 - 국가습지 조사체계 강화
 - 과학적 습지평가 실시
 - 국가습지 인벤토리
- 습지 보전 및 복원 관리
 - 습지보전법 정비
 - 습지보전 및 관리 강화
 - 훼손습지 복원
 - 습지생물다양성 보전체계
- 습지의 현명한 이용
 - 현명한 이용활성화
 - 습지 인식증진 및 홍보
 - 지방자치단체 습지관리역량 강화

③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면적은 1,720km²로 10년 전 1,166km²에 비해 47% 증가. 이 가운데 358개 지역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국제 인증을 완료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는 국가 식물유전자원의 51%가량에 해당하는 2120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희귀식물의 41%, 특산식물의 39%가 현지 내 보호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면적은 국가 보호지역의 4.09%에 해당하지만 다른 보호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높은 식물 다양성을 유지. 또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 구역 등의 기존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DMZ 일원 16개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한반도 동-서 생태 축을 이어주는 중요한 생물 다양성 보전기능을 수행

■ 정책과제

- 산림생물다양성의 체계적 관리 및 산림보호 강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정맥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핵심·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하여 관리*
 - * (핵심구역) 보호위주 / (완충구역) 탐방활동, 희귀수종 증식 등 허용
 - 관리효과성평가 가이드라인 세분화 및 개선
 - * 국제기준에 맞춰 지정목적에 맞는 적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

④ DMZ 생태축 보전 사업

■ 추진 배경 및 목적

-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일원은 살아있는 세계냉전사의 마지막 산물로서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이자, 한반도 핵심 생태축이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면서 개발 및 이용이 제한
 - 두루미, 저어새, 사향노루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6천여 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의 야생생물 서식지이며, 백두대간, 도서연안과 함께 한반도 핵심생태축으로서 국토생태네트워크 중심지역
 - 70년 가까이 자연적인 천이과정을 거치면서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형성한 지역으로, 그보존가치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 DMZ 내 자연보호구역 지정 제시('94, UNDP), 「DMZ Conservation : a proposal for action」수립(2011, IUCN),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보전 결의문 채택(2016, WCC총회) 등
 - 국내에서도 세계평화공원 등 DMZ 일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평화협력에 활용하기 위한구상이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 DMZ 인접지역에서 생태계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현실화되기도 했음

■ 정책과제

- DMZ일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참여 및 역할 강화
 - 지자체 차원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지원하고 단계적 확대 전략 마련
 -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19) 후속으로 DMZ 및 북측 확대를 지속 추진

- 민북지역의 민감생태계 보호와 훼손지역 복원에 지역의 인식과 역할 강화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후 지속가능발전 사업 지원 및 활성화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접경평화벨트 전략과 생물권보전지역 전략이 상호 조화, 일치될 수 있도록 추진
- DMZ와 민통선지역 생태계 조사 및 평가
 - DMZ 생태계 조사, 멸종위기종 복원, 외래종 관리 등 남북 공동사업 추진
 - 민북지역 해제 시 민감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조사·평가
 - 생태자연도 현행화 또는 별도의 평가기법 적용 방안 마련
 - DMZ와 함께 남북 생태축의 연결 관리협력 추진
 - DMZ일원 유해발굴지 등 산림복원
 - 유해발굴지와 산림복원사업을 연계한 DMZ일원 평화산림녹지축 조성
 - DMZ일원 안보·역사·문화 자원형 산림복원
 - * DMZ 산림복원 ('19까지) 251ha→ ('29까지) 938ha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5-1	(1)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2020: 16.6%	- 2030: 17.0% - 2040: 안정적 유지
	(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 2015: 63.7%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K-SDGs 세부목표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2) 황폐화된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청

① 산불방지 및 재해 방지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이상기후 등으로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산불피해 최소화 및 선제적인 산사태 예방으로 국민안전 보장이 필요
 - *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연중화·대형화 추세 / 산불피해 : (10년평균) 857ha → ('19년) 3,255ha
 - 여름 가뭄 겨울 고온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 기간 증가
 - 강원도 산불('19.4월) 조기진화 및 산사태 예방 대응 강화 필요
 - * 대형산불 진화 소요 일수 : ('00년) 9일, ('05년) 3일, ('17년) 4일, ('19년) 2일(13시간)
 - 여강원도 산불피해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 강화

■ 정책과제

- 산불 대형산불 예방 강화 및 산불진화 역량 제고
 - 여예방 야간산불 취약지 관리 강화를 위한 스마트한 산불예방 체계 구축
 - 여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방화선 역할을 하는 산불예방임도 설치(65km)
 - 여진화 산불진화자원을 확보하고 산불진화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② 황폐화된 산림 복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100대 명산내 등산객의 증가와 더불어 폐기물 처리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국유림 계곡 등에서 불법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산림의 파괴가 발생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폐기물 처리와 불법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 등이 강화

■ 정책과제

-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및 국유림 계곡 내 불법시설물·온라인상산림불법 행위 등 단속 강화
 - 폐기물 및 불법시설물 실태조사
 - 명산 지역내 폐기물 수거처리

③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민들의 산림이용에 대한 욕구가 많으므로, 이것을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산림이용의 방식을 위락 및 음주/취사 등에서 친환경적인 생태문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 이를 위해서는 휴양림 등 생태적 방식의 숙소 등의 기반 시설, 생태교육 시설, 산림의 생태적 이용을 위한 시민 교육 등을 활성화할 필요

■ 정책과제

- 산림관광 지역중심의 산림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 산림휴양 관광 숲여행 팸투어 운영 국가 숲길 및 산림이용을 위한 생태적 문화활동 개발
- 친환경 교육 강사 육성과 지속적인 친환경 캠페인 실시 및 산림휴양시설 전문 관리 인력 육성·배치

K-SDGs	지표명	현 수치	목표
세부목표 15-2	(1)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 2014: 66.67%	- 2030: 54개 - 2040: 안정적 관리

[K-SDGs 세부목표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

환경부·국토부·산림청

① 황폐화된 토지 복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폐기물 매립지의 경우 매립과정에서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매립 완료 이후 복원되어 토지환경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야 함

■ 정책과제

- 산림지의 경우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나 산불 예방
-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전략과 구체적 관리방안
- 습지생태계, 오염 토양복원 및 정화기술의 개발

K-SDGs 세부목표 15-3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 최초 산출 필요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4) 생물다양성을 위해 멸종위기종 보호

환경부·산림청·문화재청

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증식 복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현재 전세계적으로 동식물등이 멸종위기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동식물의 멸종이 가속화되어 대멸종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태학자들은 예측
 - 이를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앞서서 서식지를 사전 평가하고 적합한 서식여건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사·연구와 개선사업을 진행

■ 정책과제

- 우선 복원대상종 선정 조사·연구·복원사업
 - 멸종위기종 조사해서 우선 복원대상종을 선정해 기초조사와 복원기술 개발에 착수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복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종 보전을 위한 인적 토대를 구축

※ 현재 복원대상종 64종

분류군	등급 및 생물명		종수 (우선복원종수)
	I급(25)	II급(39)	
포유류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수달, 사향노루, 대륙사슴	무산쇠족제비	7 (5)
조류	저어새, 황새	따오기, 양비둘기, 검은머리갈매기	5 (4)
양서파충류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남생이, 금개구리, 구렁이, 맹꽁이	6 (4)
어류	여울마자, 모래주사, 잠수수치, 임실납자루, 흰수마자	큰줄납자루, 한강납줄개	7 (4)

분류군	등급 및 생물명		종수 (우선복원종수)
	I급(25)	II급(39)	
곤충	비단벌레, 산굴뚝나비, 장수하늘소	소똥구리, 꼬마잠자리, 닳무늬길앞잡이, 대모잠자리, 똥보주름메뚜기, 물방개, 여름어리표범나비, 왕은점표범나비, 은줄팔랑나비,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13 (1)
무척추동물	나팔고둥, 남방방개, 두드럭조개,	참달팽이, 갯게,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기수갈고둥, 대추귀고둥, 붉은발말뚝게, 자색수지맨드라미, 흰발농게	11 (1)
육상식물	나도풍란, 만년콩, 털복주머니란, 한라솜다리	가는동자꽃, 서울개발나물, 신안새우난초, 한라송이풀, 각시수련, 나도승마, 노랑붓꽃, 물고사리, 정향풀, 제주고사리삼, 칠보치마	15 (6)

※ 굵은글씨 : 우선 복원대상종(25종), 파란색 글씨 : 증식·복원 진행 중인 종

② 공존 서식지 사업: 멸종위기종 서식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생물 다양성 살리기’

■ 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 저어새 등의 멸종위기종은 농촌이나 어촌 등 인구 희소지역에서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혹은 마을 근처에서 도래·서식하는 경우들이 많음. 송도 우수지의 경우 송도 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저어새의 대표적인 서식지이자 번식지임. 주민들이 지역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생물다양성 모델을 건설

■ 정책과제

- 공존서식지 지원사업
 - 주요 멸종위기종 서식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생물 다양성 살리기’ 지원사업 확대(철원 두루미, 인천 저어새 등)
- 지역주민들이 전통생태지식을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생태·환경교육을 실시

③ 멸종위기종 복원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 추진 배경 및 목적

- 멸종위기종 보전정책 추진의 핵심기관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신설하여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부 산하의 다양한 기관과 민간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복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운영해야 함
- 종 보전 정책을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 정책과제

-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멸종위기종 조사·연구 및 멸종위기종 정보(DB)관리 기능의 협업
- 개별 동식물등의 복원 모니터링 관리 감독 강화 및 관계부처 협업 체계 구축

④ 생물다양성 조사 및 종분포 지도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은 종의 출현 여부와 종풍부도를 중심으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종과 서식지의 분포 및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론 개발과 자료 구축이 필요
- 국내 생물다양성 조사는 멸종위기종, 희귀종 등 생물종 중심의 조사와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으며, 개체군과 군집 생물다양성 등 종합적인 평가는 매우 미흡한 실정

■ 정책과제

- 생물다양성 조사 및 종분포 지도
 - MOL에서 제공하는 종분포지도는 국내 모든 종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국내 생물군계 및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기 어려움
 - MOL 프로젝트(Map of Life)에서는 한국의 663개 관측자료를 보유 (2018.12 기준), 국내 3차 전국조사 자료는 5,350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약 8배 이상의 데이터 양(量) 차이 발생

- 향후 국내 토지피복도 및 위성영상 등 환경공간자료 등을 활용한 생물종 분포 모델링 및 지도의 표준화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의 감소를 막고 보호지역의 면적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과 보호지역 보전과 관리에 평가 지표를 활용

○ 생물다양성 지표종 모니터링

- 향후 영상분석 기술발전과 음향 모니터링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면 양서류, 조류, 포유류 등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

⑤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스테이션 구축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질병매개동물, 멸종위기종, 침입외래종, 수렵대상종, 생물다양성 지표종, 농작물피해종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출현과 개체수 증감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성 증대
- CCTV·무인카메라 영상 전송 및 분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효율적인 야생동물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가능
 - 도로교통 및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다목적 CCTV를 설치하여 통행량 및 차량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 및 현안 대응에 활용 중
-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내 CCTV·카메라가 대규모로 설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노력 필요
 - 무인카메라 1074대, 무선전송카메라 276대, CCTV 30대 설치 중이며, 촬영된 영상을 딥러닝기법으로 분류하고, DB 구축자동화기술개발병행 ('20.12까지, 27억예산)

■ 정책과제

- ASF(멧돼지), 광견병·개홍역(너구리), 코로나바이러스(박쥐류), 기타질병(설치류) 등 관리 정책 수립과 해당 정책의 효과 검증
- 멸종위기종 보전
 - 멸종위기종 신규 지정 및 해제·등급변경 심의를 위한 개체군과 분포변화 관련 정량적 근거
 - 개발사업 대응 및 보호지역 관리·지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 복원 멸종위기종의 확산 변화 분석

○ 침입외래종 퇴치·관리

- 라쿤, 뉴트리아, 외래사슴, 사향쥐, 들고양이 등 침입외래종 퇴치정책 수립과 해당 정책의 효과 검증

○ 농작물 피해 동물 및 수렵동물 관리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관리 대책 수립 및 효과 검증
- 지역별 수렵종에 대한 적정 포획 허가 수량 산정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5-4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 2019: 320종	- 2030: 400종 지정 - 2040: 500종 지정
	(2)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 2019 • (동물) 67.2% • (식물) 87.0%	- 2030: 지속 증가 - 2040 • (동물) 100% • (식물) 100%
	(3) 산악지역녹색피복지수	- 2018: 99.86%	- 2030: 99% 유지 - 2040: 99% 유지
	(4) 종보호지수	- 2020: 90.12%	- 2030: 95.0% - 2040: 100.0%
	(5)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 2020: 0%	- 2030: 100% - 2040: 100% 유지

[K-SDGs 세부목표 15-5]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불법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5) 동식물 포획과 불법 거래 금지

환경부·기재부·문화재청

① 사이트스 조약 준수 및 야생동물 검역 및 유통 관리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야생동물 수입으로 인한 공중보건, 생태계 및 가축 보건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과도한 국내 수요 자체를 저감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이 야생동물 거래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사람에 대한 검역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간 거래와 검역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제기됨
 - 해외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수입하는 목적에는 개인소유 애완용, 동물원 등에서의 전시용, 연구 및 실험용 등이 있으며 이 중 개인이 애완용으로 소유하기 위하거나 애완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수입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
 - 애완용으로 야생동물을 소유, 사육하는 경우 또는 소규모동물체험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경우는 사육자와 주변인, 반려동물, 가축, 반야생동물 및 야생동물이 상호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며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개입하기도 어려움
 - 애완용 야생동물을 키우는 개인/소규모동물체험시설은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 영양, 행동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고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는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질병에 대한 취약성과 감수성을 증가시킴으로 동물 및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요인을 증가시킴
 - 또한 개인이 사육하기 어려워지면 야생에 방사/방생하는 경우가 증가함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새로운 질병 또는 병원체를 야생으로 도입하게 될 위험성이 큼
- * 야생동물 검역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8

■ 정책과제

- 환경부 내 수·출입 동·식물 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 야생동물 수·출입 승인 및 허가 관련 법령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야생동물 수·출입 시 모든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야생동물 수·출입 검역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야생동물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 하나 현 체계는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어려움
- 그러므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야생동식물 수·출입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칭) <야생생물수출입통합정보시스템>을 확립하여 야생생물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이를 통해 일괄적으로 야생생물 수·출입 신고, 승인,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세관 및 검역당국에 통보되어 다음 수·출입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야생동물 포획 및 밀거래 금지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내 야생동물 불법거래 역시 활발한 상황. 미비한 의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물범과 같은 야생동물의 한약재 사용은 이미 만연함.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9년 3월 불법 포획되었거나 밀거래를 위해 보관중인 고라니와 너구리, 살모사, 유희목 등 83가지 야생동물을 적발한 바 있음. 압수된 야생동물 중에는 삶과 구령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동물도 다수 포함
 - 현재 코로나 19의 원인으로 야생동물 포획, 밀거래 식용 등이 문제가 되어 중국 정부에서는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했음. 이런 불법거래는 생물다양성과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존재하고 있음
 - 야생동물 포획, 불법거래 등에 대해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및 처벌 강화

■ 정책과제

- 야생동물 밀렵 및 불법 거래 단속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알, 새끼, 집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멸종 위기 및 일반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등 행위
 - 수렵조수 이외의 조수 포획, 수렵금지장소에서의 수렵
 - 불법포획 야생동물은 가공·판매하는 행위
- 야생동물 체험 시설 운영 관리 감독 강화
 - 현재 라쿤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동물 카페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체험형 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미비. 이는 동물 복지차원 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접촉을 통해 또 다른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촉가능에 대해서는 보건학적 차원에서도 감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야생동물 기반 동물체험 시설에 대한 방역기준 강화 및 시설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야생동물 밀거래에 대한 대국민 인식교육 및 홍보

③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신종질병과 팬데믹은 주로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의 접촉면에서 발원하여 야생 생태계, 생물다양성, 인간사회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 국내에 존재하지만 현재 관리 제도가 없거나 관리가 부실한 접촉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제도, 법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미래의 신종질병 및 팬데믹 발생 위험을 의미 있게 감소시킬 수 있음

■ 정책과제

- 인간과 야생동물의 고위험 접촉점 파악 및 관리 계획
 - 국내에 존재하는 야생동물/가축/사람 고위험 접촉 부문 15개를 선정하여 관리제도 및 법을 도입하거나 지침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고위험 접촉면의 접촉 규모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세부목표로 함
 - 관리 대책이 필요한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 정책이 확립된 부문의 비율(%)을 지표로 삼음. 그러므로 2020년 현재 관리대책이 필요한 부문의 숫자는 15이며 지표 비율은 0%임. 20년 후 2040년까지 관리대책이 필요한 부문의 숫자를 0으로 낮추고 지표 비율은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연 번	접촉점	접촉의 형태	운영/ 위생관리 제도유무	전반적 위험도	관리방안	관련부처
1*	야생동물 체험시설	실내동물원, 체험형동물원, 이동식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유사동물원 및 야생동물/ 이색동물/희귀동물 전시시설에서의 종사자/방문객과 살아있는 야생동물/가축/반려동물 사이의 접촉	X	+++	동물원수족관 법 허가제 도입/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환경부

연번	접촉점	접촉의 형태	운영/위생관리제도유무	전반적 위험도	관리방안	관련부처
2*	살아있는 야생동물 수입/판매	반려용/애완용/관상용 등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입 및 판매되고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이색동물/희귀동물/가축/반려동물/사람 사이의 접촉	△	+++	야생동물 검역체계 도입/ 부처간 업무조정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	개인소유 야생동물	개인이 애완용/관상용/식용으로 국내에서 소유, 사육, 번식, 거래하고 있는 야생동물/이색동물/희귀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과 사람/반려동물/가축 사이의 접촉 (이 접촉면은 현재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관리를 위한 제도 부재)	X	+++	야생동물 개인소유/판매 관리를 위한 법제도 도입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4	육견농장	가축위생관리를 위한 제도권 관리 밖의 개고기 생산을 위한 농장인 육견농장 대부분은 야생동물 서식지 내 산골에 위치하며 음식물쓰레기, 축산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야생동물/가축/사람/반려동물 병원체의 대규모 교환이 일어나고 있음	X	+++	육견농장 관리제도 또는 폐지법 도입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5	합법/불법적 야생동물 농장	곰 농장, 멧돼지 농장, 꿩 농장, 기러기 농장, 오소리 농장 등 야생동물 사육농장과 그 유통과정에서의 종사자와 야생동물/가축/반려동물 사이의 접촉	△	++	야생동물 농장 생물보안 관리를 위한 법안/지침 도입/ 곰 생추어리 건립/운영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연번	접촉점	접촉의 형태	운영/위생관리제도유무	전반적 위험도	관리방안	관련부처
6*	합법/불법적 야생동물 인공증식 시설	다람쥐, 개구리, 뱀 등 환경부 허가 야생동물 인공증식 시설과 그 유통과정에서의 종사자와 야생동물/가축/반려동물 사이의 접촉	△	++	야생동물 인공증식 허가제도 폐지 또는 생물보안관리 제도 도입	환경부
7	준야생 동물	증가하고 있는 유기견, 들개, 길고양이, 들고양이, 비둘기 등 인가 주변의 준야생동물과 다른 야생동물/사람/가축/반려동물 사이의 접촉	△	++	준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부처간 업무 조정/관리제도 도입	농림축산 식품부/환경부
8*	유기 애완용 야생동물	유기/방치되거나 길 잃은, 또는 탈출한 반려/애완/관상용 이색동물/야생동물과 사람/가축/반려동물 사이의 접촉	X	++	유기 애완용 야생동물 보호소 건립/운영	환경부
9	야생동물구조재활활동	야생동물구조센터 및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서 구조된 야생동물과 가축/반려동물/사람 사이의 접촉	△	+++	야생동물구조 재활활동에서 생물보안지침 마련/시행	환경부/ 문화재청
10	박쥐서식 동굴탐사	합법 또는 불법적인 동굴탐사 과정에서 동굴 거주 야생동물 (박쥐 등)과 탐사자 사이의 접촉 등	X	+++	박쥐서식 동굴탐사 활동에서 관리지침 마련/시행	환경부/ 문화재청

- 환경부 주관으로 (가칭)“야생동물생물보안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접촉점(부문)의 정의 및 합리적 관리대책과 방안을 규정할 수 있음
- 관리정책이 확립되었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법안 통과 및 발효, 행정고시 등을 통한 지침 공포 등의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 평가 기준에 따른 법 개정, 신규 법안 도입, 지침 공포 여부 등 각 접촉점의 관리정책 확립 여부(미확립=0, 확립=1)를 지표 비율 측정의 근거로 함
- 관리 대책이 필요한 접촉점(부문) 15가지 중 관리정책이 확립된 접촉점의 비율(%)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 관리 대책이 필요한 접촉점 중 관리정책이 확립된 부문의 비율을 향후 20년 이내에 0%에서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5-5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 2018: 4719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2) 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 확립된 접촉점 수의 비율	- 2020: 0%	- 2030: 지속 확대 - 2040: 100%

[K-SDGs 세부목표 15-6]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침입외래종 예방 및 생태계 영향

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농진청

① 침입 외래종 관리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해 침입외래종의 유입 증가에 따른 국내 생태계 내 정착 및 확산이 빨라지고 있음.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는 침입외래종의 생물종별 접근, 지역적인 접근, 적응 관리 순환, 시행 정책에 대해 사전고려의 원칙 적용,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파랑볼우렁(블루길), 큰입배스(배스), 뒤펽벌, 솔잎혹파리,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침입외래종에 의한 국내 생태계 훼손 및 농업, 산업 분야 피해는 이미 주요한 사회 이슈임. 기후변화에 의해 제기되는 침입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변화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정책과제

- 침입외래종의 모니터링과 빠른 경보체계 프로그램 구축
 - 새로이 도입되는 외래종과 기존에는 유해성이 없었으나 침입이후 유해성이 변화하는 외래종을 모니터링하며, 침입외래종에 대해서는 빠른 경보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이 필요
 - 침입외래종이 지역의 생태계에 완전하게 정착하기 이전에 빠르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침입외래종의 방제·박멸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유해성이 변화하는 침입외래종의 모니터링은 지역차원에서 조사 및 감시(surveillance)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며, 빠른 경보체계를 통한 관리방법 이행이 필요

○ 외래종 위해성 평가·관리 기술개발 및 관리대상종 확대

- 침입 외래종에 대한 강력한 사후대응을 위해 외래생물 전국서식실태조사 주기 단축 (5년→3년), 생태계교란종 정밀 모니터링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침입 외래생물 조기 발견 및 조치(2019 이후), 친환경 방제·퇴치 기술개발 추진 및 제거사업 확대(계속), 지자체·시민단체와 확산추세종 선정 및 집중제거 추진(계속)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LMO 위해성평가기관 실험, LMO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확대, LMO 위해성 심사 지속 추진
- 해양생물 중 생물·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관리를 포함하여 인위적 요인에 의한 침입외래종에 대한 관리도 필요
- 침입외래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와 생태계 위협요인을 줄이기 위해 기존 침입외래종 통제제도의 확대 및 정착 필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5-6	(1)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	- 2018: 330종	- 2030: 900종 - 2040: 1,500종
	(2)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 2020: 81,791ha	- 2030: 10,000 ha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15-7]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7)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

산림청·환경부

①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급격한 산업화로 형성된 우리나라 도시는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 우리나라 도시에는 현재 인구 10명 중 9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과 도로, 공공시설 등 도시민의 거주와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수요가 크게 증가. 이러한 토지 수요는 도시지역 내 산림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그 면적을 계속 축소. 이로 인하여 도시 자연환경은 단절되고 피해를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원, 녹지, 도시숲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도시 생태계 특성과 도시 생태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성 없이 일회성이며 단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의 단절된 생태축 연결이나 훼손된 생태계 회복 등 체계적인 생태기반 조성과 관리가 미흡한 상황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 또는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에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훼손 생태계 및 도심생태계 복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행 수단이 없어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다수
- 이에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도시지역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와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확보하고자 환경부는 201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에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생태복원사업을 시행이 필요함

■ 정책과제

- 도시생태축 연결복원사업
 - 입지조건과 유형을 결정한 후, 생물종 전문가와 대상지의 기상환경, 토양환경, 수환경 등의 생태기반환경 조건과 생물 서식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목표한

생물 서식종의 이동에 적합한 연결로의 규모와 기법 등을 계획, 설계하여 적합한 연결로를 조성

○ 도시 하천·습지축 연결·복원사업

- 소하천과 실개천 등 물길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 후 해당 사업 대상지의 유역 특성, 하도 특성, 생태기반환경조건, 수리·수문, 수질, 서식생물종, 서식지 현황, 훼손 현황 등을 조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생태계 구조 및 기능 향상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며, 재해 예방 및 치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사업을 시행

○ 도시 훼손지 복원사업

- 산림생태계 복원사업은 훼손된 산림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온전성, 건강성 회복을 위한 식생과 생물종들이 서식하는데 기본이 되는 환경 조성, 재해방지를 위한 토양의 침식·유출 차단 등을 위해 시행

○ 기반환경 복원

○ 산림식생 복원

- 재해방지를 위한 토양환경 안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전 단계에서 결정한 복원방향 (훼손원인 제거, 원형복구, 부분복구, 재창출 등)에 대해 복원 방법을 구체화

② 백두대간 등 보전·복원계획

■ 추진 배경 및 목적

-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줄기로서 남과 북을 잇는 중심축이며,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나, 경제개발시대를 거치며 개발압력이 높아 이에 따른 훼손이 증가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 기본 계획('18~22)을 참고하여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을 신규지표로 포함하고 2019년 기준 295ha의 산림복원 면적을 2030년 1,812ha로 확대 계획이며, 도심생활권 등 기타지역 복원계획을 반영한 도심생활권 복원면적을 신규지 표로 포함하여 150ha 면적을 500ha로 확대

■ 정책과제

- 보호지역의 확대와 합리적 관리
 - 백두대간 보호지역 확대
- 백두대간의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일부등재
 -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2020-2029) 중 ‘산림복원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음. 본 시스템이 구축되는 '23년 이후에는 산림복원 면적에 대한 통계DB 관리 및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생태자원을 지닌 백두대간과 DMZ일원을 각각 남북 방향, 동서 방향의 주요 생태축으로 설정하는 것은 K-SDGs달성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추후 산림복원 면적 대한 지표 설정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산림복원 기반구축 및 한반도 산림생태축 보전·복원
 - 산림복원 대상지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 기술교범 표준 마련
 - 백두대간, 도서 해안지역 등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20~'29)
 - *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 22개소, 백두대간 복원 등 1,008ha, 도서·해안 805ha

③ 남북산림협력

■ 추진 배경 및 목적

- 남북산림협력은 당국 간 합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국민지지 기반 마련해야 함. 현재 산림협력은 UN제재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영역임. 북한의 산림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남한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그래서 북한의 산림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함

■ 정책과제

- 남북산림협력의 단계적 이행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분석 강화
 - 양묘장·남북산림협력 센터를 조성운영
 - 북한·국제사회 동향분석
 - 북한의 주요지역 산림변화 모니터링 실시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5-7	(1)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 2017: 315ha	- 2030: 1,812ha - 2040: 3,000ha
	(2) 도심/생활권 복원	- 2017: 150ha	- 2022: 379ha - 2030: 지속 확대 - 2040: 지속 확대

제 2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주요 정책과제

IV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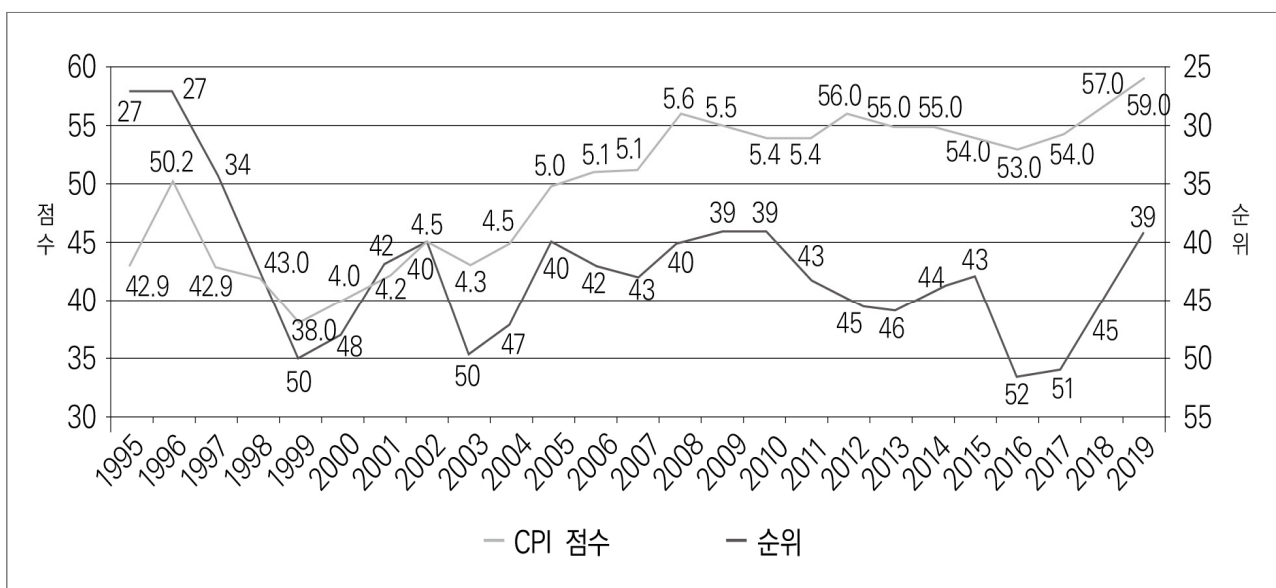
목 표 **16**

평화·정의·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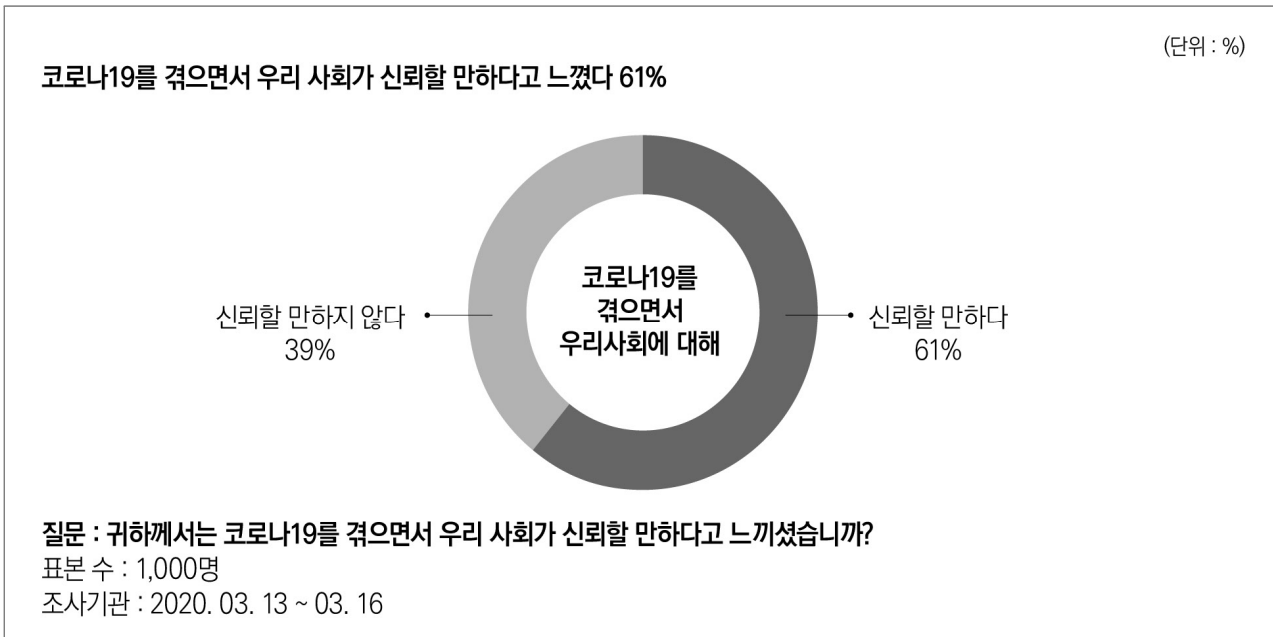
1 여건 및 전망

- 유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그리고 SDG 관련 국제단체들은 16번 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유해 나가고 있으며, 파트너십 형태로 16번 목표 이행을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 다수의 개별국가들이 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국가의 협력 플랫폼을 만들었으며, 한국도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평화, 정의, 포용은 SDG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성취해야 할 목표임
 - 크로스커팅 성격의 거버넌스에 관한 것으로, 다른 목표와 연계되어 정치사회적 불평등을 다루고 있음
 - 목표 16의 비전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작동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적 신뢰의 제고가 핵심임
-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2017년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CPI 점수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순위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OECD 35개국 중 27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출처: 이상학, 2020.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 분석」한국투명성기구

-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사회적 신뢰 및 공공부문의 역량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졌음
 - 정부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믿음을 주었고, 일반시민들은 신뢰와 협력으로 부응함
 - 그러나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짐



출처: 한국리서치, 2020,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 72호

- 코로나19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으나,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소득감소 외에도 고용 불안정, 실업, 휴·폐업 등 코로나19의 고통은 계층에 따라서 불균등하게 표출되고 있음
 - 비대면 일상을 떠받치는 보건, 택배, 돌봄 등의 대면 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 과로에 시달리고 있음
- 사회적 신뢰 및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여졌으나, 성장과 경쟁력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성향 등 근본적인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음
 - 위험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각자도생의 태도 역시 여전히 강고함
 -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비접촉의 행동지침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신뢰·연대·협력이 지속되기는 어려움

-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작동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야 함
 -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외에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에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임
 -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대상의 혐오표현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세게 표출되고 있음
 - 기본적인 자유 및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시도가 요구됨

2 비전 체계

목표

16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거버넌스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적 침입, 강도 절도 집중 검거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등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 증진 및 평등한 사법적 보호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앞에서의 평등 구현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 감소,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 • 마약 및 조직범죄 퇴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금지법 등 청렴기준 규범력 강화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지원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체감하는 적극행정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행정 확립 •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 확대 • 선거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출생 등록 및 법적 지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보장 및 기본적 자유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알 권리 보장 • 기본적 자유의 보장
개도국의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인권 보호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체계 정비 • 디지털 불평등/정보 격차 해소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 증진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경찰청·교육부

① 상습적 침입, 강도 절도 집중 검거

■ 추진 배경 및 목적

-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민생침해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일상의 강력·폭력 범죄 엄단

■ 정책과제

- 재범률이 높은 상습적 침입 강도·절도 집중 검거
 - GeoPros* 등 활용, 취약지역·시간대 가시적 경찰활동에 주력
 - * 공간통계와 범죄데이터를 접목하여 범죄위험지역을 예측하고 수사·예방에 활용하는 시스템
- 악성 폭력범죄 엄단하고, 치료연계 활성화 및 보호시설 확대
 - 응급실 폭행, 서민 갈취 등 악성 폭력범죄 엄단
 - 강력 범죄자 치료연계 활성화 및 보호시설 확대

②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추진 배경 및 목적

- 학령기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두려운 학교폭력 인식 및 안전한 학교에 대한 기대 제고
- 학교폭력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해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보장 및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도모

■ 정책과제

-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 학교 자체해결제 적용
 - 학교 자체해결 적용시의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 위한 생활기록부 기재방식 개선
 - 교내선도형 조치 시 가해학생에 대한 단계별 안전장치 마련
 - 가해학생·보호자의 개인상담 및 특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활용 추진
- 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의 고충 감소를 위한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추가 설립 등 피해학생 전담기관의 지속적 확대
 -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 설립 및 시범 운영 추진
 -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 개정 및 ‘교육청 전입학 지침’ 개정
- 우범소년 송치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추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의원 비중 감소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비중 확대
 -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확인시 해당교직원 징계 가중 및 학교폭력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 마련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6-1	(1) 범죄율 (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 2018: (10만 명당) • (살인) 1.6건 • (강도) 1.6건 • (성폭력) 61.9건 • (폭력) 403.1건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2) 학교폭력 피해 경험	- 2019: (1천 명당) • (언어폭력) 8.1건 • (집단따돌림) 5.3건 • (스토킹) 2.0건 • (사이버괴롭힘) 2.0건 • (신체폭행) 2.0건 • (금품갈취) 0.9건 • (강제심부름) 1.1건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등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경찰청·복지부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추진 배경 및 목적

-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 정책과제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제도 마련 및 개선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8개소 운영 중(20.9월 기준)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②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장기실종아동 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 정책과제

-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무연고 아동 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등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6-2	(1)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율	- 2018: 2.98%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실종아동 미발견 건수	- 2019: 99건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 증진 및 평등한 사법적 보호 보장

법무부·경찰청·행안부·인권위

① 법 앞에서의 평등 구현

■ 추진 배경 및 목적

-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 및 기능 수행을 제도화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여 법치의 제도적 정립 노력을 강화함
- 전반적인 법적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취약계층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무지에 의한 범법 행위 및 불이익을 예방함

■ 정책과제

-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적 지원 제도 강화
 - 무료 법률 상담, 마을 변호사 확대
 - 아동 및 정신적 장애인(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전문 인력 확대
- 취약계층의 법적 이해를 위한 제도 마련
 - 쉬운 법률 용어로의 개정 및 사용 확대

K-SDGs 세부목표 16-3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법률구조건수 증감률	- 2019: 7.1%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 감소,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권익위

①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

■ 추진 배경 및 목적

-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

■ 정책과제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

② 마약 및 조직범죄 퇴치

■ 추진 배경 및 목적

- 범죄조직단체가 기업화하면서 이들의 범죄행위가 전문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고 위법행위의 양태가 다양해짐
-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마약 제조 및 유통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범죄조직단체를 적발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

■ 정책과제

- 국제범죄조직의 통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차단함
 - 실질적인 단속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공조를 강화함
- 법집행기관의 분산형 수사체계를 지양하고 상호 수사공조의 필요성 인식 제고
 - 통합형 수사체제 구축 또는 통합된 수사기관의 설립 추진
 - 범죄 수사 및 정보 교환, 수사협조 및 기술지원 등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6-4	(1) 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 평균액	- 최초 산출 필요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마약범죄건수	- 경찰범죄통계를 활용하여 산출 필요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감소

권익위

① 청탁금지법 등 청렴기준 규범력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청탁금지법(16.9.28. 시행) 준수 의식 강화 및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 등 낡은 관행 해소 필요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 금지된 금품 수수 등에 의한 부정적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구현

■ 정책과제

- 청렴기준 강화를 위한 청탁금지법령 보완
 - 법 시행 후 대두된 부정청탁 대상임이 명시될 필요가 있는 업무* 및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 반영
 - *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 각급 공공기관 제도 운영 역량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유도
 - 각급 공공기관 신고처리 등 현황 분석에 따른 제도 운영 유의사항 도출 및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 등을 통한 전파
 - 부패방지 시책평가·현지점검으로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부정청탁 상담·조치 내용 적극 공개 등 법 집행력 확보

②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공공부문의 반부패 정책이 주로 적발·처벌 등 사후적 대책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유인·지원하기 위해 '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

- 공공기관의 청렴정책 노력·과정(부패방지 시책)과 결과(청렴도)를 평가하여 자율적 청렴정책 추진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그 취약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다시 그 결과가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되는 선순환 체계

■ 정책과제

-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관별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측정·평가 체계 지속 검토
 - 변화하는 부패 관련 환경을 반영하고 측정의 신뢰도·타당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 항목 등 측정모형 지속 검토
 - 공공부문의 반부패·청렴 노력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 창출·확산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지속 보완
- 각급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공 및 민간 부분과 공유하여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기관·정책 사례 확산 활성화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6-5	(1) 부패경험지수	- 2019: 1.085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 2010~2019년까지의 청렴도 설문 의 전체 부패경험률 평균	

[K-SDGs 세부목표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이행

전부처

①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체감하는 적극행정

■ 추진 배경 및 목적

- 현장에서 기관과 개인의 실질적인 행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공직사회의 유인구조 개편

■ 정책과제

- 적극행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는 기반 확대
 - (사전컨설팅) 합동 DB 구축, 전문성 제고 등 사전컨설팅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사례심의 강화 등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활용 확대
 - (중점분야 선정) 적극행정이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안전·보건·환경 등 생활·민생 분야를 중점분야·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사례를 DB화·확산
-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보호 강화
 - (평가승진) 적극적으로 일 잘한 사람에게 인사상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승진, 특별승진·승급 등을 과감하게 운영하는 등 평가 및 보상 강화
 - (적극행정 보호) 직무수행 책임보험 시행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
-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 지원 확대 및 협업 강화
 - (문제해결형 조직) 도전적 과제수행을 위한 ‘벤처형 조직’ 활성화 방안 마련,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부처 자율설치 조직인 ‘긴급대응반’ 확대
 - (부처간 협업)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협업과제를 집중 관리하고, 성과평가·인력 등에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②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행정 확립

■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부터 공정한 정책 집행 확립

■ 정책과제

- 공직사회 내의 반칙과 부당한 특권 해소
 - (전관특혜 해소) 퇴직 고위공직자의 부정청탁·알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재취업 심사 결정사유 공개 등 재취업 관리 강화
 - (부당수령 근절) 초과근무수당·출장비의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 금전적 처벌 강화 및 기관 불이익 부여, 징계기준 구체화 등 방안 마련
 - (자의적 재량행사 퇴출) 거주지역,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등에 따라 면제·감경 혜택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취소·정지·과태료부과 등) 및 공개모집 선정·관리 등에서 재량행사 기준 구체화
-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 (채용 투명성)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응시자 간 제척·기피 등 의무화, 기관별 채용비리 현황 공개 및 평가 반영 확대
 - (사회적 가치 반영)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20년)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 강화
 - (균형인사) 연륜·명망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위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공공부문의 여성·비수도권 대표성 제고 지속 추진

③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공직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전 구성원의 혁신역량·동기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교육 개편

■ 정책과제

- 공직사회 디지털 역량·마인드 제고
 - (데이터 인재) 공직 내 빅데이터·AI 활용 제고 등을 위해 데이터 직류 신설 및 민간 전문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
 - (디지털 리터러시) 기존 정보화 교육을 △디지털 감수성 제고 △디지털 기반 정책·서비스 설계 중심으로 개편
 - (AI 전문교육) 공직 내 데이터 분석 및 AI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설치
-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 (역할 이해 교육) 국·과장 등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조직 관리자로서 역할 이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
 - (소통·협치 역량) 특히 스토리텔링 기반의 정책소통 및 민간과의 협치 역량, 디지털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혁신 사례의 공유 및 확산
 - (혁신 교육)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각급 기관의 실제 혁신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하고, 현장·국민 접점에서 혁신성과를 창출한 실무 공무원(‘혁신 스타’)을 정부혁신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 실시
 - (벤치마킹) 지역의 우수 혁신사례는 부처 전국 단위 사업으로 선정하여 확산, 부처 간 벤치마킹 실적을 혁신평가에 반영
 - (혁신 모임) 정부혁신 어벤져스 운영 확대 등 공직 내 자율적 혁신 활동 및 분위기 확산

④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에 집중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종이기반에서 디지털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필요
- 현장 중심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정책과제

- 업무 혁신을 위한 자동화 및 문서서식 개편
 - (자동화) 여비·업무추진비 정산 등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RPA) 추진('20년), 공무원에게 AI 기반의 1:1 업무 비서 제공 추진(~'21년)
 - (서식개선)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공서식 재설계
- 현장 중심의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 (2PC→1노트북) 현장 중심의 협업 및 원격 문서처리를 위하여 고정된 업무환경을 가상 PC, 모바일 중심으로 개선
 - (모바일 행정) 모바일 및 IoT·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보건·지역돌봄 등 생활밀착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협업 지원
 - (클라우드) 메신저, 이메일, 영상회의 등의 소통도구와 G드라이브(정부 클라우드 저장소)를 통합·연계 등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으로 전환
 - (스마트 보고) 온라인으로 보고시간 공유·예약, 서면보고 기능 반영 등 '스마트 보고 시스템' 확대로 불필요한 대면보고 및 대기시간 감소 추진

K-SDGs	지표명	현 수치	목표
세부목표 16-6	(1) 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 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통계치 산출 필요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 보장

전부처

①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 확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공공이슈의 복잡성은 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시민이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과정의 파트너가 되어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공고화

■ 정책과제

- 정책 과정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 지원 및 보장
 - 정부 부처의 다양한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시민참여 보장
 - 선출직 공무원에 일정 비율의 사회적 약자 참여를 보장
- 시민참여제도 확대
 - 주민이 직접 사업 선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강화
 - 반사회, 주민모임, 지역방송의 활용,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 및 의견 교환 활성화 지원
- 정책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 등 활용
 - 정책의제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진정, 청원, 발안, 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용함
 - 정책감사 과정에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등의 도입 고려

-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성과분석을 위한 측정 모형 개발
 -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산 노력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 모델 마련 및 성과분석
 - 정책성과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

② 선거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 참여권을 행사하도록 지원

■ 정책과제

- 투표소의 물리적 환경 개선
 -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도 향상을 위해 적절한 장소 제공
 - 투표소에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 투표소 지정
- 투표 참여를 지원하는 정보 및 인력 제공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거 홍보물 제작 및 지원
 - 사회적 약자의 투표 지원 인력 확충

K-SDGs 세부목표 16-7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통계치 산출 필요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8) 출생 등록 및 법적 지위 부여

복지부·법무부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은 국가·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보호
- 더이상 아동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키울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정책과제

- (등록될 권리)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
 - (출생통보제 도입) 국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모든 우리나라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가족관계등록법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 강화
 - (출생등록제 도입 검토)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하여 공적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검토
 -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출생신고 시스템으로 인한 사각지대 최소화
 - (보호출산제 도입) 출생통보제만 도입시 의료기관 출생 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익명)출산제* 도입 병행
- * 母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K-SDGs 세부목표 16-8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 2020: 제도없음	- 2030: 제도 도입 - 2040: 제도 도입

[K-SDGs 세부목표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9)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보장 및 기본적 자유 보호

전부처

① 국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알 권리 보장

■ 추진 배경 및 목적

-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 국민의 욕구에 맞는 행정을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함

■ 정책과제

- 사전정보공개 강화
 -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
- 정보공개율 제고
 - 정보공개율이 낮은 기관을 중심으로 공개율 제고 노력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불복할 경우 청구인의 이의신청 지원
- 공표정보의 발굴·개선 및 제공 확대
 -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빅데이터 조사·분석하여 이를 집중 발굴
 - 실생활 정보, 사회이슈 정보 등 국민관심 정보를 시의성 있게 발굴
- 공표 정보의 품질 개선
 - 국민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개선하여 제공
 - 기존 공표정보는 항목 추가 등 적극 보완하고, 신규정보의 경우에는 정보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발굴

② 기본적 자유의 보장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인간으로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시민적 권리 조항을 규정하고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마련함

■ 정책과제

-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호 교육 강화
-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과 행정규제의 폐지 또는 제·개정
-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시 엄중 대처
 - 기본적 자유 침해에 대한 사후적 대응 강화
 - 침해되기 쉬운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호방안 강구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6-9	(1)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 2019 • (청구건수) 846,953건 • (공개건수) 846,953건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기본적 자유 침해 경험 비율	- 2019: 8.2%	- 추후 보완

[K-SDGs 세부목표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10) 개도국의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외교부·인권위

①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 추진 배경 및 목적

- 빠른 속도로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상황
-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이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에 대응한 예방 체제 구축

■ 정책과제

- 분쟁취약성이 높은 개도국의 정부가 투명하고 책무성을 갖춘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함
 - 개도국의 폭력 종식과 평화구축을 도모하는 양자 및 다자지원 모색
 - 개도국이 폭력과 갈등구조를 사전에 전환하고 예방하도록 선제적으로 접근
- 국별협력사업과 국제기구협력사업을 확대
 - 평화 구축을 위한 개도국 정부 역량 강화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ODA 사업 유형에 있어서 연수사업과 민관협력사업, 봉사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함
 - ODA사업 지원 규모에 있어서 분쟁취약국에 대한 사업 확대
- 개도국 공공기관의 평화, 거버넌스 분야의 학계 및 전문가그룹, 국제시민사회단체, 개도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 개도국의 현지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의 현지 평화 기반 확대

K-SDGs 세부목표 16-10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비중	- 추후보완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 수립

인권위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추진 배경 및 목적

-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효과성 제고 및 차별금지법이 미비한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한 권리 인정
- 모든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제함으로써 포용사회로의 진전

■ 정책과제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TF 조직
 - 법제정 발의 및 통과를 위한 정치권 설득
- 인권교육 및 평등교육 강화
 -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 강화
 - 차별 관련 국제인권위원회 권고안 교육
- 「전반적 차별백서」 「인권백서」 발간
 -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를 통해 차별의 심각성을 명시하고 법제정의 필요성 인식 제고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6-11	(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 2020: 제도없음	- 2040: 제도 도입
	(2) 차별 경험 비율	- 2019: 28.2%	- 2030: 지속 감소 - 2040: 지속 감소

[K-SDGs 세부목표 16-12]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한다.

(12) 디지털 인권 보호 강화

인권위·법무부·경찰청

①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누구나 인터넷·전자상가 등에서 변형 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 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음
-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적발 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

■ 정책과제

-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 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
-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 제한
 - 업무목적 스마트폰 촬영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사실 표시
- IP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
 - IP카메라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초기 비밀번호 변경 안내
- 불법 영상 촬영기기 수입 심사·검사 강화
 - 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카메라 관련 물품의 수입심사·검사 강화

②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체계 정비

■ 추진 배경 및 목적

-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
-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차단·삭제에 소극적, 불법촬영물의 유포·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해비 업로더 및 웹 하드, 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미흡

■ 정책과제

-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AST TRACK 마련 (수사기관 요청시 즉시 차단·삭제)
-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
 - 불법영상정보 공유대상 사업자 확대 (인터넷사업자 등)
 -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 영상물 업·다운로드시 위험성 경고 팝업창 신설
- AI 등 활용, 유포 탐지·차단 기술 개발·적용
 - 오디오·동영상 유해성 분석·검출 요소 기술 개발
 - AI·빅데이터 활용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 불법영상물 신고 활성화
 - 대화형 메신저,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재유포 차단 '신고' 버튼 개설

③ 디지털 불평등/정보 격차 해소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함에 따라서 기업, 국민생활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충이 커짐
-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과 키오스크 등 무인시스템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디지털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충이 가중됨
-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고 불평등을 해소함

■ 정책과제

- 디지털/인터넷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개발 체계 마련
 - 전반적인 디지털 정보 문해력 및 정보활용 능력 배양
 - 지역사회를 통한 방문교육 및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
-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
 - 유니버설 디자인,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 디지털 기술에서의 차별과 배제 근절
 - 디지털 기술을 쓰지 않아도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6-12	(1)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 2019: 73.4%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디지털 정보격차 감소율	- 최초 산출 필요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목 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1 여건 및 전망

- SDG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와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임
 - UN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ODA를 포함한 개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공공 및 민간재원의 동원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에 중점을 둠
 - SDG 이행을 위해서 각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의제를 포괄하고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함
- 한국은 OECD DAC 가입후 ODA 정책을 선진화하고 원조 규모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음
 - 2019년 기준 ODA규모는 DAC 회원국 중 15위이며, ODA/GNI는 0.15%로 DAC 평균 0.30%의 절반 수준으로, 2018년보다 0.01%p 증가했음
 - 다양한 개발주체간 포용적 파트너십 강화에 참여하고 시민사회, 민간부문, 기업 등이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야 함

〈 2019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백만불) 〉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비중(%)
• ODA (A+B)	2,358	2,521	6.9	100.0
- 양자간 ODA(A)	1,734	1,903	9.7	75.5
무상원조	1,131	1,217	7.6	(64.0)
유상원조	603	686	13.7	(36.0)
- 다자간 ODA(B)	624	618	△1.0	24.5
• ODA/GNI(%)	0.14	0.15	-	-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0.4.16.

-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는 감염 예방을 위해 국경 봉쇄 및 보호주의 강화의 움직임을 드러냄
 - 코로나19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온 공동의 노력을 주저앉히고 개발 국가들의 치열한 민낯을 드러냈음
 - 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사무총장은 백신 민족주의에 대해 경고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일한 선택은 글로벌 협력이라고 강조함
-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전체 회원국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4% 수준인 반면 한국의 ODA 증가율은 11.9%로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음
 - 재정규모의 제약 때문에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데 한계 요인을 갖고 있으므로, 개발재원 확충을 위해 민간자금 동원과 혁신적인 개발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함
 - ODA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의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 불황에 대한 불안에 직면해 있음
 - 코로나19가 쏟아올린 국가 간 장벽으로 인해 그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질서가 변화할 것임
 - 자국민을 위한 방역과 생필품 보급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타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격을 입을 것임
- 동시에 국경을 뛰어넘어 확산되는 바이러스는 국가주의적 대처로는 막을 수 없고 강력한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의 처방으로 이어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는 현재보다 훨씬 복잡적이고 다변화할 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세계시민들의 사회적 연대가 수반되어야 하며,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2 비전 체계

목 표

17

글로벌 연대와 협력 강화

추진 전략	추진 과제
ODA 확대 및 개발자원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확대 및 개발자원 다양화 • ODA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
공정한 다자간 무역시스템 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교역 시스템 및 투자 증대 촉진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강화 지원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ODA 추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계획의 지속가능발전 영향 검토 강화 • 이행 관리 및 평가 내실화 • 전문성 확보 및 인프라 구축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협력기구를 선정하고 다자협력협의체 운영
공공-민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부문과의 협력 강화

3 정책과제

[K-SDGs 세부목표 17-1]

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1) ODA 확대 및 개발재원 다양화

외교부·기재부·국조실

① ODA 확대 및 개발재원 다양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ODA 확대 필요
 - 현 추세에 따르면 2030년까지 SDGs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이행 가속화를 위한 ODA 확대 필요
 - ※ '19.9월 SDG 정상회의 계기 향후 10년 간 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성을 반영한 정치선언문 'Gearing up for a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
- 전 세계 ODA 규모의 정체 추세를 감안,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필요
 - ※ '19년 유엔사무총장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8년 총 ODA 규모는 1,490억불로 '17년보다 2.7% 감소하였으며, SDGs 달성을 위한 연간 재원은 2.5조불 소요 예상
 - 신흥공여국, 기업, 시민사회 등 개발협력 참여주체 확대 추세를 고려한 다양한 개발재원 발굴 모색

■ 정책과제

- ODA 규모 확대 지속 추진
 - ※ 2019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계기 “2030년까지 ODA 2배 확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2022년까지 신남방 지역 무상 ODA 2배 증액 ” 공약,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ODA/GNI 0.3% 달성' 등

-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에 ODA 예산 규모 및 확대 비중 제시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에 ODA 확대를 통한 SDGs 이행 지원 방안 및 ODA의 질적 제고 계획 포함

○ 민간 부문의 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재원 확대

- KOICA 민관협력사업 규모 확대
- 민간기업의 ODA 사업 참여 규제완화 등 체계적 정비 검토
- 혼합재원(blended finance)* 및 PPP 방식의 협력 확대 방안 마련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가 자원 조성을 위한 개발재원의 전략적 활용 방안으로, 통상 양허적 공공재원과 비양허적 민간·공공재원 또는 전문역량을 결합

② ODA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

■ 추진 배경 및 목적

- ODA 관련 종합전략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 문제 제기에 따라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 및 주관기관의 역할 강화 추진

■ 정책과제

- ODA 종합전략 수립 - 사업 기획·발굴 - 사업 심사·조정 - 전략·사업 평가 등 쏠단계 연계·환류를 통해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 효율성 제고
 -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는 전략 수립 및 이에 기반한 사업발굴
 -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조정 강화
 - 주관기관-국제개발협력추-예산당국 간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평가결과 환류 강화 등 실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 NGO, 협회, 재단 등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정부와 시민사회 간 상시적인 소통과 대화 창구 마련

K-SDGs	지표명	현 수치	목표
세부목표 17-1	(1) ODA/GNI 비율(%)	- 2016 •(개도국) 0.16 •(최빈개도국) 0.04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2) 공정한 다자간 무역시스템 촉진 지원

기재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① 개도국 교역 시스템 및 투자 증대 촉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서 글로벌 자유무역을 위한 공정한 무역시스템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출기반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지원함

■ 정책과제

- 개도국의 수출기반 강화 지원
 - 개도국의 수출강화 및 투자유치 촉진 프로그램·프로젝트 개발
- 개도국 수출지원 및 투자 유치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대
 - 국제개발금융기관간 협력 강화
 - 개도국의 주요 수출산업·중소기업 지원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7-2	(1) 개발도상국과의 교역비중	- 2015: 55.24%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규모	- 2017: 22.1%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17-3]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3)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강화 지원

외교부·기재부·과기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①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강화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은 과학기술혁신이 중요하므로 개도국의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전지구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지원을 확대함

■ 정책과제

- 개도국에 과학기술역량 강화와 기술 이전
 - 개도국 과학기술 관련 공무원 초청 연수 등으로 국내 과학기술을 전파 지원
 -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프로젝트 지원
 -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 과학기술 이전을 위한 지원 강화
 - 개도국의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과학기술 이전의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7-3	(1)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 데이터 필요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17-4]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4)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

외교부·기재부·국조실

①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ODA 추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도국이 일관성있고 책임성있는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발경험, 정책역량 강화사업을 확대함

■ 정책과제

-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ODA 기본계획 수립
 - SDGs 달성 지원을 우리 개발협력의 전략목표로 내재화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 계획(‘21~’25) 수립
- 주요 대외정책과의 조화
 -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관된 지역에 대한 ODA 확대 및 ODA 브랜드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상호간 성과 제고
- 공공행정 ODA 활성화
 - 국제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우리 행정제도 시스템에 대한 수원국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공행정 ODA 활성화 추진
- 정상외교 후속조치 등 전략적·신속한 사업 시행 지원
 - 정상외교시 ODA를 주요의제로 활용하고, 정상간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전략사업비 적극 활용
 - 신속추진 사업(Fast-Track)을 통해 수원국의 긴급 수요가 있는 사업 등 신속 시행

K-SDGs 세부목표 17-4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 데이터 필요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강화한다.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① 행정계획의 지속가능발전 영향 검토 강화

- (평가기준 개편) 기존의 사회·경제·환경 분야별 영향검토에서, 계획 관련 K-SDGs 목표·지표를 특정하여 영향을 검토하도록 기준 개편 검토
- (검토 실효성 강화) 지속가능발전 검토 결과에 대한 회신을 의무화하고, K-SDGs 수립으로 확장된 관리범위*를 반영하여 검토대상 계획 확대 검토
 - * 3차 기본계획시 4개 목표 14개 전략이, K-SDGs에서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로 확장

② 이행 관리 및 평가 내실화

- (관리강화)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표 특성에 따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지표의 타당성·대표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지표 특성	관리대책(안)
Tier1	기존 통계를 이용해 지표값 산출 가능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기적 통계 수집·관리
Tier2	기존 통계 이용 불가능	통계생성 방안 마련
Tier3	통계 산출방안 부재 / 불명확	통계산출방안 개발 / 지표 변경 검토

- (평가내실화) 지표에 대한 목표치 달성도 단순 평가를 벗어나, 중점 평가대상(중점 정책목표 포함)을 선정하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 (지표보완) 지표관리·평가 과정을 비롯하여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정책변경 등으로 보완 수요 발생시, 지속위 심의를 통해 수정·보완

③ 전문성 확보 및 인프라 구축

- (전담기관 지정) 지표 평가·관리 및 행정계획 검토 등 K-SDGs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 기관 지정 추진
- (K-SDGs DB 구축) 지표 평가 결과 및 현황 관리를 위해 DB 구축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7-5	(1) PCSD 원칙의 전략적·입법적 명시, SDG 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 조정기구 등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 2020: 0점	- 2030: 증가 - 2040: 증가
	(2)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	- 최초 산출 필요	- 2030: 증가 - 2040: 증가

[K-SDGs 세부목표 17-6]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6)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외교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① 다양한 협력기구를 선정하고 다자협력협의체 운영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세분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요구되므로 국제협력기구 및 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를 통해서 자원과 경험을 공유함

■ 정책과제

- 다양한 협력분야와 주체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선정
 - 세분화되고 다양한 참여주체의 특성에 맞는 협력기구 선정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 강화
 -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참여 독려
- 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 마련 및 참여
 - 다양한 라운드테이블 조직 및 적극적 참여
 - 국제협력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

K-SDGs 세부목표 17-6	지표명	현 수치	목표
	(1) 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대화 건수	-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K-SDGs 세부목표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7) 공공-민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외교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①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함

■ 정책과제

-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 시민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전문성·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강화
- 민간기업(business)의 개발협력 참여 확대
 - 민간기업의 기술력 등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 및 성공 사례 확산을 통해 개도국 시장개척·상생(경제·사회문제 해결) 도모
 - 민간기업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 개발도상국 민간부문 역량강화,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지속 추진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CSV)과 연계 가능한 ODA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이 개발 협력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
- 민간부문과의 소통확대
 - 기존 범정부 대화채널(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의 정례적 운영 및 시행기관 차원의 협의 채널과의 유기적 연계 추진
 -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관련 포럼·워크숍을 개최하여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인식제고 노력 경주

	지표명	현 수치	목표
K-SDGs 세부목표 17-7	(1)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약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 2015: 4건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2) ODA 민관협력 재원의 비율	- 2020: 2.7%	- 2030: 지속 증가 - 2040: 지속 증가

[참고 3] 목표별 세부목표 & 지표 변경 내용



★ K-SDGs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유지	(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2)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일부 수정 변경	(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 성별, 연령, 장애집단여부별 (2)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 소득보장예산=기초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근로장려금+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유지	(1) (신규)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2) (신규) 실업급여 순수득 대체율 (3) (신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가입유형별, 성별)	변경 변경 일부 수정	(1)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2) 고용보험 가입률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유지	(1) (신규)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지출항목별)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유지 삭제 신설	 (2)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유지	(1) (신규)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 사업(EITC, CTC)의 지출 규모 ※ EITC : 근로장려세제 CTC : 자녀장려세제	삭제 신설 신설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 긴급복지 예산 = 긴급복지지원금+ 일자리사업 (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K-SDGs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유지	(1)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 안정성 확보가구(%)	유지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유지	(1) 농가소득(천원)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유지 유지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유지	(1)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일부 수정	(1)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2)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	일부 수정	(2)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
			(3) 밭토양 산도(pH)	유지	
			(4) 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삭제	
			(5)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	삭제	
2-4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변경(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1) 종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 (천건)	유지	(1) 종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점수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변경(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2) (신규) 토종종자 확보 수	신설	(2)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유전자원 점수
			(1)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만톤)	일부 수정	(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1)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 K-SDGs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유지	(1) 심혈관계질환, 암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15~64세 인구)	일부 수정	(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30~70세 인구)
			(2) (신규) 당뇨병 조절률(%)	유지	
			(3) 성인 남성 흡연율(%) (WHO 담배규제기본 협약의 이행)	일부 수정	(3) 성인 흡연율
			(신규) 장애인 건강권 확보 (4)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삭제	
			(5)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유지(번호 변경)	(4)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유지	(1) 인구10만 명당 자살률(%)	유지	
			(2)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ℓ)	유지	
			(3) (신규)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삭제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유지	(1) 교통사고 사망자수(천명당)	유지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유지	(1) 결핵발생률(인구 10만명당)	일부 수정	(1) 인구 10만 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2) 연간 천명 당 말라리아 발병률(%)	일부 수정	(2) 인구 10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유지	(1)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	일부 수정	(1) 모성사망비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변경 (→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신생아사망률(%)	일부 수정	(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신설	(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2) (신규) 청소년·아동 비만 유병률(%)	유지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변경(→기후·환경오염물 질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1) (신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변경	(2) 인구가중 초미세먼지 (PM2.5) 농도
				신설	(1)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유지	(1) (신규) 치매안심센터 개소 (2) (신규)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3) (신규) 노인 일자리	변경 신설 유지 삭제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1) 영아사망률
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유지	(1) (신규) 공공 병상 수	일부 수정	(1)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수

★ K-SDGs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변경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1)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점) (2)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3) 취학률(%)	수정 유지 (단순지표명 수정) 신설	(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PISA 2~6수준 학생 비율) (3) 국가 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1) 취학률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유지	(1) (신규)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2) (신규)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3) (신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유지 유지 유지 유지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유지	(1) (신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2) (신규) 고등교육 이수율(%) (3) (신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	유지 (번호 변경) 유지 삭제 신설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1) 고등교육 이수율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변경(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1) 평생학습 참여율(%)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유지 유지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유지	(1) 모든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2) 취학률(%) (3) 학업중단율(%)	유지 삭제 삭제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유지	(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PIAAC) ※ PIAAC (국제 성인역량조사)	유지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변경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청소년·성인 문해율(%)	일부 변경	(2) 성인 문해율
			(1)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	신설	(1)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2)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변경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 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3)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명)	수정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수정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유지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2) 학교 내진보강률(%)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 Wee : We Education + We Emotion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상담 역할)	유지 유지 유지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유지	(1)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수정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유지	(1)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2)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3)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신설 유지 유지 삭제 유지	(1) 교사 1인당 학생 수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 K-SDGs 목표 5 『성평등 보장』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유지	(1)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1)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삭제 (5-7로 이동) 신설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유지	(1)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유지 유지	 (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유지	(1)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	변경	(1)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5-4	정치·경제·공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유지	(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유지 유지	(3)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5-5	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변경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 출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변경	(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변경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1) (신규) 공학계 여학생 비율	수정	(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유지	(1)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	삭제	(2)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의견 수용률

★ K-SDGs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유지	(1) (신규) 전국 상수도 보급률(%) (2) (신규)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변경	(1) 수돗물 만족도 (2)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6-2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경(→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규)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유지 신설	(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6-3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변경(→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1) (신규)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2) (신규) 수질등급달성률(%) ※ BOD 기준 (3) (신규)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종) (4) (신규)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삭제 신설 일부 수정 일부 수정 삭제	(1) 유역별 물순환율 (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 ※ TOC, TP 기준 (3)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변경(→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 (신규) 상수도 누수율(%) (2) (신규) 물공급 안전율(%) (3) (신규)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ℓ/일/인)	유지 변경 삭제	(2) 지방상수도 지급률
6-5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삭제	(1) (신규) 목표수질 달성률(%) ※ 목표수질 달성지점/ 목표수질 설정지점	신설 삭제	(3)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변경(6-5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1) 생태하천 복원율(%) ※ 복원구간/복원목표 구간 (2) (신규) 수질 ' 좋음' 등급 비율(%)	삭제 변경 신설 신설	(1)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2) 어류건강성 평가지수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유지 (번호 변경 6-6)	(1) 전체 협의체 중 민간단체 참여 협의체 비율(%)	신설 변경 신설	(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 (2)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 K-SDGs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유지	(1)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만호)	유지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변경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일부수정	(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수정	(2)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중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유지	(1) (신규) 국가에너지효율지표 (Toe/백만원)	유지	
			(2) (신규) 건물에너지효율지표 (Toe/㎡·년)	유지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유지	(1) (신규) 친환경차 확대 수 (만대)	유지	
			(2) (신규) 친환경버스 확대 수	변경	(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 K-SDGs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유지	(1)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유지	(1)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유지	(1) (신규) 인구집단별 고용률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유지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삭제	(1) 물질 발자국	신설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2) 국내 자원소비량(백만톤)	삭제	
8-3	신설(8-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신설		신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수
				신설	(2) 창업기업 수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유지	(1) 여성고용률(%)	삭제	
			(2) 남녀 임금격차(%) (남성 대비 여성급여)	유지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변경(이주노동자, 연소근로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1) (신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비율 (2) (신규)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삭제 삭제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유지	(1) (신규) 사고사망만인율(%)	유지 신설	(1)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2)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8-7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삭제	(1)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기여율(%) (2) 전체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	삭제 삭제	(2) 전체재해율

★ K-SDGs 목표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환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9-1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변경(대다수 국민에게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도로 보급률(km/천명) ※ 도로연장km/인구천명 (2) (신규)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 (3) (신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유지 삭제 변경	 (2)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유지	(1)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1) (신규)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유지 신설 신설 삭제	 (2)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3) 산업집중도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변경(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신설 신설	(1)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역량부문 10개지표 점수 (2) 세계 혁신지수(GII)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유지	(1) GDP 대비 연구개발비	유지 신설	(2) 경제활동 천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유지	(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 (신규) 국내 자원생산성 (GDP/DMC), 자원강도 (DMC/GDP)	유지 삭제 신설	(2) 사업장배출시설 폐기물 재활용 비율

★ K-SDGs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유지	(1)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 ※ 가구소득/ \sqrt{n} (n : 가구원수) (2) (신규) 소득격차비율(%)	변경	(1) 전체 인구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비율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회·경제· 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유지	(1) (신규) 소득 5분위 배율 (2) 인구집단별 빈곤율(%) (노인빈곤율) (3) (신규)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유지 삭제 유지	(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유지	(1) (신규) 인구집단별 고용률(%) (55세 이상 고용률) (2)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일부 수정 변경	(1) 인구집단별 고용률 (2) 장애인 의무고용률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유지	(1) (신규) GDP 대비 가계소득	변경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변경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상호문화 이해 환경 조성한다.)	(1) (신규)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변경	(1)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2) (신규)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삭제	
				신설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신설	(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신설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시간
				신설	

★ K-SDGs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변경(적절하고 부담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1)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만호)	유지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2) (신규) 주거급여 수급가구 (만호) 및 재정(조원)	일부 수정	(3)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재정 집행액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유지	(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유지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 (신규)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률(%) \times (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률 등)	일부 수정	(2) 저상버스 보급률
			(3) (신규)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분담률(%)	유지	(3) 자전거 수단분담률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유지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m/인))	삭제	
			(1) (신규)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유지	
			(2) (신규)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유지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유지	(1)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2) 세계문화유산 보존, 보호 예산액	유지 일부 수정	(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유지	(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명) (2) (신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3) (신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에 근거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일부 수정 유지 삭제	(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인구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유지	(1) 미세먼지 나쁨일수 (2)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GDP 10억원)	유지 일부 수정 신설	(3)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2)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유지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m ²) (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3) 보도면적 비율 (4)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유지 유지 삭제 삭제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계,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삭제	(1) (신규) 도·시·군기본 계획에 시·군 환경보전 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개)	삭제	

★ K-SDGs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유지	(1) (신규)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건) (2) (신규)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유지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유지	(1) 물질발자국 (2) 국내 자원 소비량(백만톤)	변경 유지	(2) 물질흐름통계(MFA) 구축 대상 자원수 (1)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12-3	식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변경(→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1) 식품 손실 지표 (2) (신규) 식품 폐기물 지표	일부 수정 변경	(1) 식품 손실 지수 (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유지	(1) (신규) 유해성 정보 확보 물질(개) (2) (신규)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개) (3)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kg/인·일)	일부 수정 유지 유지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유지	(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2) (신규)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유지 유지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유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	일부 수정 신설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2) 녹색경영 참여 기업수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유지	(1)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2) (신규)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건)	유지 유지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유지	(1) (신규)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2) (신규)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유지 유지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변경(→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1) (신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2) (신규)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유지 변경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변경(→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1) (신규) 탄소·생태발자국	삭제	(1)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수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유지	(1)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유지	

★ K-SDGs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환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유지	(1) (신규)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1)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 (신규) 산업계·지자체 적응대책수립·이행지원 건수(건)	변경 삭제 삭제	(1) 방재시설 집행 비율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변경(→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신규)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삭제 신설 신설 신설	(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2) 기후·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지자체 비율 (3)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지자체 비율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변경(→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할을 강화한다.)	(1) (신규)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	삭제 신설 신설	(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유지	(1) (신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MtCO2)	유지	

★ K-SDGs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4-1	육상과 해양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유지	(1) (신규)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질 기준달성률(%) (2) (신규) 해양쓰레기 수거량 (톤)	유지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유지	(1) (신규) 바다숲 조성 누적 면적(ha) (2) (신규) 갯벌복원면적(k㎡)	유지 (번호조정) 유지 (번호조정)	(1) 갯벌복원면적 (2)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유지	(1)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 (8.0~8.2) 유지	일부 수정	(1) 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 (8.0~8.2) 유지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유지	(1)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2) TAC 대상 어종수(어종) (3) (신규) 감축어선 수(건)	삭제 변경 삭제	(1)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비율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유지	(1)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개)	변경	(1)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유지	(1) (신규) 어가 소득(백만원) (2) (신규) 어가 소득/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삭제 유지 (번호조정)	(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유지	(1) (신규)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유지 신설 신설	(2)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 (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 분야 무상원조 규모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유지	(1) 조건불리수산물직불제 수급률(%) ※ 조건불리지역 : 어업 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2) 조건불리수산물직불제 지급 단가(만원)	삭제 삭제 삭제	(1)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4-9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신설		신설	(1) 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진행률

★ K-SDGs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유지	(1)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3) (신규) 산녹색보호지수	유지 유지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유지	(1)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간)	유지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유지	(1)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유지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변경(→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2) (신규)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일부 수정 유지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지정 수 및 개정 수)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신설	(3) 산악지역녹색피복지수 (Mountain Green Cover Index)
				신설	(4) 종보호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신설	(5)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삭제	(1) ABSCH 국가 정보 등록 및 갱신 건수(건) ※ ABSCH :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	삭제	
15-6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변경(→15-5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 접촉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밀거래를 근절한다.)	(1)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일부 수정 신설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2) 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 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 확립된 접촉점 수의 비율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유지(번호 조정 15-6)	(1)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 (2) 돌발/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ha)	유지 일부 수정	(2)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15-8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유지(번호 조정 15-7)	(1) (신규)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ha) (2) (신규) 도심/생활권 복원 (ha)	유지 유지	

★ K-SDGs 목표 16 「인권·정의·평화」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유지	(1) 5대 범죄 검거율(%)(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변경	(1) 범죄율 (단위: 건): 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2) 학교폭력 피해 경험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유지	(1) 아동학대 발견율(%)	변경	(1)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수 (2) 실종아동 접수 및 미발견 건수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변경(→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1)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	삭제	(1) 법률구조건수 증감률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 자산의 환수와 반환 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유지	(1)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삭제	(1) 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 평균액 (2) 미약범죄건수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유지	(1) 국가청렴지수	변경	(1) 부패경험지수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유지	(1)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 만족도 평가결과	변경	(1) 정부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변경(→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1)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	변경	(1)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유지	(1)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	변경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유지	(1)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삭제	(1)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2) 기본적 자유 침해 경험 비율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유지	(1) 폭력, 테러 및 범죄퇴치 관련 개도국 공공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	변경	(1)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비중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유지	(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여부	일부 수정	(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2)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	삭제	
16-12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변경(→16-12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사이버폭력 건수	신설	(2) 차별 경험 비율
			(2)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이행	변경	(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대비 검거율
16-13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유지	지표 없음	신설	(2) 디지털정보격차 감소율

★ K-SDGs 목표 17 『지구촌 협력 확대』 변경 내용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존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7-1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	변경(→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1) GNI 대비 ODA 비율	유지	(1) GNI 대비 ODA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유지	(1)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2)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유지 유지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유지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변경	(1)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변경(→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변경	(1)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유지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 조정간수(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	변경	(1) PCSD 원칙의 전략적·입법적 명시, SDG 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기구 등 정책 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번호	세부목표	유지/변경(변경사항)/ 신설/삭제	기준 지표	유지/변경/일부 수정/신설/삭제	새로운 지표명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유지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2)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결과	변경	(2)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 (1) 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대화 건수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유지	(1) SDGs 이행을 위한 민간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의 건수	유지	(2) ODA 민간협력 재원의 비율